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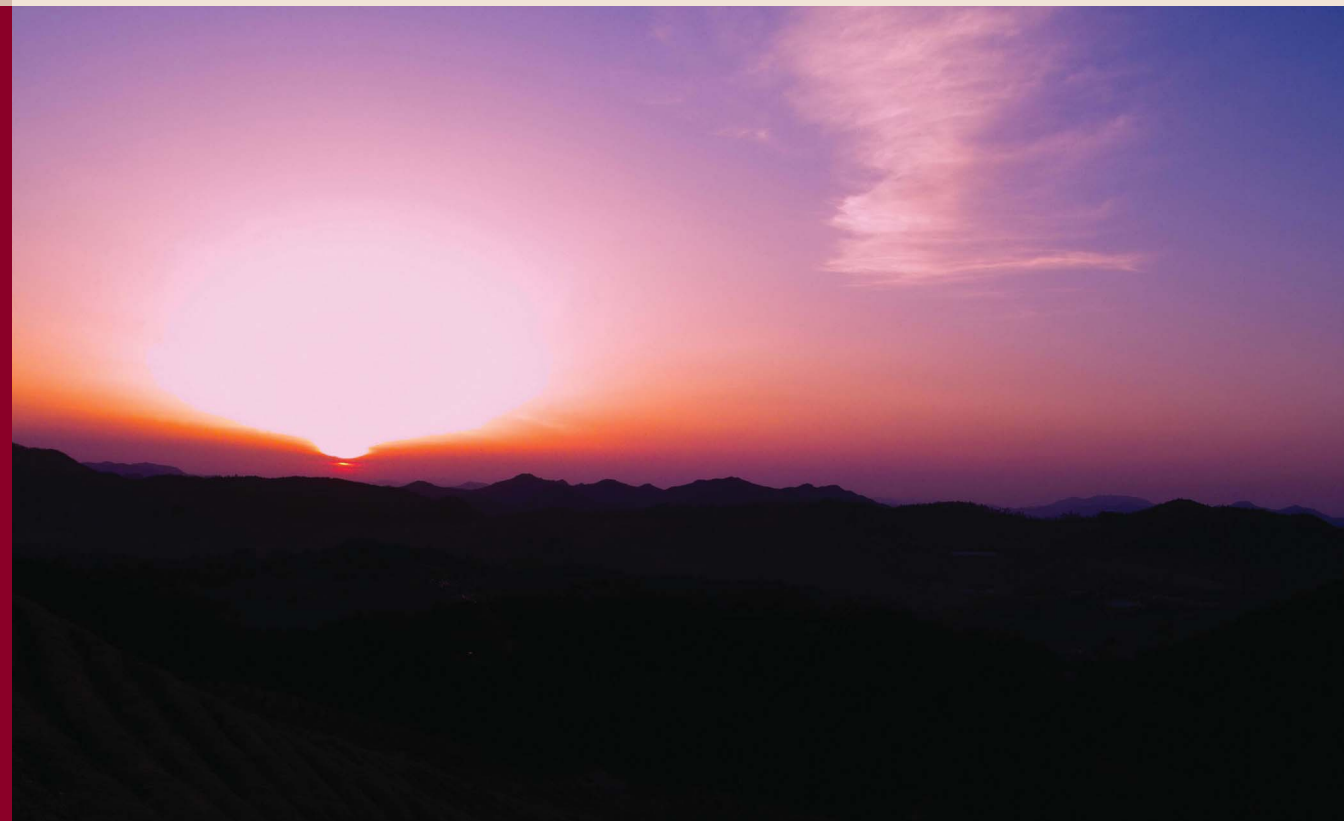
충남의 밝은 미래 충남발전연구원이 열어 갑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발전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열린충남

ISSN 1226-637X



통권 3 호 2005

THE CHUNGNAM
REVIEW

21세기 문화가 지역경쟁력이다

21세기 충남문화의 비전과 전략

충남지역 쌀 브랜드화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1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열린충남

www.cdi.re.kr 통권 33호 2006. 1

2006년 1월 1일 발행 | 발행인 김용웅 | 편집위원장 김정연 | 편집위원 송두범, 성태규, 이상진, 이인배, 이충훈, 최병학 |
편집 간사 이길구 | 발행처 충남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138-42 | 전화 042-820-1123 |
FAX 042-824-7817 | 디자인·인쇄 아름다운디자인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283-51(042-672-2161)



2 권두언 21세기는 문화가 지역경쟁력이다 / 김용웅

특집 21세기 충남문화의 비전과 전략

- 4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 / 이해준
14 국토의 중심, 충남의 지방문화 창조 / 이인배
42 충청남도 문화산업 발전방안 / 심상민

충남논단

- 70 충남의 민선자치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 / 김용웅
86 고령화시대 노인 의식 및 주거특성에 관한 연구 / 박철희
98 충남지역 쌀 브랜드화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권영현, 이충훈, 구승모

지상포럼

- 128 “충남지역 핵심전략산업의 인력수급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156 “충남지역 미래인재 육성방안” 학술 심포지움



충남의 도시

- 169 하늘 빛, 땅 빛, 물 빛 모두 아름다운 靑陽 / 윤갑식

생태영농 탐방

- 178 생태산촌 시범마을 - 으랏차차! 명달리 / 유병연

해외보고서

- 182 일본의 중심상점가 활성화 / 임준홍

오피니언

- 190 행정도시 성공요건과 과제 / 김용웅

충남소식

- 194 도정 소식
201 연구원 소식



the Chungnam Review

C o n t e n t s

2009 January

21세기는 문화가 지역경쟁력이다

金容雄 |
충남발전연구원장



자연에 순응하기만 하던 인류가 자연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사고를 도입하여 꾸러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문화(culture)는 생겨났다. 문화는 인류가 여유로와진 삶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창출해 내고, 삶의 의지와 성취에 대한 기쁨을 소리나 형상으로 표현하는 과정과 결과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룬 문화적 유산을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풍요로운 미래를 이끄는 키워드로 삼고 자신만의 문화 재발견과 모습 갖추는 데 힘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화에 대한 관심은 산업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세계화로 인하여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은 문화를 산업과 경제발전의 접목시키려는 노력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전통적인 산업화 전략 패러다임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동안 국가나 지역발전은 산업과 경제의 성장을 의미했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는 산업생산의 확대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데 치중했다. 이 같은 산업성장 패러다임 하에서는 문화란 여유 있고 한가로운 계층이 향유하는 소비부문의 하나로 치부돼 왔다. 그러나 대량생산의 산업화 패러다임이 붕괴하고 정보와 지식기반경제가 대두되면서 경제와 산업발전에 있어 문화에 숨겨진 내재적 가치가 새로이 발견되면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첫째, 문화의 상품화를 들 수 있다. 예술과 공연으로서 문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독특한 생활전통과 생산방식, 관습과 행태까지도 상품으로 포장하여 진열대에 올려놓는 시대가 됐다. 이제 문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미 2004년 현재 우리나라 문화산업 국내매출 규모는 49조원, 해외수출은 7억불에 달하고 2010년에는 국내매출은 두 배가 넘는 94조원, 해외수출은 10배에 가까운 6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관광·레저산업을 전략

산업화하여 집중적인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된 문화·관광산업의 규모는 전체 지역개발 신규투자 20조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문화야말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핵심적 결정 요인이다. 후기 산업사회에 도달하면서 획일화된 상품과 지역 이미지에 싫증이 난 대중은 보다 개성적이고 원류적인 본질을 찾게 되었다.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는 감성적 차별성은 이러한 대중의 욕구(need)를 충족 시켜주기에 충분하다. 지역의 전통과 생활과 예술을 어우르는 문화야말로 지역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문화는 지역의 관광여가 수요를 촉진하고, 다양한 지역산물에 대한 인식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무형의 자산이 될 수 있다. 부존자원이 척박한 낙후지역이 다양한 공연 및 예술품전시장과 문화 이벤트를 통하여 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인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

셋째, 지역의 문화활동의 진흥과 참여기회 확대는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을 육성하는 새로운 인프라의 역할을 한다. 첨단기술과 지식산업의 종사자들은 주거지 선택에 있어 경제적 요인에만 얽매이기 보다는 문화적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화 시대에는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모여들었으나 지식산업 사회에서는 전문 인력이 집중된 곳으로 기업 즉, 일자리가 모여드는 경향이 있다. 이제 지역 경쟁력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엘리트 계층을 얼마만큼 보유하고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정 지역에서 앞다투어 쾌적한 자연 및 주거환경의 마련과 문화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세계적인 지역혁신의 허브는 예외 없이 문화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와 지역에 형성되어 있음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적 삶의 방식을 지닌 충남은 무궁한 문화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충남지역이 지닌 잠재적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특색 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한다.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

이해준¹⁾ | 공주대학교 사학과

나날이 증대되어 가는 문화 수요층의 요구는 정보화와 함께 더욱 다양해지고, 고급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과거와 같은 새로운 자료발굴이나 그에 대한 지적 우월감만으로는 지역문화 연구의 의의가 충족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대상 내용도 과거와 같은 전통문화나 문화재 중심에서 이제는 생활문화 전반으로, 그리고 현재적 가치와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문화예술의 향유층도 과거와 같은 특수 계층 독점 경향에서 점차 일반화·교양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차별은 점차 의미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문화행정·문화정책의 기본 방향도 보다 광범한 시민, 일반교양인 중심으로, 그리고 교육과 가치교육보다는 '체험과 참여'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변환이 모색되어가고 있다. 이는 가치 측면에서도 전통·과거 지향에서 현재·미래적 관점의 문화가치로 변환됨을 의미한다.

지역의 문화현장에서 문화인들이 지녔던 권위·지적 과시는 시민 참여의 확대과정에서 점차 감소되고, "우리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식의 일방 논의도 이제는 시효가 지났다. 교육과 덕목 중시의 풍조도 체험과 비판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가하면 충효와 예절교육, 한문강좌로 문화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안일함과 퇴영성, 경직성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는 전통문화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수요자 요구와 수준 파악이 없고, 교육기법도 무시되어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1) 공주사대, 서울대학원 졸업, 목포대 교수('81-'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90) 공주대 박물관장('95-'97), 한국역사민속학회장('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충남역사문화연구소장('01-'04) 역임 [현재] 공주대 교수, 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부회장

'지역 전통문화', 그 가치와 정체성

장맛만 보아도 그 집의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했듯이 사람마다, 집집마다 각기 다른 특성과 내용이 있다. 재능도 각각이려니와, 스스로 강조하는 자신의 자랑거리들도 모두 다르다. 더욱 신기한 것은 전혀 자랑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도, 고집스럽게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마도 지역사나 지역문화에서 기대하는 기본적 당위성과 요구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해 본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와 지역 문화란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었던 특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문화는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역사 진행과정에서 선택하여 자기화한 '가치관'인 동시에 '생명력'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문화는 지역민들로서는 자신들의 본전이고, 정서적인 고향이기도 하다. 만약에 현재까지 '우리 곁에 남아 있는 문화 모습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정서와 분위기에 필적한다'면 바로 그것이 지역의 전통문화, 전승문화라고 보면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거나 특징을 부각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각 시대, 각 지역의 문화는 그것을 과연 어떠한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치는 크게도 작게도 보이게 되어 있다. 나아가 이를 '가꾸고 다듬는' 정성에 의해 본연의 가치가 되살아 날 수도, 반대로 사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가치와 의미들을 충남지역민들 스스로 연구하고 가꾸어 챙기지 않으면, 남들은 아예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보고 관심조차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해서 과거 충남지역에 살았던 선인들이 전혀 가치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결국은 그 후예인 현대의 우리들 역시 별 볼일 없는 무의미한 존재일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충남지역민들의 자기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존심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 문화정책에서 바랄 것

21세기는 신문화, 신지식, 그리고 정신문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문화와 환경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어서 충남의 문화 환경가치, 정신사적 가치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을 올바로 계승하고 활용하기 위한 문화정책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독자적이고 특색 있는 문화정책을 가지고 지방문화가 관리, 운영, 발전된다기보다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제한적이고 정치적인 '문화정책 구호'에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자율과 분권

의 개념에 입각한 지방문화 발전의 자체 노력과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의 문화정책을 이야기하여 할 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문제는

- 과연 누가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가?
- 전문연구자는 어떠한 형태로 참여, 동원, 의사 전달하나?
- 이상과 현실(순위, 예산, 방법)의 갭은 어떻게 해소할까?
- 행정이 할 일, 연구자(연구기관)가 할 일, 시민이 할 일이 구분되나?

등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는 거의 제대로 점검되었던 것 같지 않다. 아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정책을 구체화한 청사진(『문화예술 중장기계획』)이 마련된 적이 없이 임기응변이 대부분이고, 전문가의 의견 수용 채널이나 지역민 의식 대변도 충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경쟁력이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남의 것 베끼기 식 구호와 사업이 결정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결정의 밑바탕이 되어야 할 기초적인 지역문화자원의 조사와 정리에 매우 소극적이고 투자도 적다는 사실이다. 필요성을 잘 모르거나 사실 관계의 오해가 몇몇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객관화되는 것도 결국은 기초자료의 조사가 철저하지 못한 때문인데, 이 점을 연구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야 할 듯 싶다. 물론 이 경우도 분야 이기주의나 오랜 연구결과로 완벽한 정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도 일단은 기초자료의 정리와 조사과정 다음에나 할 일 이 아닌가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느끼는 일반적 문화정책에서의 문제점은 교육과 홍보, 문화의식의 저변확대에 대한 노력을 무시, 방기하는 점이다. 문화의식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노력의 소산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당연히 이를 학교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라 치부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색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저열한 문화경쟁력은 과거 문화교육의 미흡에서 야기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여문화와 수요층의 기대부응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한 어느 지역이나 크게 보아서 대동소이하다. 물론 한국국학진흥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북의 예라든가, 문화재단을 설립 지원하는 경기도의 경우, 공공문화기관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의 경우 같은 특별한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충청남도

도 전통문화, 역사에 관련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선진적으로 평가된다. 충남역사문화원의 활성화와 충남역사박물관의 전시계획은 그런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 마인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나날이 증대되어 가는 문화 수요층의 요구는 정보화와 함께 더욱 다양해지고, 고급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와 같은 새로운 자료발굴이나, 지적 우월감만으로는 지역문화 연구의미가 충족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대상 내용이 과거와 같은 전통문화나 문화재 중심에서 이제는 생활문화 전반으로, 그리고 현재적 가치와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이는 가치 측면에서도 전통·과거지향에서 현재·미래적 관점의 문화가치로 변환됨을 의미한다.

과거 지역문화연구자들이 지녔던 권위·보수 성향에 대하여 시민의 참여 및 자생적 문화단체들의 비평도 적지 않고, 전제된 것처럼 교육과 덕목 중시의 풍조도 체험과 비판으로 대체되어 이제는 객관과 명분, 시민의 동조가 없으면 그 先導力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이들 문화수요층인 지역민들이 원하고 요망하는 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그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초·중등학생의 교육적 필요라든가, 일반시민의 교양적 수준의 자료, 그런가하면 체험이나 이해이나의 문제 등으로 구체적 계층별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종의 지역별 문화통계(지표)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화인력의 연계와 상생이 관건

미래의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앞으로 ① 지역문화의 先導 기능을 담당할 주도집단이 형성될 것과 ② 그 방향을 확실하고 가능하게 할 자료뱅크와 씽크 탱크 기능이 점검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주인도 없고, 철학도 없이 방황하는 지역문화 활동, 분산·소모·중복적 문화활동을 총괄·조정·선도하는 협의기구가 분명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명분과 기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정선되고 객관적인 지역문화자료를 충실히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자료 뱅크), 문화의식을 선도하고 변화에 대응하려는 적극적 인식과 가용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씽크 탱크). 그럴 때 지역문화 특성화는 구체화될 것이고, 이를 향유하고 지원하는 지역민들이 많아질 것이며, 이에 지역문화의 역량도 당연히 증대되리라 기대된다.

사실 '過去'의 지역문화와 '現在'의 지역문화는 천양지차이다. 여러 한계들도 없지 않아 비평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정적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다면 현재의 조건 부족을 탓하는 지역문화 연구 제3세대 젊은 인력들에게서, 1세대나 2세대가 느꼈던 '관심과 비평에 대한 그

리움(?)은 전혀 이해도 되지 않을 듯싶다. 그만큼 발전을 해온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지역문화연구는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것에 더하여 특성별, 내용별, 매체별, 수요층별로 다양한 소프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인접분야의 정보와 인력, 아이디어를 배워야만 한다. 지역특성의 종합적 해석을 위하여 타 학문분야의 도움도 받아야 하지만, 정보화·축제·관광·교육·창작예술 등등 자원활용 매체와 관련된 기초지식도 동원하여야 한다. 필자는 지역학이 바로 학제적 연구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구현할 수 있는 장이라고 강조하는 처지이지만, 이를 통하여 지역문화 연구와 자원 활성화는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지역문화 운동이 "바람직한 지역공동체 재 복원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나는 우리의 문화교육, 지역화 교육의 무책임과 역할 방기, 그리고 무 방향에 대하여 우려를 하게 된다. 사실 우리의 교육과 의식은 일제의 식민교육과 서구적 가치관의 무분별한 혼입 속에서 민족교육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매우 부족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지향할 문화교육의 큰 모습은, 나와 우리, 그리고 남의 문화를 비교하고 상호존중하며 이해하는 의식,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높은 인간적 이상을 지향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필자와 같이 한국문화나 전통문화를 정리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나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의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가치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과거 우리의 문화교육은 공동체적 문화 기반 속에서 학교 교육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즉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전해지는 문화교육도 있었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끌어안고 가르치는 가정교육도 있었다. 며느리는 시집의 새로운 가풍을 전수 받기 위한 모진 시련을 감내하여야 했고, 농사꾼들은 농사꾼대로 또 나무꾼도 그들 나름의 문화 전수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현대와는 달리 전통사회에서는 공동체 문화기반 위에서 다양한 문화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효용성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서구식의 학교교육이 일반화되면서 그러한 전통적 문화교육의 모습은 점차 의미를 상실하여 갔고, 의미와 가치도 평가절하 되어 학교교육과 맞설 수 없는 무용지물처럼 되었다. 과연 이러한 과정이 올바른 것이고, 당연한 것일까? 현재로서는 제도권 내의 학교교육 보다 학교 밖의 문화교육이 오히려 더 싱싱하고 씩씩해야 할 듯싶다. 좀 격한 말이지만 그러다 보면 생각 있는 학교 교육이 결눈질을 하거나 참을 수 없어 제 길을 걸어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여야 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철저한 문화콘텐츠의 수집과 정리

21세기가 문화 경쟁시대이며, 바야흐로 그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방법으로 문화가 활용되는 시대가 강조된다. 그런가하면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도 유행처럼 우리 주변을 맴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의식이 바로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고, 자신을 지키는 길'로서 가치가 있는 대상임을 철저히 하고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지역문화 특성화의 문제점은 ① 기초자료(컨텐츠)의 정리 노력 부족, ② 육성 아이템 선정과정의 객관성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 유기적 효용성과 경쟁력 확보 등등으로 지적될 수가 있다. 그리하여 이들 지역 특성화 사업들이

- ① 지역 정체성과 경쟁력의 기준에서 철저히 검증되었나?
- ② 그리고 방향이 과연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나?
- ③ 나아가 지역민들의 요구와 인식에 토대한 것인가?

등등에 적절한 답을 하도록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지역문화를 자원으로 활용, 재생하려면 먼저 지역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기초 데이터(컨텐츠)의 분석과정에서 지역문화의 특수한 형성 조건과 배경, 지역성이 규명되고 설명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그에 토대한 문화의 발전비전도, 복원도, 미래설계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정리의 대상들에 대한 마인드도 달라져야 한다. 문화재 이외에 지역 인물이나 정신, 학문, 민속, 인심과 같은 것은 말할 나위가 없고, 특산물, 토속음식, 자연경관과 레저(전원, 휴양림, 백사장, 낚시터 등) 같은 자원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형 자료(유적·유물·문서 등) 이외에 최근의 문학작품, 논문, 신문기사 등까지 포괄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적 특성이 강한 생활문화와 민속 같은 분야에 대한 색다른 의식, 특히 현재를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현대문화사 같은 광범한 문화 소재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가 철저히 수집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물찾기식의 문화소재 발굴이나, 정책 개발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 콘텐츠 발굴·정리는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의 기초작업으로 지역문화의 차별성, 경쟁성, 자원화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이며, 후속되는 문화자원 활용의 방향 결정, 정책대안의 근거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이 소홀하면 지역문화의 특성, 경쟁력의 수준도 함께 저하되며, 문화자원과 활용에서 왕왕 본질과 외형이 서로 상충·갈등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그 까닭이다. 또 지역 정체성 확인보다는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나 외국의 사례

를 엮으면서 포장하는 '무차별과 획일화', '아이템 선점 경쟁', '프로그램 베끼기' 등과 같은 경향도 생기게 된다. 부연한다면 ① 문화콘텐츠 발굴에 소홀 ② 자원화 가능한 지역문화 형상화 부진 ③ 자기 식의 문화자원 활용 방향 없고 결국 타 지역 모방 ④ 경쟁력 감소, 지역민의 자긍심 저하라는 악순환은 그래서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과거처럼 산발·분산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집중성과 종합성", "아이템 차별화"로 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성화·차별화" 된 소프트웨어 개발

기초자료의 정리 문제와 아울러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거의 대부분의 문화정책들이 하드웨어 중심이라는 점이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도 요즘은 부족하여 콘텐츠가 더 중시되는 현상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매우 시급히 점검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지역문화 특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각 지역 문화원은 역사적, 지리적, 사회경제적 배경이 모두 다르다. 그리고 그것들이 문화로 남아 전해지는 것이다. 외형이 비슷하다고 해서 동일한 것이 결코 아니며 지역적 특성과 냄새가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의 문화환경도 지역마다 다르다. 이를 무시한 획일화는 실패의 가능성이 그만큼 크며, 아마도 "특성화"가 가능하다면 바로 이러한 지역만의 독특한 모습이 최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해당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고, 집중성이 있는" 콘텐츠로 특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써 구현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아이디어 경쟁일 것인데, 여기에서는 첫째가 해당 지역의 문화성격을 훼손하거나 굴절시키지 않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수요자층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계획이 마련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문화가 H/W보다 S/W·C/W가 중심이라는 인식은 거의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 정책이나 행정, 계획분야에서는 아직도 그에 대한 기초적 노력이나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콘텐츠 정리 없는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나 정책이 앞서서 이루어졌고, 이를 활용하고 응용할 소프트웨어 개발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아울러 콘텐츠 수집·정리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간의 상호 연계성, 혹은 서로의 기능과 역할 인정의 측면에서 편차가 심하다. 계획·설계자가 어떤 성향이나에 따라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는 무시되기도 하고, 일관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삼자는 결코 서로 별개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일 때 특성을 살릴 수 있고, 경쟁력이 있게 된다는 점이다. 수적

으로 제한되고, 객관성을 잃은 지역문화 콘텐츠가 임기응변적으로 활용 매니아들에게 주어졌을 때, 지역 정체성을 왜곡·굴절하거나 차별성 없는 모습으로 구체화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한편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수요층의 요구와 기대가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현실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다. 범위, 대상, 수요층의 수준과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개발은 실패 확률이 그만큼 높다. 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그에 적합한 수준별·목적별 차별화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억지로 먹인다'가 아니라 선택된 수요층의 기호와 흥미, 목적에 따라 '골라서 먹게 하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즉 같은 자원이라도 유형별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① 교육형 ② 관람형 ③ 체험형 ④ 레저형 ⑤ 복합형 등으로 구분되며, 강한 문화특성과 내용성이 강조되어 "해당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고, 집중성이 있는" 콘텐츠로 특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그 매체와 채널은 다변화되어야 한다. 남·녀, 노·소, 내국인·외국인, 학생·전문가 등등 수요계층의 수준이나 기호,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정보화라거나, 축제·이벤트화, 교육프로그램화, 문화상품 개발, 창작예술로 연계 등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21세기 지역문화와 '살아있는 충남문화'

지역문화는 각기 독특한 지리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면서 발전하여 왔고, 그에 따른 문화상들을 종합적 결과물로써 간직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통적 생활문화를 정리함에 있어서 지역문화는 '문화의 기본 단위'이자, '실질적 생활문화로서 다양성의 구현장'이었다. 이 다양한 사회관계가 구조화되는 경제·사회·문화적 지식들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경쟁력의 기반이고 지식이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전혀 상반되는 화두가 한 곳에서 만나相生하고 갈등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동안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이 바로 그러한 현실을 적절히 대변한 구호였다.

이제 그 문화적 특성과 이미지가 바로 상품이 되고 경쟁력이 되며, 살아남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가 가진 본질적인 모습은 항상 아주 쉽고, 가까운 곳에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인 것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와 경쟁하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정서와 문화를 되살려 "특성화", "차별화" "상품화"하여야 소위 말하는 경쟁력도 생기는 것이다.

특히나 인간과 환경, 지식과 정보, 정신과 문화의 통합이 신세기의 주요 화두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01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

마 없을 듯싶다. 충남문화의 저변에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푸른 충남' '한국 속의 작은 한국' '한국문화의 원형이 살아있는 곳' '알려지지 않은 또다른 한국' 등등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문화자원들이 다양하게 남아 있다. 이를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자원화 하기만 한다면 그 경쟁력은 실로 대단할 것이다.

이해준 지역사관련 발표 논저

- 1987 「향토사연구의 현안과제」 『한국학논총』 12,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 1997 「지역박물관과 지역사자료 정리」 『박물관학연구』 2집, 대전보건대 박물관학연구소
- 1997 「박물관의 현황과 문화교육정책」 『교육철학』 제8집, 교육철학회
- 1997 「지역사연구의 과제와 방향」 『웅진문화』 10집, 공주향토문화연구회
- 1998 「백제문화권의 지역축제를 통한 문화관광상품 개발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 공동연구)
- 1998 「한국지역문화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98세계문화엑스포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 1998 「지역문화 연구의 과제와 자료활용 방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집, 역사문화학회
- 1998 「지역교재 편찬의 현황과 과제」 『향토문화』 10집, 한국향토사 전국협의회
- 1998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자원의 연계방안」 『백제문화』 27집, 백제문화연구소
- 1998 「향토사교육의 동향과 과제」 『역사교육』 67집, 역사교육연구회
- 2001 「2001 지역문화 현안과 대안」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4인 공동)
- 2001 「지역사연구의 이론과 체계사론」 『한국사론』 32, 국사편찬위원회
- 2001 「지역기록물 관리기관 설립과 운영방향」 『호서사학』 30, 호서사학회
- 2001 「근 현대 지방사료 수집의 방향과 과제」 『웅진문화』 14집, 공주향토문화연구회
- 2001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 2002 「지역문화 콘텐츠·소프트웨어개발과 문화관광」 한국관광학회 52차 국제학술발표논문집
- 2003 「마을사 조사와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연구』, 안동대민속학연구소

국토의 중심, 충남의 지방문화 창조

이인배 | 충남발전연구원 경제관광 연구부장

I. 지방문화시대의 전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지금 세계 각국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 수단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으며, 문화를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여 문화의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류사적 변화의 조류에 발맞추어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문화의 가치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이 동시에 진작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화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해 문화산업 진흥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의 기간 산업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한 정부는 '첨단 영상 산업과 출판 산업의 중점 육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정하고 통합 방송법 제정 등 선진 방송 체계 구축과 고부가가치의 문화 상품화, 문화 산업 재원 조성을 주요 사업 추진 대상으로 삼아 문화산업 정책을 펴왔다(문화관광부, 2002).

이러한 문화산업은 대체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며, 애니메이션·게임과 같은 새로운 업종일 수록 수도권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문화정책 기조와는 달리 문화를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국가나 도시의 경제활성화와 경제력 제고에 활용하는 산업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대규모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이와 유사한 물리적인 인프라를 조성하여 창업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사업들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의 많은 부분이 국가예산이나 중앙정부의 부처 예산으로부터 충당된다.

지방의 문화산업이 성공적으로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지자체의 세입 증대는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문화산업은 탄탄한 궤도를 달리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문화산업이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개의 사업들이 그 자체만으로 승부를 건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한데 모아 유기적인 관련성을 고려하는 '체계적 사고'가 요구된다.

지방문화산업은 지역밀착형으로 전개되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받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문화산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어야 할 것이다.

지방문화산업은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지역 활성화로 이어져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이문용, 2001).

지방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지역문화인프라 조성단계(1980~1990년대 중반), 지역문화산업정책 형성단계(1995~2002), 지역문화산업 육성단계(2003~)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문화 인프라 조성단계(1980~1990년대 중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지방문화의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어, 전통문화유산 관리차원에서 문화공간 인프라 조성정책이 확대되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1995년 지방자치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생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시기는 지역문화를 예술발전 및 문화환경 조성 차원에서 인식하였으며, 지역발전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지역문화산업정책 형성단계(1995~2002)는 1995년 지방자치제를 계기로 문화예술 및 문화자원을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문화예술 페스티벌 및 이벤트 개최, 도시문화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이미지 증진 사업추진,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추구,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에 대한 정책적 관심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역 문화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지원 기본계획 수립(99. 9), 지방문화산업 창업보육센터 조성지원계획 수립(00. 4),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 운영지침 및 추진계획 수립(01. 5), 문화산업단지 7개 지역 지정 및 협의('01. 5, 10) -부천 출판, 춘천 애니메이션, 대전 게임, 청주 학습용 게임, 광주 캐릭터, 전주 소리문화, 경주 가상현실 등, 2002년 5개 문화산업클러스터에 총 90억 원 지원,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협의회 구성 운영 등이 있다.

지역문화산업 육성단계(2003~)는 지역문화산업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한 협력적 분권체제로 전환하고, 참여정부에서는 문화의 지방분권 정책이 한층 확대될 전망

이며, 지역문화산업 활성화 움직임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문화산업 정책은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 뿐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증진하는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이병민, 2003).

이상과 같이 최근 국내에서는 문화산업 발전의 전개과정을 거쳐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문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II. 국내 문화산업정책 현황과 미래전략

1. 문화 관련산업의 현황과 전망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지식기반형 문화·관광산업 육성이 절실한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산업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창조성, 역동성, 연결성, 개방성에 근거하는 육성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1999년도 5대 국정지표중의 하나로 문화·관광의 진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범부처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어서 2000년도 문화관광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총예산의 1%를 달성함으로써 문화관광시대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전략적 차원에서 정부는 문화·관광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광비전 21"(1999)과 "문화산업비전21"(2000)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여건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이연택, 2000).

국내 문화산업 시장규모는 2002년을 기준으로 세계 시장 약 1조 4,000억달러의 1.5%내외로 세계 시장에서 10위권을 차지하고, 2002년 문화산업 수출은 약 5.5억불 수준으로 국내 전체 수출비중의 약 0.3%를 차지하였다(문화관광부, 2003).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면, 디지털화의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 융합시대 도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른 국민관광·레저시대의 본격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지방분권시대의 도래로 문화·관광·레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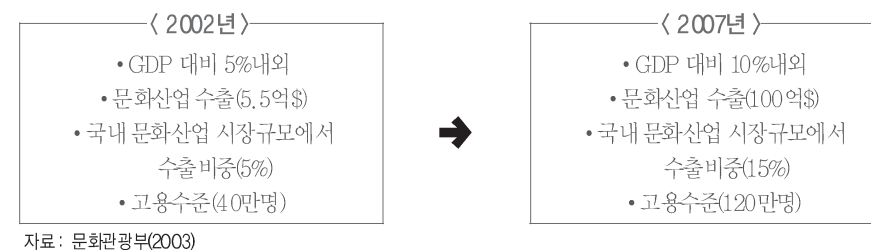


그림 1. 국민경제에서의 문화산업 위치

디지털 융합시대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문화콘텐츠의 수요 폭증이 예상되며 문화콘텐츠의 양과 질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전 세계 문화콘텐츠산업은 연평균 6.3%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2008년도 세계시장 규모는 1조 7천억불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광대역 통신망의 구축과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다양한 매체와 채널의 등장에 따라 뉴미디어 문화콘텐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관광·레저시대를 맞이해서는 주40시간 근무, 고령화, 참살이(웰빙) 가치추구 등으로 문화·관광·레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87년 주 5일 근무제 시행 후 초기 6년간 약 15%, 이후 연평균 약 10%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자택휴식 위주였던 여가행태가 활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문화·관광과 레저 수요로의 이전이 예상되며, 여행횟수 증가에 따른 주말관광객 증가와 당일여행보다 1박2일 이상의 체류형 여행수요 증가, 장거리(200km 이상) 여행 및 여행시간(4시간 이상) 증가, 여행경비 증가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아가 참살이(웰빙) 가치 추구로 정신적 만족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고품질 서비스를 선호하고,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고령인구가 2005년 인구대비 9%에서 2010년 12%로 증가하면서 고령친화형 관광·레저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현재 고령소비자는 낮은 구매력을 갖고 있으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게 되는 2010년 이후의 고령소비자는 상당한 경제력을 갖고 있어 고품질의 고령친화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지방분권 시대에서는 본격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으로 문화·관광·레저산업을 전략산업화 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04년 8월)에 따르면 16개 시·도 중 9개 시·도가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하고 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신규투자사업 규모는 19조 5천억원이며, 그 중 17%인 2조 2천억원이 문화관광부와 관계된 사업으로 29.7%를 차지한 건설교통부의 5조 8천억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新활력 지역발전 구상」(04년 7월)에서도

농·도 상생을 위해 1·2차 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의 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현주소로서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경제규모는 '04년에 총 매출규모 117조원, 총 고용규모 261만명으로 취업자 수 대비 12%로 추정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핵심자원 부족, 산업기반 취약 등 경쟁력을 잠식하는 취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1.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문화산업	관광산업	레저스포츠산업	제조업 평균
성장률(%)	21.1	11.0	15.0	5.7*
부가가치유발계수	0.8	0.8	0.9	0.6
생산유발계수	2.1	1.7	2.0	1.9

주 : *는 전체산업평균임
자료 : 문화관광부(2005).

그러나, 차세대 성장동력인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성장률은 문화산업 21.1%, 관광산업 11.0%, 레저스포츠산업 15.0%로 전체산업 평균 5.7%보다 약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높은 이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다른 분야의 생산을 크게 유발하는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

표 2.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매출 및 고용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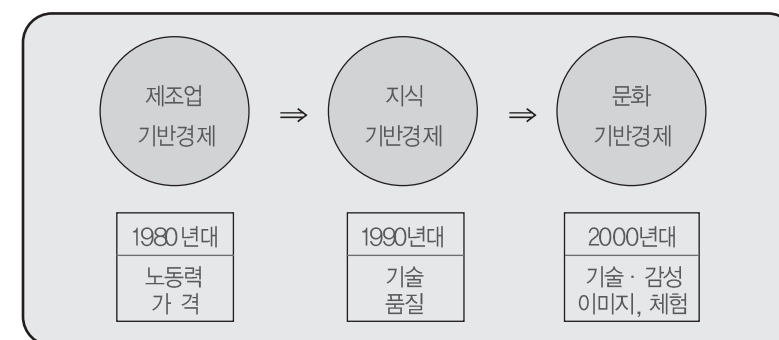
구 분	매출규모 (조원)	고용규모 (만명)
문화산업	49	53
관광산업	51	188
레저스포츠산업	17	20
합계 (비중)	117	261

자료 : 전계서

2. 문화강국(C-KOREA) 2010 미래전략

『문화강국(C-KOREA) 2010 :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에서는 창의성(Creativity), 문화(Culture), 콘텐츠(Contents) 등 3 C를 활용한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의 세 가지 전략적 육성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21세기 국가발전 동력은 창의성(Creativity)이다. 사회의 선진화는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문화적 성숙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선진국은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창조적 계급과 창조산업이 경제를 이끌어 가는 창의적 문화기반경제로 진입하였고, 성장의 핵심축이 20세기말에는 “지식과 정보”에서 21세기에는 “창의성”(Creativity)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창의적 문화기반경제시대의 성장동력인 창의성은 기술혁신(Innovation)과 이에 따른 콘텐츠의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한다. 따라서 창의적 문화기반 경제 시대에는 이미지와 감성, 체험이 중시되는 소비경향에 대응하는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자료 : 전계서

그림 2. 창의적 문화기반경제시대 도래

두 번째는 글로벌 시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역량은 문화(Culture)이다. 경제 발전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를 중시하고 사람들의 소비행태도 획일화, 대량화에서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 추세로 전환되면서 문화의 중요성이 증대한다. 문화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중국과 인도 등 후발국가의 저임금 공세, 선진국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 등으로 21세기 국가발전을 주도할 신성장동력 발굴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이 크게 기여함에 따라 이제 우리사회에서 문화는 예술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국가발전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e)으로 부각하였다. 그러나 문화를 광의로 해석할 경우, 문화 아닌 것이 거의 없게 되므로 국가발전의 핵심역량으로서 문화는 문화산업, 관광산업, 레저스포츠산업을 중심으로 시급한 정책 의제화 및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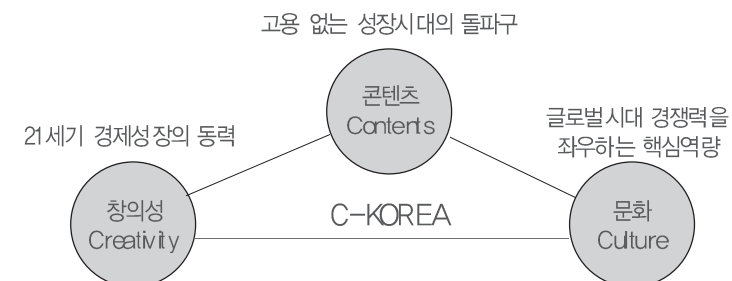
세 번째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돌파구는 콘텐츠(Contents)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도 증가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제조업 고용은 2001년 이후 성장률과 관계없이 4년 연속 감소하였는데,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이 심화되어 향후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기에 디지털융합(컨버전스) 시대를 맞이하여 콘텐츠의 양과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고, 아이디어, 감성과 콘텐츠가 결합된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이 경제성장의 선도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콘텐츠와 기술, 체험이 집약된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은 복합·고도소비사회를 선도하는 미래형 산업이자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쟁시대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3C(Creativity, Culture, Contents)를 활용한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본으로의 가치 전환이 필요한 창의성(Creativity)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Culture)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가장 위대한 자원인 창의성을 길러주는 인큐베이터이며, 창의성에 기반을 둔 문화의 산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과 고용효과를 가진 문화·관광·레저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Contents)를 가공·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문화강국(C-KOREA) 2010』은 창의성(Creativity)과 문화(Culture)를 바탕으로 문화·관광·레저스포츠의 다양한 콘텐츠(Contents)의 산업적 활용을 통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조기에 견인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으로 추진할 것이다.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은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해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한류국가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를 유도할 것이다. 또한 관광산업과 레저스포츠산업은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와 스키 등 체험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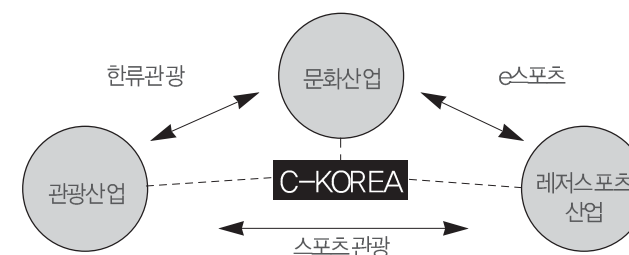
1) 10억원 투입장 문화산업 16명, 관광산업 30명, 레저스포츠산업 17명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제조업 평균 9.4명보다 훨씬 높다.



자료 : 전개서

그림 3. 문화산업 3C 육성 전략

을 통해 시장이 날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카트라이더(Kart Rider), 팡야(Pangya) 등 레저스포츠를 소재로 한국산 게임은 e-스포츠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오도록 등 문화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토록 할 것이다.



자료 : 전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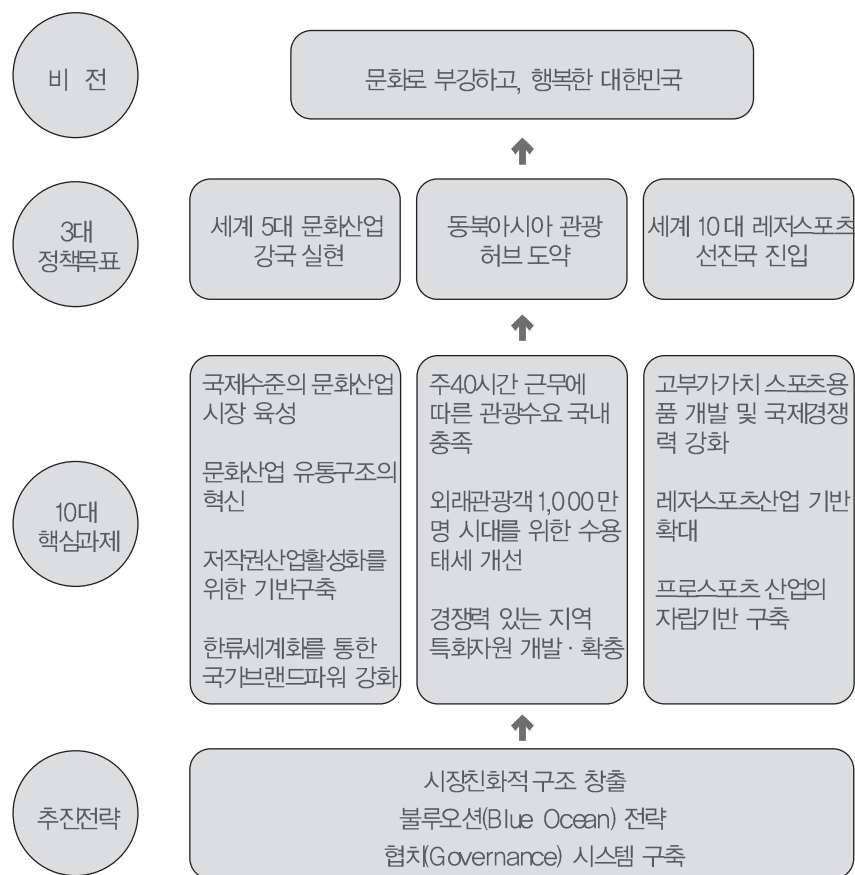
그림 4.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상호연계

나아가『문화강국(C-KOREA) 2010』의 비전과 추진전략에서는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 동북아시아 관광허브 도약,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 진입 등을 3대 목표로 하여 10대 핵심과제와 시장친화적 구조창출, 블루오션(Blue Ocean)전략, 협치(Governance)등 3가지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대 목표와 연계한 10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5대문화산업 강국 실현은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Competitive Edge)를 확보하고, 2010년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수준의 문화산업시장 육성, 문화콘텐츠 유통구조의 혁신, 저작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한류 세계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파워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시아 관광허브 도약을 위해 국민관광수요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2010년 동북아관광허브(Hub)로 도약할 것이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 국내 충족,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자원 개발·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 진입을 위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스포츠용품 개발을 지원하고, 늘어나고 있는 레저수요를 레저스포츠 산업기반확대의 계기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스포츠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통해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으로 진입하도록 고부가가치 스포츠용품 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 레저스포츠산업 기반 확대, 프로스포츠산업의 자립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문화관광부, 2005).



자료 : 전개서

그림 5. 『문화강국(C-KOREA) 2010』의 비전과 추진전략

3. 국내 문화산업 정책 현황과 미래전략의 시사점

이상의 국내 문화산업정책 현황과 미래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수준의 문화산업시장 육성을 위하여 핵심 문화콘텐츠산업의 집중육성과 문화산업 핵심인력 양성기반 구축을 위한 충남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 문화단체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로드맵에 의한 CT(Culture Technology) 핵심기술과 문화콘텐츠의 개발을 추진하고, 문화산업 투자환경을 조성, 지역 문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을 통해 인력양성·기술개발·문화 상품화의 원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산업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해서는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과 문화콘텐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데이터뱅크의 운영, 문화콘텐츠닷컴(culturecontent.com) 운영 활성화,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 협력체 구성 등을 천안을 중심으로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추진한다.

셋째, 한류 세계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파워 강화는 「한(韓) 브랜드」를 전통문화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으로, 충남에서는 백제문화와 내포문화자원과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의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남이 보유한 자원중에서 발효식품 등 건강식품, 한식음식, 전통복장, 한옥 등에 관심을 가지고 한(韓)브랜드의 콘텐츠 상품을 발굴·육성해야 한다.

넷째,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 국내 충족을 위해서는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다양화로 고급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고택 및 사찰을 활용한 숙박시설과 펜션을 갖추고, 관광안내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분야별 안내 및 기획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의 대표축제 육성, 폐광과 농산어촌 체험·전통문화체험 관광상품 개발, 공예 문화관광상품 창작 등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는 해외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거점도시를 선정하여 컨벤션 등 국제적 관광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충남은 중국과 일본의 교류를 주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을 거점으로 중국·일본 등 주력시장을 대상으로 한 상품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충남 특성의 메가이벤트를 통한 해외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여섯째,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자원 개발·확충을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광역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서해안관광벨트의 거점 구축과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 등을 지역의 특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지역밀착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충남의 아름다운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관광·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관광레저도시로 지

정된 지역과 주변지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동북아시아 최고의 휴양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이미 국가에서는 지역 거점문화도시로 광주아시아문화도시, 부산영상도시, 경주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등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는데, 충남은 대상도시가 없으므로 천안을 문화콘텐츠 도시로서 거점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 레저스포츠 기반확대를 위하여 서해안지역에 항공레포츠 특구의 개발과 보령 및 안면도 서해안거점 관광도시에 수상 및 해상의 해양레저스포츠 중심의 해양관광지와 레저스포츠 산업 지역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그리고, 골프의 대중화시대에 대비하여 태안기업도시를 중심으로 골프장 확충과 골프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해안의 내륙지역에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한 시설·공간과 산업의 육성도 추진해야 한다.

III. 충남 문화산업의 현황 및 지역변화 전망과 과제

1. 충남 문화산업 현황분석²⁾과 전망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영상, 방송, 음반, 게임, 애니메이션, 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산업중의 하나로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으로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지역개발과 지역에 역동적인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역별 특화 및 연계되는 문화산업의 특화 및 연계방안으로, 대전·충청권의 사업으로 대전은 멀티미디어(영상콘텐츠), 게임 등에 특화하고 기업의 창업 및 유치 기반정비, 멀티미디어 기술선도를 통한 신사업 창출과 혁신의 외부 확산 주도하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키는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로 운영할 것이다. 청주는 학습용 게임개발에 특화하며, 학습용 게임 콘텐츠 특화 육성을 위한 CT 혁신센터를 유치하고, 관련 기업의 창업, 보육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축제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 지향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2) 충남의 문화산업 현황은 심상민 교수의 '충청남도 문화산업 발전방안'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석은 생략하였다.

현재 지방문화산업단지는 7개 지역으로 대전, 부천, 전주, 광주, 춘천, 청주, 경주 등이 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9월 28일 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원방침 수립을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며, 2001년 9월 12일 1차 단지 조성 대상지역(대전, 춘천, 부천, 청주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2001년 10월 10일 2차 단지 조성 대상지역(광주, 전주, 경주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영상산업은 대전, 광주, 전주 등 3개 도시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은 대전, 청주, 부천, 경주 등 4개 도시에서, 애니메이션 산업은 춘천과 부천, 경주 3개 도시에서, 캐릭터 산업은 광주와 부천, 경주 3개 도시에서, VR(Virtual Reality)산업은 경주에서, 소리와 출판 만화산업은 각각 전주와 부천에서 계획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한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사업'은 문화산업진흥 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의 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1개 시·도에 1곳씩 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모두 15곳에 설립한다는 목표를 기존에 설정해 두었다. 현재까지 대전, 청주, 제주, 부천, 부산, 목포, 대구, 춘천, 전주, 광주 등 10군데가 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문화관광부, 2003).

충남은 동북아 경제권의 신성장산업지로 육성하기 위해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대중국교역의 교두보로서 서해안 생산기지를 형성하고, 기흥-천안-청주 지역을 연계하는 IT밸리, 천안·아산-서산-당진을 연계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것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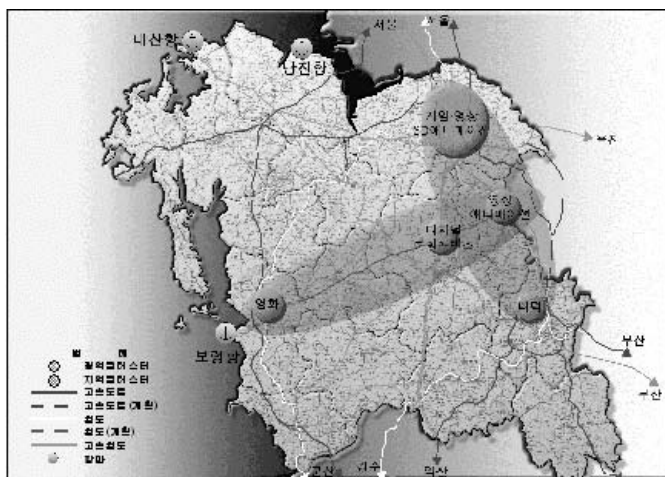
충남의 첨단문화산업은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영상콘텐츠 Data Bank 센터 등의 설치 등을 전략육성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3).

충남 문화산업 육성방안의 기본전략은 천안·아산지역에 집적된 전자·정보기기산업과 연계, 게임·영상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표 3. 충남의 문화산업 관련 전략 육성산업

전략산업	주요사업
전자·정보기기산업	· 디스플레이 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 디스플레이 교육센터 운영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 자동차 부품소재 R&D 집적화센터 설립 · 자동차산업 혁신체계(RIS)구축
첨단문화산업	·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 영상콘텐츠 Data Bank 센터
농·축산바이오산업	· 바이오산업 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 인삼·약초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자료 : 문화관광부(2003).



자료 : 충청남도(2004).

그림 6.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도

첨단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천안 영상미디어센터는 게임, VR 등 3D영상산업,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애니메이션 산업, 홍익대 애니메이션테마파크는 게임·영상, 교육용 에듀테인먼트, 문화산업단지(공주·부여 일원)는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캐릭터, 보령 시네마월드는 영화산업 등을 육성하는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충남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세부육성 사업은 영상미디어산업사업지원센터 설립, VGF(버추얼게임팩토리-게임관련업체 집적화)체계 구축, 국립 애니메이션 제작소 유치, 디지털콘텐츠 진흥원 설립, 한국영상자료원 분원 유치, HD-TV기술지원센터 설립, 영상콘텐츠 Data Bank센터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인력양성 및 산·학 협력사업으로는 게임·영상산업 협력단 운영, 충남 게임·애니메이션 아카데미 설립, 영상문화산업 교육센터 설립, 게임·영상산업 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국제게임트레이드쇼 개최, 충남 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산학협력센터 설립, 문화콘텐츠 산·학 협력 및 창업지원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중이나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문화산업육성 조성사업으로는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영상·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 천안밸리 배후단지 조성, 게임·영상 산업 집적화, 충남 디지털문화콘텐츠 특별구역 조성, 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충청남도, 2004).

2. 충남 관광산업 현황과 개발계획

1) 충청남도 관광자원 현황

충남의 관광자원으로 2004년 현재 자연공원 6개소, 자연휴양림 18개소, 온천 11개소, 관광지 24개소, 관광특구 2개소 문화재 849점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인문관광자원은 충남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05개, 지방문화재 336개, 문화재자료 293개 등 총 838개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백제문화권의 거점지역인 공주시와 부여군에는 충남 국가지정문화재의 42.0%인 86개, 지방문화재의 31.5%인 106개가 집중되어 있다.

관광상품으로 2004년 현재 지역축제 41건 중 금산인삼제, 보령머드축제, 서천모시문화제, 강경젓갈축제, 아산성웅이순신 축제 등 5개가 지정되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지역특산물과 향토음식 등의 관광상품 개발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지역 내 문화축제로는 전통민속축제 11건, 특산물 축제 12건, 지역문화축제 8건, 이벤트 축제 10건 등 총 41건의 다양한 축제가 있다.

관광산업 현황으로는 관광숙박시설로 2004년 현재 관광숙박시설 중 호텔급 17개소, 관광휴양시설 1개소, 관광안내소 7개소 등을 보유하고, 컨벤션시설은 전무하다. 관광호텔업은 2004년 현재 11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가족호텔업은 1개소, 휴양콘도미니엄업은 5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여행업으로는 일반여행업 1개, 국외여행업 85개, 국내여행업 153개 등 총 239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관광시설로는 골프장 및 체육시설에서 충남도내 골프장은 5개 등이 운영 중에 있으며, 승마장은 아산과 태안에 2개소가 있다.

관광관련 대학 및 연구소로는 도내 관광관련 대학으로 건양대, 신성대, 순천향대, 한서대, 청운대, 청양대, 한국전통문화학교, 공주영상정보대, 금강대학, 호서대, 홍익대 등이 있고, 연구기관으로는 충남발전연구원과 충남역사문화원 등이 있다.

충남 관광산업의 육성 기본전략은 백제·내포문화권과 연계한 서해안문화관광벨트 조성, 지역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관광정보콘텐츠 개발, 서해안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체험형 관광자원 개발, 충남 5대 축제의 세계화, 지역별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 활성화, 금강 호수변 생태자원과 인삼·약초 중심의 체험, 탐방, 건강형 관광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축제의 세계화는 공주·부여 백제문화제, 금산 인삼축제, 보령 머드축제, 한산 모시축제, 강경 젓갈축제, 서산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등 충남의 지역축제 세계화를 추진하고, 주변의 역사문화자원과 참여형 이벤트를 연계하여 충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료 : 충청남도(2004).

그림 7. 관광산업 클러스터 형성도

2)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개발계획

충남은 2개의 역사문화권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사업이다.

백제문화권은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일본문화의 원류가 되었으나 그 유적이 서울, 공주, 부여, 익산 등에 분포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1993년에 공주, 부여, 익산지역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의 추진사업은 문화유적 정비·재현, 관광휴양자원 확충, 도시환경 정비, 도로교통망 확충, 계룡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해 왔다.

이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부여의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으로 역사재현촌으로 개국촌, 백제역사민속 박물관, 왕국촌, 전통민속촌, 산업교육촌, 군사통신촌, 풍속종교촌 등을 조성하고, 인접하여 백제의 집을 건립하여 백제의 역사와 문화예술의 재현과 전통음식을 접하는 역사체험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및 숙박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 공산성 백제민속고을 조성, 한국민속예술 축제 유치,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 계룡 관광타운 조성, 김중서장군 성역화사업, 백제문화제 기념관 전시체험시설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세계역사문화엑스포(HISPO; HISTORY EXPO)를 개최하여 백제역사 체험의 장을 마련, 국제적 역사문화명소로 육성하고, 독창적이고 찬란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 선양·홍보로 주변 역사문화자원의 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향후 중화·아스카문화권과

연계하는 체험·탐방·문화콘텐츠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조성 사업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내포문화를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이는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을 문화권형 특정지역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복원·정비로 문화권 중심의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내포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이를 통한 자족적 문화창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내용으로는 정신문화 창달 4개 사업, 문화유적 정비 31개 사업, 관광지 조성 7개사업, 인프라 확충 7개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충남의 역사문화도시를 역사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사업은 역사 문화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공주, 부여, 강경, 홍성, 해미 등을 古都 옛 모습 되살리기 시범도시로 지정 정비하여 매력 있는 역사도시로 재생하고, 전통상가 거리, 전통 및 근대건축물 가로, 관아지구 등의 테마가도로 조성하여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으로 공주는 2개 권역, 7개 지구 32개 사업(무령왕릉, 웅진민속, 공산성, 곰나루, 국고개 가로경관, 충청감영, 우금치전적지 등), 부여는 2개 권역 5개사업(구드래, 부소산성, 정림사지, 궁남로 가로공원 조성 등), 홍성은 2개 구역 16개사업(관아복원, 남문복원, 충주성 성곽복원, 옛 수로복원, 의사총정비 등), 서산은 5개구역 20개사업(해미읍성, 천주교 성지, 휴암리 선사 유적, 천주교 순례코스 등), 논산은 2개 권역 8개지구 36개사업(옥녀봉, 종교문화, 황산포구 경관, 죽림서원, 객주거리, 맛갈젓 특화상가 등) 등을 추진하고 있다(충청남도, 2004).

3) 서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 충청남도

서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수립의 배경은 중국 등 동북아 관광시장 급신장과 주40시간 근무제, 해양관광활성화, SIT, 휴양형 리조트이용 증대 등 의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와 형태변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계획이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건설, 기업도시의 조성, 새만금사업의 추진으로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서 신 관광목적지로 부상하여 국토공간체계 변화에 따른 국가의 새로운 관광축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매력적인 해양·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반면, 지속적 개발압력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서해안의 관광잠재력 발현을 위한 체계적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서해안 관광잠재력의 체계적 개발로 신 관광여가지대 조성과 지역진흥, 나아가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 실현을 위한 동북아 관광중심지 육성을 통해 해양관광 중심지대를 조성하여 지역 및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다.

서해안관광벨트의 비전으로 제시한 21세기 웰빙시대를 위한 한반도 해양 관광 중심축 형성을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생태,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활용한 자연·문화 중심지역, 웰빙시대에 부합하는 국민휴양 관광지대, 동북아 관광거점 지역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서해안관광벨트개발 계획의 5가지 목표로는 웰빙시대와 부합하는 국민관광휴양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선도지역,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지역, 해양·생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통합 관광지역, 국제적 수준의 해양관광거점 지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서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은 한반도 해양관광중심지대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해양관광지로 중국, 일본관광객 방문, 아시아의 국제 교류장으로 관광·휴양·컨벤션 지역, 문화 공존지대로 다양한 테마관광지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양관광 위락지대로 바다·섬·갯벌자원 개발과 한류관광지의 중심으로 드라마 촬영지·음식·건강상품 발굴, 사계절이 즐거운 관광지로는 해양스포츠, 골프 등의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 문화체험으로 한류·음식·해양자원 개발과 체험을 통한 자기계발로 종교·탐조·섬 등 SIT관광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 문화공존 지대로 동아시아 - 서해안 - 대한민국으로 연계하고, 살아 숨쉬는 문화로 지역문화·생활문화·축제 등의 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을 통한 건강·보양을 위해 치료·운동·식도락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으로 휴양·여행·취미 관광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해안의 주요 관광개발 사업으로는 보령 대천해수욕장과 태안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안면도 중장지구(대부초지) 관광지 조성, 서산 AB지구 : 철새도래지 생태공원 조성, 서해안 당진, 보령, 서천을 대상의 생태·체험관광 육성으로 당진 항·포구 어촌체험, 보령 갯벌 생태체험, 서천 비인만 갯벌체험 관광마을 조성, 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충남 Sea Food Fair 관광 상품화 등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동북아 최고의 관광·레저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태안군 천수만 B지구 일원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지정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첨단 복합단지, 청소년파크, 생태체험공원, 테마파크, 스포츠파크, 아카데미·웰빙타운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충청남도, 2004).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국가균형정책으로 연기·공주지역에 건설될 계획이다.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원이며, 면적으로 예정지역은 2,212만평(주변지역 : 6,769만평)이다. 지리적 특성은 중심부에 원수산(254m)이 있고,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대전과 청주로부터 10km 거리에 위치한다.

교통여건은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경부고속도로가 예정지역의 동쪽을 지나가고, 서쪽으로 2009년 준공예정인 대전 - 당진 고속도로가 건설 중이며, 청주공항이 24km 거리에 위치한다. 인구규모는 30~50만명 수준이며, 인구밀도는 300~350인/ha이다.

개발유형으로는 기존도시와의 연담화 우려가 없는 '신도시형'으로서 주요도시기능은 국가행정기능과 보조기능으로 국책연구, 문화·국제교류, 대학, 첨단산업 및 관광기능, 도시기본기능으로 다양한 공공시설과 생활편익시설,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등이 인구 유입단계에 맞춰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시는 '상생과 도약을 구현하는 선도도시', '품격높은 세계적 모범도시'로 건설한다. 건설 목표는 『상생과 도약』을 구현하는 선도도시 개발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도시, 품격높은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개발 기본방향으로 복합·자족적 도시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기능을 지원하는 충분한 도시 기능·시설 확보, 문화·국제교류 기능 유치, 연구개발·교육 기능 유치, 첨단산업·기업 관광·레저기능 유치 등을 추진할 것이다. 품격 높은 친환경적 도시디자인 구현을 위해서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주거환경 조성,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색도시 구현, 열린 문화공간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구현, 개방적·개성적인 공공청사 건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비전으로는 '유비쿼터스' 소통이 일상화된 정보네트워크도시로서 'U-City'의 일상화 실현과 새로운 정보네트워크 도시 비전을 구현하고, 다양한 가치가 표현되는 감성적 인간도시를 위해서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구가하는 도시와 시민의 감성을 풍요롭게 하는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생하고 진화하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해서는 도시와 자연의 균형적 진화와 지혜로운 도시문명의 가치(지속가능성) 실현과 대한민국 정체성이 살아있는 아시아의 문화도시를 건설하고, 신한국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도시구현과 철학이 깃든 역사적인 도시를 조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시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생태도시, 문화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시 환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킬 것이다. 또한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건설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문화재 보존과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다.

친환경적 생태도시의 예정지역의 자연환경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개발계획의 사전 환경성 검토,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공원, 녹지와 생물다양성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에너지, 물, 폐기물 등의 환경순환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전통문화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유산과 현재 삶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문화재 발굴, 조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대책과 활용방안을 마련해 개발계획에 반영, 박물관, 전시관, 유적공원 조성,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친한

경적 토지이용계획, 환경 자원절약 시스템 구축 방안 등 환경보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유산 조사를 '고고·역사'와 '인류·민속'분야로 나누어 실시해 유·무 문화유산에 대한 균형 있는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2005)

5. 충남 문화·관광산업의 과제도출

충남의 문화산업 현황과 전망, 관광산업의 현황과 개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 등을 검토하여 충남지역의 지방문화 발전을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문화, 역사문화, 해양문화 등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고유한 지역 문화권을 형성해야 한다. 이는 각 문화권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성이 있도록 특화하여 개발을 하고, 각기 다른 문화권과도 문화자원간에 상호 네트워크로 연계되도록 한다.

둘째, 천안지역의 영상미디어센터, 영상문화복합단지과 에니메이션테마파크, 문화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타 지방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각각의 센터와 산업단지별로 각기 다른 소재를 특화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지역내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셋째, 백제·내포문화권, 서해안관광벨트, 천안·아산의 중부 내륙권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자연·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을 특화 개발해야 한다. 공주와 부여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백제의 역사문화자원과 홍성, 예산, 서산, 태안, 보령, 당진 등에 형성된 내포문화권의 전통생활문화와 종교자원, 문화유적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그리고 서해안의 경관자원과 생태자원, 어촌 문화자원과 아산·천안의 도시문화와 민속자원 등의 관광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충남의 농산어촌의 풍경과 전통관습·민속놀이·생태자원과 도시지역의 지역축제와 공연과 예술문화 등을 살린 지역공동체 문화를 발굴·육성해야 한다. 녹색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어메티니 농촌의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도시에서 갖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공연의 육성 뿐만아니라 보령머드, 금산인삼, 강경젓갈, 아산충무공이순신, 서천모시 등 지역축제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 지역의 특성있는 소축제도 다양하게 발굴·육성한다.

다섯째, 대중화 레저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해양레포츠와 골프 등을 위한 레저스포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해양의 유람선과 크루즈, 보트와 요트, 바다낚시 등의 해양레저스포츠를 서해안에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해안의 내륙과 도시 근교 적정 입지에 항공레저스포츠 및 골프의 대중화 시대에 대비한 체육시설을 개발한다. 나아가 레저스포츠 시설이 집중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주변에 레저스포츠를 지원할 수 있는 레포츠 관련산업을 발전시킨다.

IV. 국토의 중심, 충남의 지방문화 창조

1. 충남 지방문화 창조를 위한 접근 체계

국토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충남의 지방문화 창조를 위한 접근 체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내포문화권·백제문화권의 개발사업, 서해안관광벨트의 개발 등과 연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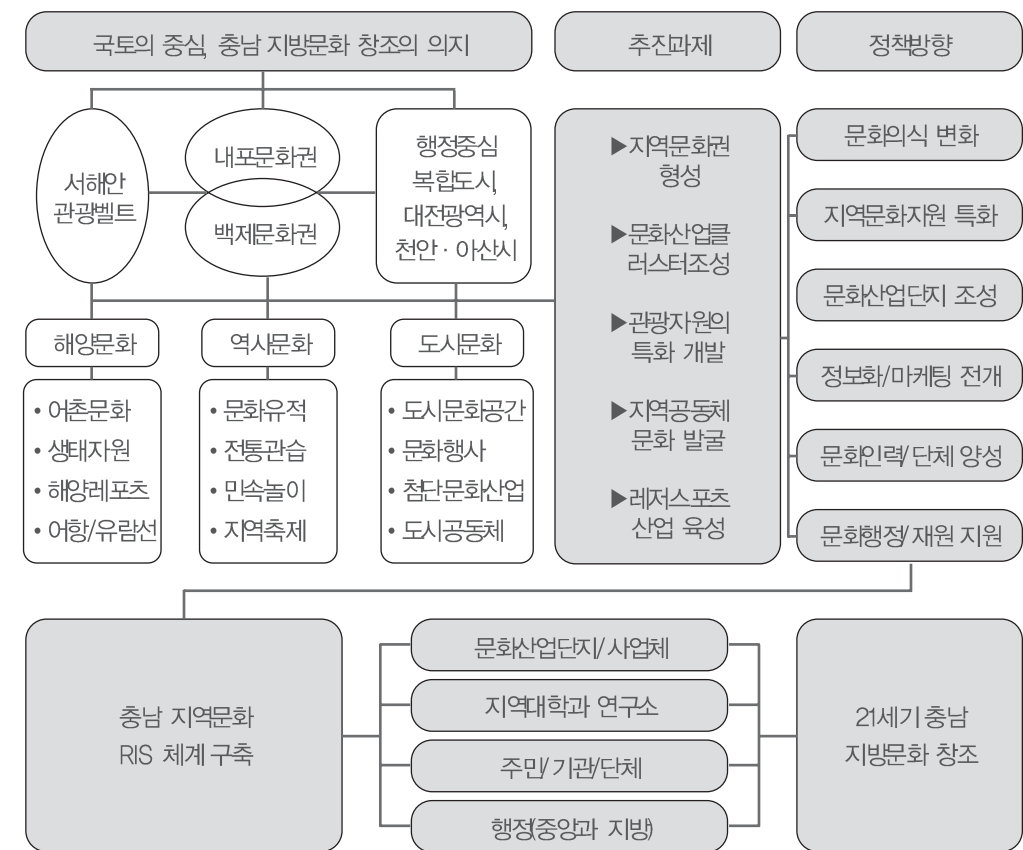


그림 8. 국토의 중심, 충남 지방문화 창조를 위한 접근체계

2. 충남의 지역문화 육성의 추진방향

충남의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은 지역문화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는 일석이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자원을 단순히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자원의 개발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충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문화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충남 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개성있는 지역문화권 형성

개성있는 지역문화권 형성을 위해서는 충남을 광역적으로 해양문화권, 역사문화권, 대도시문화권 등으로 나누어 자원의 특성에 맞도록 문화자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도시문화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로서 관광·레저기능이 도입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생태도시와 전통문화도시로서 박물관, 전시관, 유적공원 조성 등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충남의 고유한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천안·아산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민속자원과 문화예술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 확충 개발하고, 대전광역시와도 연계된 하나의 광역도시문화권이 형성되어야 한다.

역사문화권에서 백제·내포문화권은 중화·아스카문화권과 연계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육성 뿐만 아니라 기벌포문화권에서의 유물·유적·종교·민속·예술등 유형·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으로 연계 개발해야 한다.

해양문화권은 해양레저스포츠와 휴양형리조트자원의 개발, 레저관광형 기업도시의 건설 등을 종합하여 한반도 해양관광중심지대로서 중국과 일본을 연계하는 국제적 수준의 서해안관광벨트 지대를 만들도록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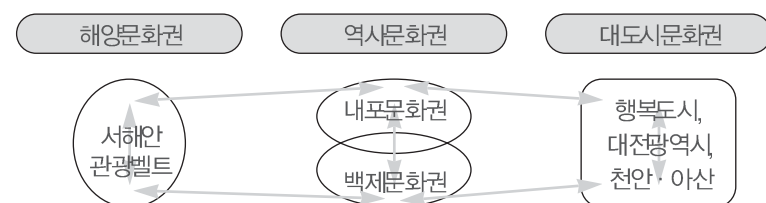


그림 9. 충남 지역문화권 형성의 상호관계도

2)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집적화 조성

충남 문화산업 육성방안에서는 천안·아산지역에 집적된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산업을 거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천안 영상미디어센터, 영상문화복합단지, 애니메이션테마파크, 문화산업단지 등은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캐릭터, 영화산업, 지역문화산업 등을 육성하는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로서 발전시킨다.

충남의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대도시문화와 역사문화,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역문화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제공, 첨단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혁신체계구축을 통한 산·학·연·관에 의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재정 및 정책지원, 마케팅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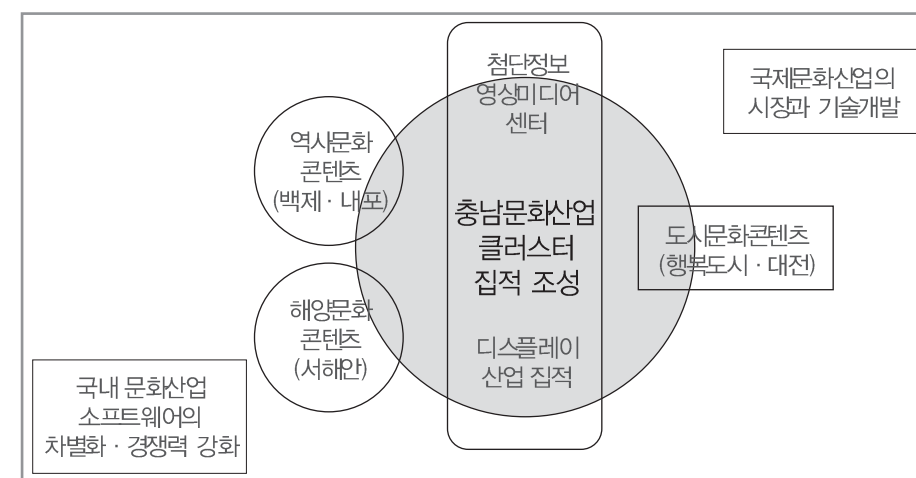


그림 10. 충남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콘텐츠 산업 육성

3)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 개발

충남에서 광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해양문화권, 역사문화권, 대도시문화권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특화관광자원들이 많다. 그러므로 서해안

은 안면도-보령-천수만의 해안거점관광도시의 개발과 갯벌, 사구, 철새도래지 등의 생태자원, 다양한 수산물 중심의 수산물식물과 특산물 등은 휴양·휴식, SIT관광, 체험과 교육 등을 위한 문화관광자원 개발의 가치가 높으므로 이를 특화된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

역사문화권은 백제·내포권과 중·일문화를 연계한 독창적인 백제의 역사문화자원에서 불교, 고대무역, 문화교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백제문화엑스포(HISPO) 개최를 추진한다. 그리고 가야산을 중심으로 내포문화권에 산재해 있는 문물 유입의 종교, 민속, 인물 역사자원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상품성이 있으므로 지역의 온천관광자원과 함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도시문화권은 새로이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계적인 모델 신도시로서 조성하여 도시 그 자체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매력성과 가치를 갖도록 건설한다. 그리고, 주변의 대전광역시와 천안·아산은 광역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원기능을 가지면서 또다른 문화관광의 지원기능을 갖도록 하고, 특히, 천안은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를 집적화한 첨단문화도시로 지정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서해안·역사문화·도시문화권으로 연계되는 중부권 문화관광축을 구축하여 기존의 경부축에서 서해안축으로 연결하는 문화관광축을 형성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연계하여 강원·경상으로 이어지는 중부문화관광축이 연계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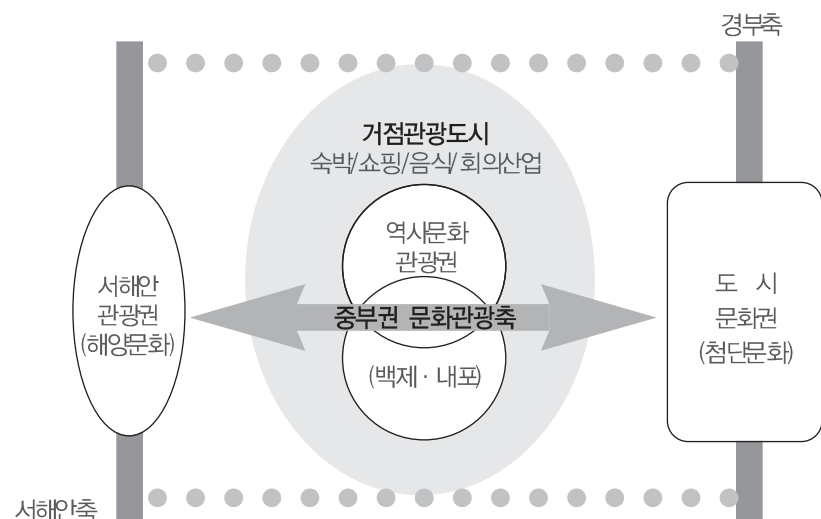


그림 11. 충남 지역특화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관광축 형성

4) 도·농교류형 지역공동체 문화관광자원 발굴·육성

어메티니 자원은 농촌을 또 다른 자원으로서 접근하여 기존의 생산기능에 부가적인 서비스기능을 합하여 도시와 농촌이 교류를 하면서 도·농교류형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주5일근무제의 실시와 국민여가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이농향도형의 인구이동에서 이도향농형의 형태, 다시말해서 5도2촌의 생활과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이 현대 여가에서 중요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어 현재 국가에서도 중요한 정책으로 정부의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이미 친환경 농업, 농산어촌의 풍경, 농사·어업체험, 생활체험, 생태자원, 갯벌체험, 채취체험, 고택 숙박 등을 농산어촌의 자원으로 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생태우수마을, 팜스테이마을, 전통테마마을 등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결국 도시공동체와 농촌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간에 이루어지는 도·농문화 교류 및 체험으로서 충남 농산어촌의 자연과 생활, 생태자원 농어업, 특산물 등은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을 위한 생활공간과 도·농교류형의 문화자원을 발굴·육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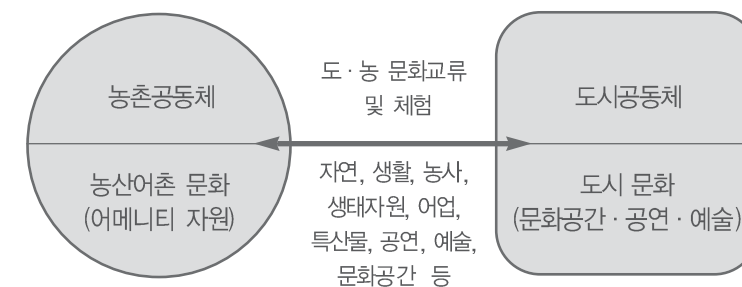


그림 12. 충남 도·농 지역공동체 교류문화 형성

5) 해양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서해안은 중국 등 동북아 관광시장의 급성장, 서해안고속도로의 건설로 국내외 관광객을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해양관광거점 조성 및 연계 네트워크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관광미항의 건설과 마리너 시설의 조성, 국제적 리조트 휴양관광지 및 레저관광형 기업도시의 건설지구내에는 골프장과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국내외 레저스포츠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스포츠 시

설·공간의 구성과 관련 산업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의 항공관련 산업 입지와 태안의 경비행장과 해안비치, 경정장 등과 내륙의 산악과 능선을 이용하여 항공레저스포츠와 수상레저,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의 모험레저스포츠도 서해안과 내륙에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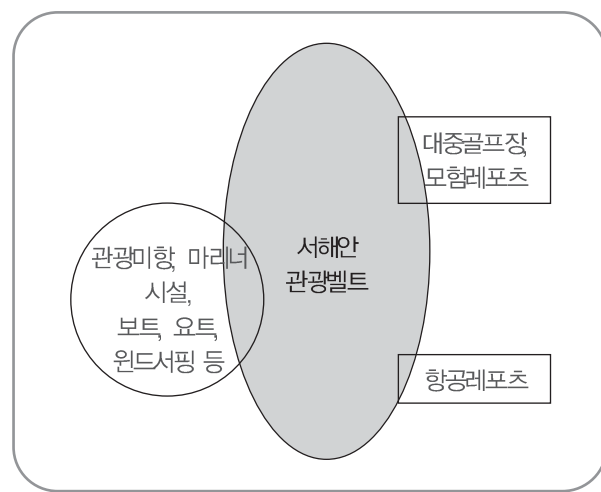


그림 13. 충남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V. 정책방향과 지역 문화혁신체계 구축

1. 충남 문화관광 정책방향

충남이 개성있는 지방문화권 형성과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관광자원의 특화개발, 지역공동체 문화관광자원 발굴·육성, 해양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차원에서 문화관광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의식에 대한 접근인식의 변화 요구, 특화된 지역 문화자원의 발굴·육성으로 명소화, 첨단문화산업단지의 차별화 조성과 문화도시 지정, 국토의 중심, 충남 문화의 콘텐츠 개발 및 정보화·마케팅, 지역대학과 단체를 활용한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재정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세부적인 정책추진방향을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충남 문화관광정책 추진방향

구 분		정 책 추 진 방 향
문화의식	문화관광 광의식에 대한 접근인식의 변화 요구	• 21세기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으로 문화산업 인식 홍보 • 지역주민과 사업체, 문화관련 종사자들의 문화 교육 실시 • 정책추진 공무원의 여가·문화·관광의 연계된 문화산업 인식
지역문화 자원육성	특화된 지역문화자원의 발굴·육성	• 도시·역사·해양문화 특성별 광역문화권 개발계획 추진 • 생태·역사문화·농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그린투어리즘 육성 • 인삼·머드·모시·젓갈축제 등 지역축제를 세계화 축제로 발전 • 백제 문화권 역사 엑스포(HISPO) 개최 추진
문화산업 단지조성	첨단문화산업단지의 차별화 조성 and 문화도시 지정	• 천안의 영상미디어, 영상에니메이션 산업 개발 • 보령 시네마월드 영화산업 육성 • 공주·부여의 문화산업단지의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보화/ 마케팅 추진	충남 문화의 콘텐츠 개발 및 정보화·마케팅	• 백제·내포문화권의 문화원형 콘텐츠 발굴 육성 • 게임·영상·관광정보의 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 상품화 추진 • 정보화·국가기관 및 단체를 통한 국제마케팅 실시
문화인력 단체육성	지역대학과 단체를 활용한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 지역대학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관광인력 활용 • 문화·숲·생태해설사 등의 양성 및 인내제도 확대 실시 • NGO 중심의 문화·관광·환경 연계 자원봉사자 참여 사업
문화행정 재정지원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재정지원 확대	• 중앙 문화관광정책과 연계한 사업의 시범 선정 추진 • 인접 시도·시군간 문화관광 협력정책 및 사업의 추진 • 문화와 연관된 군특회계의 통합 사업 추진

2. 충남 지역문화혁신체계 구축

앞에서 제시된 충남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관광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문화산업단지와 사업체, 지역 대학과 연구소, 주민과 기관, 단체, 행정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협력하여 시스템을 갖추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별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광콘텐츠 개발과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운영체계 구축, 권역별·테마별 광역문화관광 협력체계 구축 및 백제 내포문화권 관광 벨트화 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북부권의 역사인물중심(천안, 아산, 홍성, 예산)문화를 단국대·호서대·순천향대 등에서, 서해안권의 해양·내포중심(보령, 서천, 태안, 당진, 서산)을 한서대·신성대 등에서, 백제권의 백제중심(공주, 부여)문화를 공주대·공주영상정보대·한국문화전통문화학교 등에서, 금강권 군사·유교전통중심(논산, 계룡, 금산, 연기, 청양)문화를 건양대·홍익대, 중부대 등에서 연계하는 문화관광산업 관·학 협력 지역혁신체계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문화혁신체계는 지역혁신 플랫폼(Network Manager)을 중심으로 하고, 이를 지역의 사업체와 기업, 연구기관, 정부기관으로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구축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2004),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
 김영평(2000),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행정의 방향,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문화관광정책연구협의회.
 문화관광부(2002), '문화산업백서'.
 문화관광부(2003),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현황점검과 발전방안.
 문화관광부(2003),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 실현방안 보고 자료.
 산업연구원·전략산업기획단(2004), '21세기 충남산업의 발전전략과 과제', 최종보고회 자료, 충청남도.
 설광언(2000), 문화산업시대의 창의적 인력양성 방안',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문화관광정책연구협의회.
 옥성수(2003), '문화산업 혁신클러스터 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문웅(2001), 지역문화사업과 지역 활성화.
 이병인(2003), 산업클러스터 관점에서 본 지방문화산업 발전전략.
 이연택(2000), 지식기반형 문화·관광산업 육성방안',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문화관광정책연구협의회.
 충청남도(2004),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2004~2008).
 한상진(2000), 창의적 문화국가 실현',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문화관광정책연구협의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2005), 국가균형발전과 제2의 국가도약을 선도할 행정중심복합도시.

충청남도 문화산업 발전방안

심상민 | 호서대 디지털콘텐츠비즈니스학과 교수

I. 서론

- 전국대비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1990년 3.8%에서 2001년 4.5%로 증가하였고, 2001년 GRDP는 21조 8,279억원에 이룸
 - 지역내 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7.8%로 광역시와 타 도의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면서 빠르게 증가

표 1. GDP 및 GRDP 성장률 (단위 : 백만원, 1995년 불변가격)

구 분	GDP (A)	GRDP (B)	구 분	성장률(%)			
				전국	광역시계	도계	충청남도
				6.71	6.45	6.26	7.76
1990	247,735,084	9,336,997	3.77	9.61	13.55	6.64	2.05
1995	357,722,460	14,774,106	4.13	7.39	7.15	8.47	6.52
2000	465,487,901	21,117,831	4.54	9.44	8.14	7.80	8.37
2001	486,416,276	21,827,939	4.49	4.50	4.54	4.12	3.36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 년도.

- 충남의 산업구조는 1991년 농림어업 26.1%, 광공업 26.7%, 서비스업이 47.3%에서, 2001년에는 농림어업 14.9%(11.2% ▼), 광공업 38.3%(11.7% ▲), 서비스업이 46.8%로 나타남
 - 1차 산업중심에서 2차, 3차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총생산대비 충남의 산업구조

(단위 : 억원, 1995년 불변가격)

구 분	산업총생산				산업구성비 (%)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합계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1991	23,439	23,947	42,574	89,960	26.05	26.62	47.33
1996	27,705	50,679	88,024	166,408	16.65	30.45	52.90
2001	31,025	79,804	97,358	208,187	14.90	38.33	46.76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 년도.

II. 충청남도 문화산업 관련 여건 현황

1. 문화산업 기초 여건

- 충남은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서 첨단문화(디지털콘텐츠)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 등을 지역발전 위한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충남의 CT·IT 관련 업체의 현황으로는 기업체수는 총 161개에 소프트웨어산업이 60개, 방송수신 및 기타 영상음양기기 제조업 38개,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개, 컴퓨터제조업 23개임
 - 종업원수는 총 6,156명으로 방송수신 및 기타 영상음양기기 제조업 2,132명, 컴퓨터제조업 1,929명,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984명, 촬영기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이 657명 등으로 나타남

표 3. 충청남도 CT·IT 관련 업체

산업분류	기업수(개소)	종업원수(명)
총 계	161	6,156
컴퓨터제조업	23	1,929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	984
방송수신 및 기타 영상음양기기 제조업	38	2,132
촬영기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13	657
소프트웨어 산업	60	440
게임 산업	1	15

자료 : 통계청(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충남의 문화산업 관련 집적시설로는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중소기업 지원센터, 대학창업보육센터(남서울대학교 외 17개 대학) 등이 있고, 천안영상미디어사업화센터, 충남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홍익대 영상테마파크 등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산업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 특히, 지역에 문화산업관련 대학과 인력배출은 2,800명에 이르는 문화산업 관련학과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어 콘텐츠제작 기술인력이 풍부. 디지털영상 915명, 멀티미디어 530명, 기타 485명, e-Music 200명, 디지털출판 190명, 디지털 정보 180명, 디지털 게임 180명 등이 배출

표 4. 충남의 문화산업 연관 분야 특성

부분별 내용	
관광산업	- 자연관광 자원 : 국립공원 계룡산, 도립공원 대둔산, 태안 국립해양공원 등 - 인문관광 자원 : 백제문화유산 애국충절지사 유산 등이 풍부하게 존재함
교육/연구/과학기술인프라	- 전국 연구소의 3.4%인 202개 연구소가 충남에 소재, 연구개발비는 2.9%로 열악 - 투자는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등 물리적인 인프라 조성에 중점 지원 반면 RCC, 산학연 컨소시엄, TBI, BK21 등 소프트한 부분에는 지원이 미약 - 년 5만여명 대학졸업인력 배출 (2만 5천명 실질 공급), 천안지역 국내 최대 대학촌 형성
산업육성기반	- 천안외국인 전용 국가산업단지 및 아산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현재 6개의 국가공단 조성 - 충남의 지방산업단지는 총 22개 (천안 8, 연기 4, 아산/서산 3, 논산 2, 보령 1) - 천안·아산 등의 충남 서북부 지역에 충남 전체 벤처기업의 66.2%가 분포되어 있으며, 대전 근교지역인 논산, 금산, 연기 지역에 17.4%가 분포 (충남 테크노파크, 천안밸리 등 집적지) - 천안, 아산 지역에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사업장 등이 들어서면서 활성화
지원시스템	- 금융지원, 창업지원, 벤처지원 등 프로그램 있음 -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연수원, 충남중소기업지원센터, 충남산업정보망, 충남산업기술정보센터, 충남인터넷무역센터 등 지원 기관 활동

- 천안권역 내 12개 대학이 집적된 IT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인력풀을 형성함
 - 반경 10km 내에 소재한 백석대학, 천안대학교, 단국대학교, 호서대학교 등 12개 대학에서 600명의 IT관련 교수진과 전문연구인력 및 3,000명의 IT전공 졸업생을 배출하는 유일의 강력한 "IT인력풀"을 형성하고 있음.
 - 그러나, IT 관련 전공 졸업생 중 85% 이상이 수도권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경제 및 IT산업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

표 5. 충청남도 문화산업 관련 집적시설

명 칭	면적(천평)	입주기업수(개)	주요사업영역	비 고
충남테크노파크	53	43	중소벤처육성	IT관련
충남영상미디어 사업화센터	5	60 (예정)	디지털콘텐츠 제작	'05년 완공예정
충남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센터	3	-	디스플레이 산업지원	사업추진중
충남중소기업 지원센터	3	20	중소기업 기술지원	중소기업지원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171	-	애니메이션	'04년말 완공목표
홍익대 영상테마파크	300	-	영상 엔터테인먼트	오픈세트, 공연시설 등
대학창업보육센터 (남서울대학교외 17개)	-	150	중소벤처육성	-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04).

표 6. 충청남도 문화산업 관련대학 및 인력배출

CT 관련 산업	학교수(개)	관련학과 수	연간배출인력(명)
총 계	(16)	63	2,800
디지털 정보	4	4	180
디지털 출판	2	5	190
디지털 게임	4	4	180
디지털 영상	11	21	915
e - Music	5	5	200
웹 캐스팅	3	3	120
멀티미디어	8	9	530
기타(패션, 디자인 등)	7	12	485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04).

2. 문화산업 특성과 충남의 관련 역량

- 첨단문화산업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킹 첨단기술과 연계된 산업
 - 일반적으로 첨단문화산업은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 즉, 전자게임, 전자영상, 전자출판, 전자음반 등으로 분류함
 - 이 첨단문화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킹, 콘텐츠 중심으로 기술이 변화되었고, 기술변화에 따라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 정보·지식, 지식·문화로 가치

의 중심영역이 변화하고 있음

- 현재, 충남은 이러한 기술 및 가치변화의 필요충분조건을 구비하고 있음

■ 생산기반 면에서도 기초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천안·아산지역 창업보육센터 내 영상미디어관련 기업(S/W, 인터넷 업체 등 포함)은 모두 98개 업체임

- 현재, 충남테크노파크 내 영상미디어 관련산업(방송수신기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업체는 38개에 이릅니다

- 충남의 문화산업 인프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과 충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조성된 천안밸리, 연기의 영상애니메이션 테마파크(홍익대)가 있음

- 현재, 공주·부여 일원에 문화산업단지와 보령에 시네마월드를 조성할 계획

■ 과학기술기반 측면에서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가 연구기능을 제공

- 대학은 공주영상정보대 등 5개의 전문대와 공주대 등 4년제 대학 15개교, 홍익대 등 대학원 2개교가 소재하고 있음

- 연구기관으로는 인근의 한국과학기술원 가상현실연구센터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서대, 홍익대, 한서대 등 애니메이션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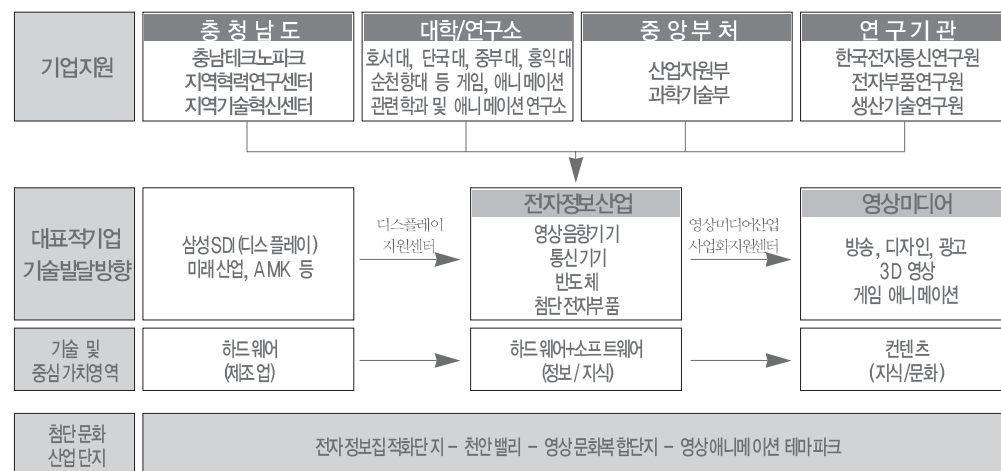


그림 1. 충남 문화산업 환경 요소

표 7. 충청남도 문화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현황

대학명	혁신자원(학과, 연구소, 센터 등)
천안외국어대학	· 디지털디자인 · 컴퓨터음악 전공
천안대학교	· 멀티미디어 · 컴퓨터 애니메이션 · 영상애니메이션 전공
신문대학교	· 전자정보통신학 · 컴퓨터공학부, IT교육원, 차세대 소프트웨어 연구소
상명대학교	· 영상 · 만화 · 디자인학부, 디자인 연구소
남서울대학교	· 애니메이션 · 멀티미디어전공, 디지털미디어 창업보육센터
호서대학교	· 게임공학 · 뉴미디어 · 정보보호 · 애니메이션 · 영화 전공 · 첨단정보기술 대학원 게임애니메이션 학과 · 문화콘텐츠 대학원 게임학과
단국대학교	· 멀티미디어학 전공, 창업보육센터, 멀티미디어 산업기술 연구소
순천향대학교	· 애니메이션, 연극영화, 신문방송, 산업정보대학원애니메이션학과, 영상미디어연구소, 전자상거래소프트웨어연구센터
한국기술교육대	· 멀티미디어 · 인터넷 S/W · 정보보호공학, 창업보육센터
아산정보기능대	· 멀티미디어 · 컴퓨터애니메이션 · 시각디자인
중부대	· 게임학과
공주영상정보대	· 게임디자인학과
홍익대	· 게임공학부 게임 전공
한서대	· 영상융합과, 영상연출과, 영상미술과, 영상 · 애니메이션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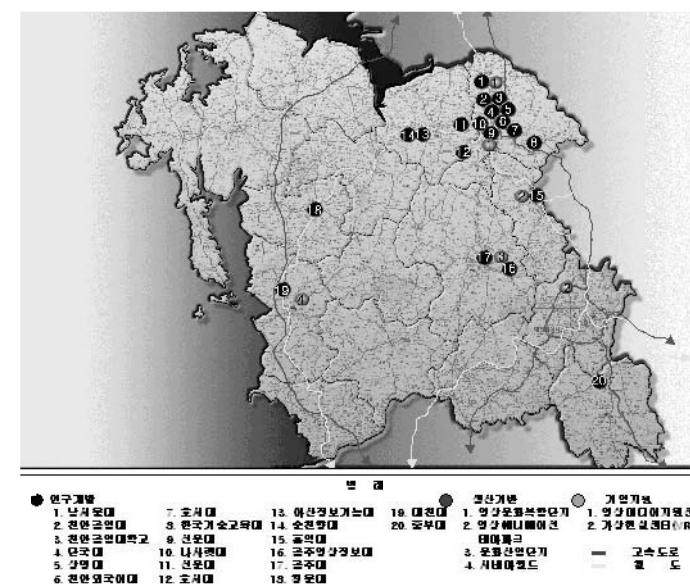


그림 2. 충청남도 문화산업 자원 분포도

- 기업지원기반으로는 충남테크노파크가 있음
 - 천안밸리 내에 시제품 제작을 위한 Pilot Plant와 벤처기업 입주를 위한 영상미디어벤처센터가 2005년 하반기 들어설 예정
 - 이 센터는 영상미디어산업 관련 H/W와 S/W를 함께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기기 부품생산기술에 관한 지원 사업도 전개하게 됨
 - 충남도 과학산업과에 디스플레이 산업과 함께 게임·영상산업 지원을 위한 TF팀을 신설

3. 관광산업 여건 현황

- 관광자원의 측면에서도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산업과 연계, 융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자연관광자원은 국립공원 계룡산과 도립공원 대둔산, 칠갑산, 덕산이 있으며, 충남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온천은 덕산온천, 온양온천, 천안온천, 수덕온천, 마곡온천, 홍성온천, 도고온천이 있음
 - 인문관광자원은 충남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94개, 지방문화재 314개, 문화재자료 283개 등 총 791개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음. 특히, 백제문화권의 거점지역인 공주시와 부여군에는 충남 국가문화재의 41%인 80개, 지방문화재의 33%인 102개가 집중 분포
 - 또한, 가야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내포문화권은 안면도, 신온리, 안흥항, 신두사구 등 천혜의 해안관광자원과 마애삼존불상, 수덕사 등 백제불교문화, 솔피성지, 해미읍성 등 천주교 성지, 김좌진, 윤봉길, 한용운 등 애국충절지사, 예덕 상무사, 보부상 유품, 오천성, 안흥진성 등 해상교역의 전통 문화유산이 소재
 - 전통민속마을 및 농어촌 휴양관광자원에 전통민속마을로는 아산 외암마을이 지정되어 있고, 농어촌 휴양단지로는 한산휴양단지와 도비도가 있으며, 어촌체험관광마을로는 서천의 송석마을 등이 지정
- 관광상품은 지역 축제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음
 - 문화관광축제 :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축제로는 서천 모시문화제, 보령 머드축제, 금산 인삼축제, 서산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가 있음
 - 지역 내 문화축제 : 전통민속축제 11건, 특산물 축제 12건, 지역문화축제 8건, 이벤트 축제 10건 등 총 41건의 다양한 축제가 있음

4. 충남 문화산업 SWOT 분석

- 문화산업 리더 충남 건설
 - 한국의 역동적인 디지털문화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산업내 디지털방송, 영상미디어 분야의 중심지(Hub)이자 교육과 연구, 체험의 명소로서 충남의 천안, 아산 일대를 디자인
 - 이로써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디지털방송/영상미디어 관련 클러스터 브랜드(cluster brand)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함

표 8. 충남 문화산업 역량 분석

도내 문화산업 역량 분석	
강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내포문화권의 다양한 문화유산으로 첨단문화산업 창작소재 풍부 - 천안·아산지역에 집적된 하드웨어산업(미디어기기)와 연계가능 - 국내 최대시장인 수도권과 접근용이와 대덕연구단지연계가 양호한 입지 - 첨단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과 R&D기관의 소재로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고, 12개 대학이 영상문화단지와 천안밸리를 중심으로 집중분포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시·도에 비해 늦은 대응으로 문화산업 기반 미약 - 게임·영상관련 대기업 및 업체수의 절대적 부족 - 금융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 취약
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서대, 한국기술교육대 등의 창업보육센터와 각종 신학협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eXsoft, 꿈과 미래, Visual Zio 등과 같은 벤처업체가 활발히 창업중에 있음 - 사이버 전국체전의 성공, 영상미디어사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위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문화사업 관련 원천기술 부족과 단기간에 고급인력 확보의 어려움 예상 - 창작, 기획, 기술개발, 마케팅 인력 및 사업체의 수도권 역외유출과 문화산업의 지역 육성 한계 -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화 및 경쟁관계의 압박과 High Risk, Return산업의 속성이 주는 위험 상존

1) 강점(Strength)

- 백제·내포문화권의 다양한 문화유산으로 첨단문화산업 창작소재 풍부
- 보령 머드, 서산 철새기행전, 금산 인삼 등 국제적인 향토축제 연례 개최
- 천안·아산지역에 집적된 하드웨어 산업(영상음향기기 등)과 소프트웨어 산업 연계가능
- 문화산업 인프라로 영상문화복합단지, 영상애니메이션 테마파크와 함께 영상미디어센터가 핵심 플랫폼으로 장비구축 및 공간확보 용이

- 국내 최대시장인 수도권과 접근용이와 대덕연구단지 연계가 양호한 입지
- 첨단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과 R&D기관의 소재로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고, 12개 대학이 영상문화단지와 천안밸리를 중심으로 집중분포
- 중관촌, 베이징TV와 협력협약 등 해외시장 개척과 지방정부의 강한 육성 의지

2) 약점(Weakness)

- 게임·영상애니메이션 산업의 국내시장 협소 및 제품의 국제화 부족으로 문화소비, 콘텐츠 유통 열악
- 금융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 취약
- 게임관련 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문화산업 기반 미약
- 게임·영상관련 대기업 및 업체수의 절대적 부족

3) 기회(Opportunity)

- 사이버 전국체전 성공, 영상미디어사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디지털콘텐츠 진흥원 설립으로 콘텐츠 제작자, 서비스지원자, 콘텐츠 바이어, 하드웨어 업체 등의 연합체를 결성, "하드웨어+소프트 용 복합"을 실행
- 게임산업특화를 위한 벤처촉진지구 조성 및 지속적인 지원
- 도 출자법인인 노리아의 해외마케팅 활동으로 게임산업 육성지와 영상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한 게임산업 혁신시스템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순천향대, 호서대, 한국기술교육대 등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eXsoft, 꿈과 미래, Visual Zio 등 벤처업체가 활발히 창업 중에 있음

4) 위협(Threat)

- 게임·영상 관련 원천기술 부족과 단기간에 고급인력 확보의 어려움
- 온라인 상 불법복제 및 유통으로 인한 관련시장의 위축과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사업
- 기술개발인력 및 사업체의 수도권 역외유출과 문화산업의 지역육성 한계
-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화 및 경쟁관계 및 고수익, 고위험(High Risk, High Return) 산업으로서 갖는 본질적 제약

III. 충남 문화산업의 성장전망 및 발전비전

1. 도내 문화산업 육성의 목표, 비전과 기대효과

-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하여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실현
- 지역 경제 발전
 -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유망 산업으로서 문화산업을 선정,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으로써 제조업과 오프라인 유통업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는 충남 지역의 산업 기반과 구조를 재편하고 고도화, 특히 창조력과 상상력이 경쟁 자산이 되는 문화산업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소프트화, 서비스화 방향으로 혁신함으로써 새로운 부와 고용을 창출
 - 지역의 우수한 디지털, IT 기업 및 기술을 활용하여 첨단문화산업 중심지로서 충남을 자리매김함으로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상호 결합하는 복합적인 신산업 선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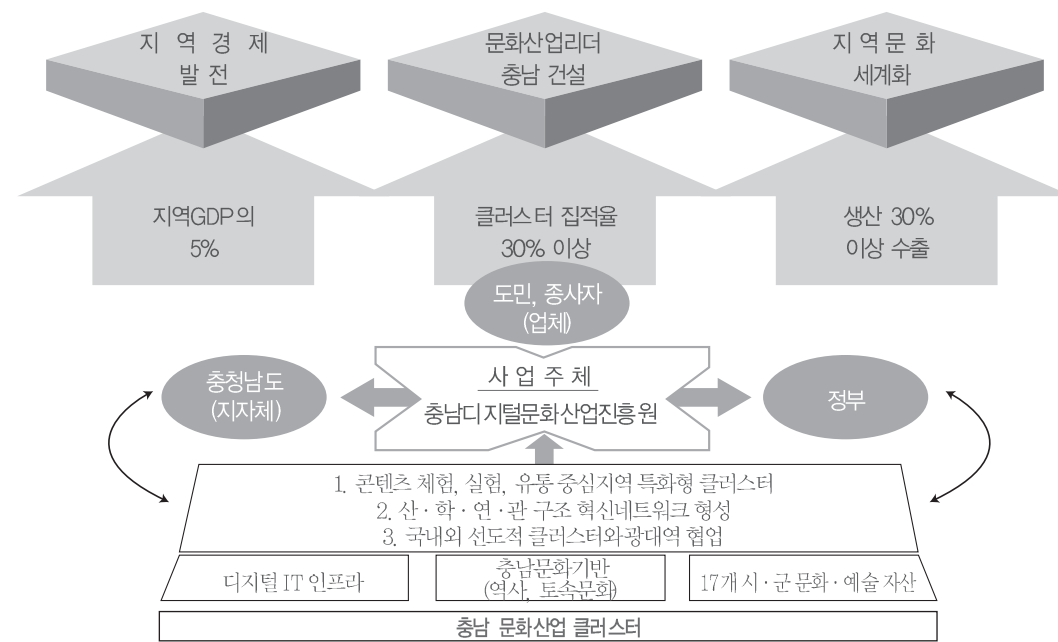


그림 2.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기본 방향 개념도

표 9. 비전과 목표 내용

비 전	
지역경제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과 오프라인 유통업 중심으로 치어쳐져 있는 충남 지역의 산업 기반과 구조를 재편하고 고도화, 특히 창조력과 상상력이 경쟁 자산이 되는 문화산업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소프트화, 서비스화 방향으로 혁신함으로써 새로운 부와 고용을 창출- 지역의 우수한 디지털, IT기업 및 기술을 활용하여 첨단문화산업 중심지로서 충남을 자리매김함으로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상호 결합하는 복합적인 신산업 선재권을 행사 <div>지역GDP 5%</div>
문화산업리더 충남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역동적인 디지털문화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산업내 디지털 방송, 영상미디어 부문의 중심지(Hub)이자 교육과 연구, 체험의 명소로서 충남의 천안, 아산 일대를 디자인- 이로써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디지털방송/영상미디어 관련 클러스터 브랜드(cluster brand)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 <div>클러스터 집적률 30% 이상</div>
지역문화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찬란한 백제의 왕도, 충절의 고장, 천주교 전래지 등 유서깊은 전통 문화예술 보전 전승의 중심지로서 풍부한 문화자산 존재- 이러한 역사 문화자산, 토속 문화 원형을 발굴, 복원하는데서 더 나아가 산업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로 재창조하고 관련 비즈니스를 기획함으로써 '세계와 직접 교류하는' 개방적 문화산업을 지향 <div>생산의 30% 이상수출</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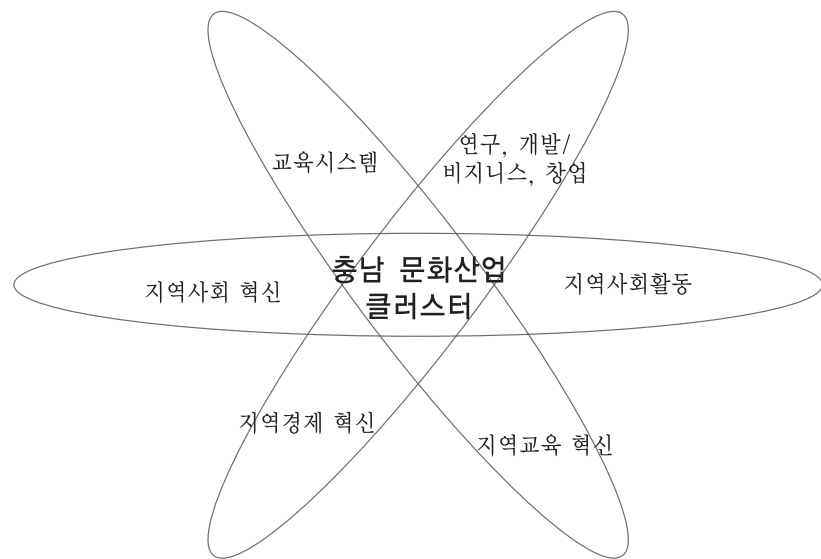


그림 4. 지역 혁신 체계도

■ 지역문화의 세계화

- 찬란한 백제의 왕도, 충절의 고장, 천주교 전래지 등 유서 깊은 전통 문화예술 보전 전승의 중심지로서 풍부한 문화자산 존재
- 이러한 역사 문화자산, 토속 문화 원형 등을 발굴, 복원하는데서 더 나아가 산업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로 재창조하고 관련 비즈니스를 기획함으로써 '세계와 직접 교류하는' 개방적 문화산업을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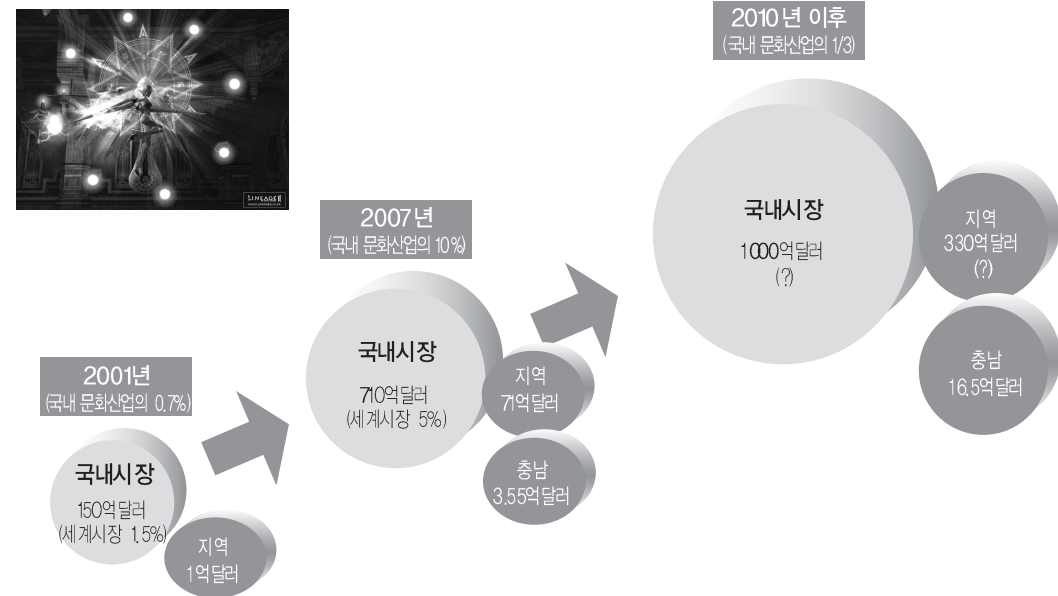


그림 5. 충남 문화산업 규모 목표치

* 주 : 2002년 현재 충남 지역 GDP의 전국 비중은 4.44%, 2007년에는 이 지역 GDP가 4.5%, 2010년에는 5%가 되는 것으로 가정 이 가정에 따라 국내 문화산업규모의 지역(서울 제외) 생산 총액 가운데 2007년은 4.5%, 2010년 이후는 5%를 충남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것으로 설정

2. 도내 문화산업 육성 전략 기본 방향(특성화 방안 등)

■ 지역 디지털콘텐츠 산업 기반조성

- 지역의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문화산업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디지털콘텐츠 산업기반 조성과 지역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의 Post(기)로 활용
- e-Consulting, e-Learning, 시장정보 제공, 해외진출, 전문가 파견 및 운영비 등 지원
- 디지털콘텐츠 멀티플렉스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센터별로 창업보육, 비즈니스,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자금 지원, 교육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BI(Business Incubator) 매니저를 양성하여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
- 센터별로 경영 노하우와 제작 정보교류를 위한 "지역센터 운영자 포럼"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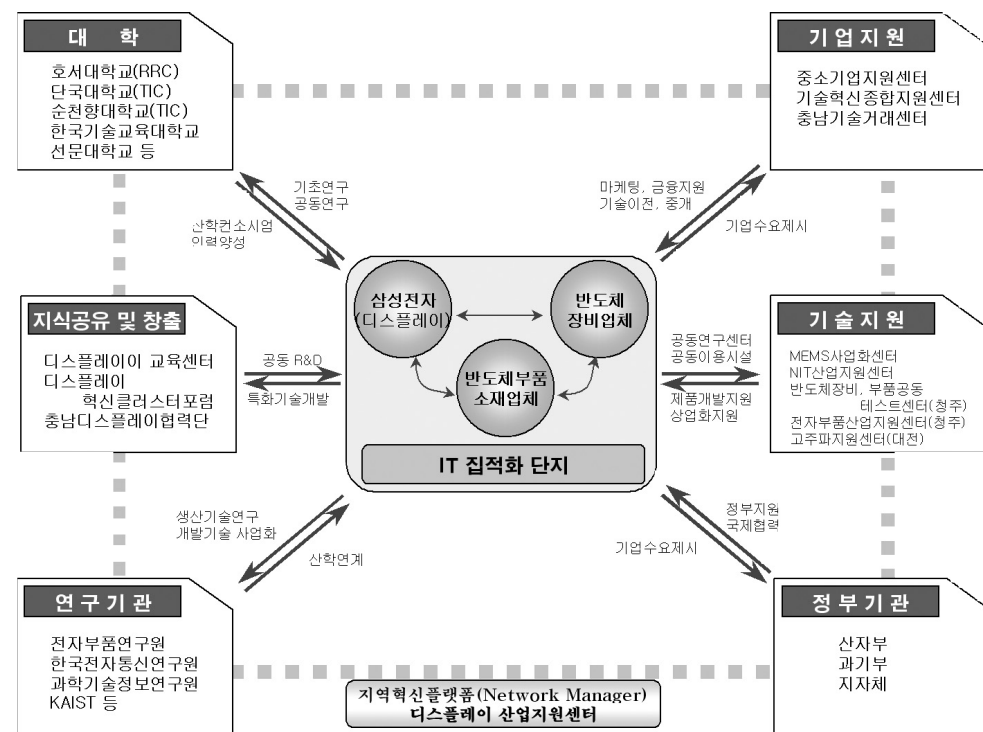


그림 6. 첨단 문화산업 지역혁신체계 모형도

출처 : 제1차 충남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2004~2008)

- 지역내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 등을 지역별 특성화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DC기업과 상호 네트워크 구축
 - 지역 DC기업이 지역별 센터의 첨단설비를 이용하여 연구개발 및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추진 (산·학·연 공동으로 디지털콘텐츠 핵심기반 기술개발 등)
 - 산·학·연 공동 "기술워크샵" 개최, 첨단기술장비에 대한 기술연수 활동지원과 공동협력사업 발굴
- ⇒ 이러한 정부의 관련 정책들의 운용에 따라 충남은 첨단 문화산업의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 ⇒ 이는 산학협력, 기업간의 원활한 네트워크, 연구개발이 기반이 된 인프라의 구축,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 및 역할분담 등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과제
- ⇒ 이를 통해 지역혁신체계는 지역혁신 플랫폼(Network Manager)을 중심으로 생산지원체계-과학기술체계-기업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구축할 필요 있음
- ⇒ 행정수도 조성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사례로 남기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아문화산업에 총 집결해야 함

3. 중점 유치업종의 선정 및 혁신인자

- 충남 문화산업 기반 구축 및 육성은 단기적으로는 충남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구체적인 과업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국내외 추세를 감안한 바람직한 전략 기조가 될 것임
- 특성화된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방송/영상 미디어>을 중점 유치 업종으로 선정
 - '디지털방송 / 영상'을 중점, 특성화 부문으로 설정 : 수익성, 성장성, 차별성, 객관적 여건(환경), 주관적 조건(내부 역량), 경제성, 국고지원획득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감안하여 도출, 충남 문화산업의 주력 핵심 부문으로서 요건 충족

표 10. 유치 업종 도출 근거

중점 주력 핵심 부문 도출 근거	
환경(여건)분석	- 지역 내 관련 산업 기반이기도 한 디스플레이산업(천안, 아산 탕정 삼성전자)과 연계 효과를 기대한다는 측면에서도 디지털방송/영상미디어 부문이 적합 - 백제문화권을 비롯한 콘텐츠 원형을 활용한 창작소재개발, 글로벌화 기회를 방송/영상미디어에서 추구 -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디지털방송 관련 영상산업발전 속도, 정책 프로그램 지원이 문화산업에서도 가장 확실한 부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콘텐츠는 물론 하드웨어(기기, 기술)과 네트워크 관련 산업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산업매력도가 이미 검증되어 있음
내부역량분석	- 충남 테크노파크 천안밸리 영상미디어사업화센터가 갖춘 인프라의 성격상 광범위한 디지털, 뉴미디어 영역의 영상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고 사업화 할 수 있음 - 충청남도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이 방송 영상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2004. 10. 7)
재원확보 가능성	- 천안시에 건립중인 영상미디어사업화센터(사업규모 348억원 : 현재 60여억원 집행)를 문화산업 거점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음(국고 지원 심사시 높은 평점 획득 가능, 이른바 '지렛대 효과'를 볼 수 있음)
파급효과	-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유력 산업으로 위상을 확보한 '디지털방송'이 갖는 사업성과 경제적 효과(고용, 수출, 콘텐츠 및 기술 선제권 확보 등)를 중시할 필요 있음 - 따라서 구체적인 영상미디어 전략 산업 영역으로서 '디지털방송'을 우선 제시하는 것임

표 11. 디지털방송/영상 미디어 영역

구 분			정 의
제작	디지털 정보	전문 정보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형태의 전문 정보(예 : 법률 정보, 금융 정보 등)
		일반 정보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형태의 일반 생활이나 기타 정보(예 : 상품 정보, 생활 정보, 기타 등)
	디지털 출판	e-Book	- 책의 구조를 가진 Viewer가 탑재된 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콘텐츠 비즈니스
		웹출판	- 웹신문, 웹진, 웹사전, 웹만화 등 인터넷을 통하여 발간 되는 지식 전달용 콘텐츠
	디지털 게임	PC게임	- PC기반 게임
		온라인게임	-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되는 게임
	디지털 방송/영상	특수편집 영상물	- 방송, 영화, 광고 등에 이용될 특수편집 영상 및 컴퓨터 그래픽 작품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영화/애니메이션	- 2D/3D 등 컴퓨터 그래픽과 HDTV 기술, 쌍방향 데이터방송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 애니메이션
		사이버 캐릭터	- 상품화를 목적으로 디지털화된 2·3차원의 형상모델(예 : 아담, 루시아 등)
		전시영상	- 이벤트 및 홍보용으로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하여 제작된 전시용 영상
	교육용 콘텐츠	온라인형 콘텐츠	- 영상, 음성, 그래픽, 텍스트 등으로 이루어진 양방향 학습 프로그램
		패키지형 콘텐츠	- CD, 디스켓 등의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학습프로그램
	e-Music		- 인터넷을 통한 유료유통을 목적으로 기획·제작되는 음악용 콘텐츠
	웹 캐스팅		- 인터넷을 통한 중계서비스
	시뮬레이션		- 건축, 환경, 기계동작, 모의 전쟁 등을 컴퓨터그래픽으로 구현
	원격 진료		- 진료를 목적으로 디지털화된 화상 및 음성을 송수신
	메일링 서비스		- 이메일을 이용한 맞춤형 정보제공
	모바일 콘텐츠		-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서비스
유통	네트워크		- 유선인터넷, 무선통신(무선인터넷포함), 디지털방송 등
	패키지		- 신디케이트, 오프라인 디지털콘텐츠 유통(CD롬 타이틀, DVD, VCD) 등
서비스지원	기술		- 과금결제 솔루션,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CMS(Contents Management Solution),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등
	사업		- 콘텐츠 비즈니스 컨설팅, 인력양성, 금융, 법률 등

출처 :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종합계획(정보통신부, 2001. 4)

4. 연관 산업 연계방안 및 육성 전략

- 디지털방송/영상 미디어는 초기 특성화 영역으로서 출발하여 이후 종합화, 융합화 단계를 지나면서 문화콘텐츠 전 영역으로 사업대상과 범위를 확장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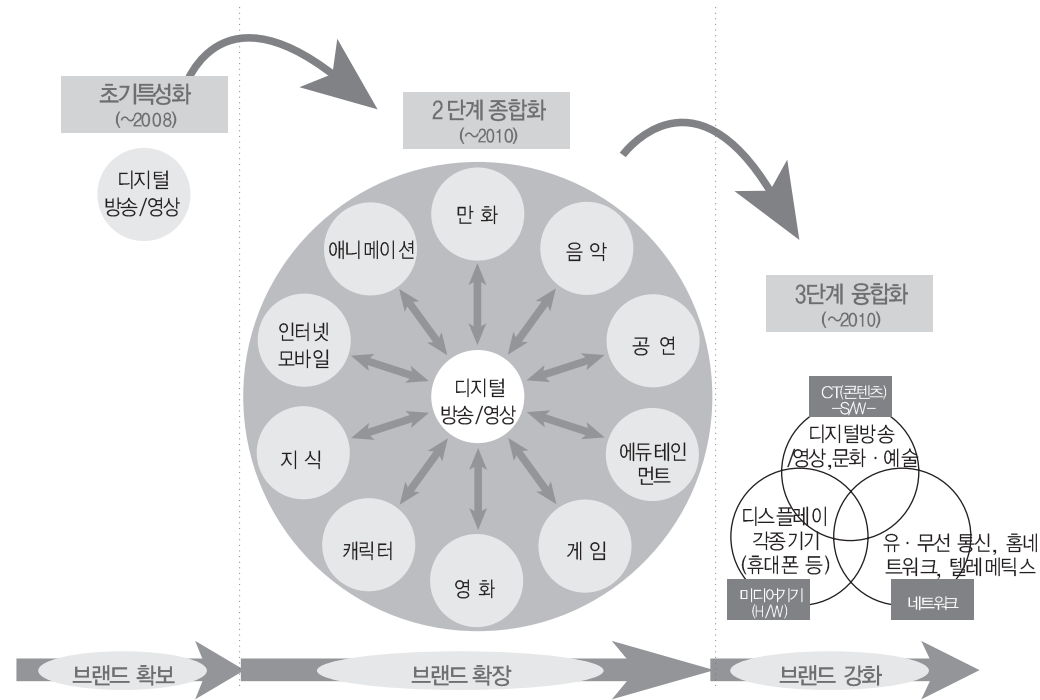


그림 7. 중점 유치업종과 확산 전략 기본 로드맵

- 디지털방송/영상 미디어를 초기 특성화 부문으로 설정한 것은 충남 디지털문화산업클러스터의 전국적 브랜드를 확보하고자 함임
- 이후 디지털방송/영상 미디어를 문화콘텐츠 전체 장르로 확산시키는 전략은 <브랜드 확장> 차원임
- 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산업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해가며 CT(콘텐츠)와 네트워크, 미디어 기기(하드웨어)의 3자간 융합화를 주도한다는 취지는 충남 디지털문화산업클러스터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글로벌화 한다는 뜻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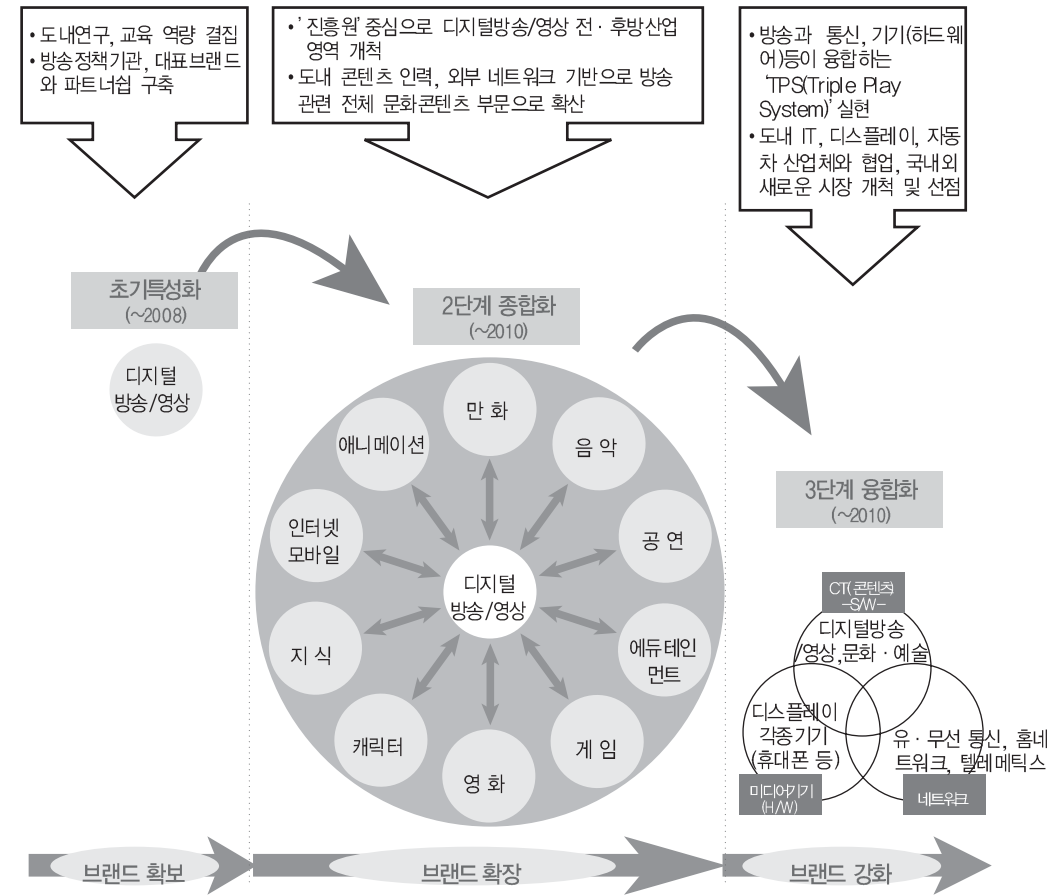


그림 8. 문화산업 클러스터 브랜드 확보, 확장, 강화 전략 실천 방안

- 디지털 방송/영상 미디어를 통한 <초기 특성화> 과정에서는, '도내 연구, 교육 역량 결집', '방송정책 기관, 대표브랜드와 파트너십 구축' 등을 실행
- <2단계 종합화>에서는 사업 주체인 '충남 디지털문화산업 진흥원'을 중심으로 디지털방송/영상의 전후방 사업 영역을 새롭게 개척해나가야 하며 아울러 '도내 콘텐츠 영역, 외부 네트워크(서울 등 타지역) 등을 기반으로 사업 대상을 방송과 관련한 전체 문화콘텐츠 영역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실천

- 3 단계 융합화에서는 방송과 통신 기기(하드웨어) 등이 융합하는 미래형 TPS(Triple Play System)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견인해내고 도내 IT, 디지털, 자동차 산업 등과 연계, 협업하여 국내외 신규 시장을 개척
- 디지털방송·영상 미디어를 주력으로 삼아 4개 분야 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함께 제시

디지털방송·영상 미디어 -충남 문화산업 클러스터 특화 영역-			
전문국제 상설마켓 운영	기술 연구 콘텐츠 개발	인적 자원 배출, 재교육	지역 문화 소재 발굴
사업내용 I	사업내용 II	사업내용 III	사업내용 IV
비즈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방송·영상미디어 콘텐츠 부문 벤처, 창업 - 산화 협력 - 서울 등 타지역과 협업 - 국제 프로그램 마켓(건본 시장) 조성 및 운영 	연구개발(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방송·영상미디어 관련기술(HW, SW)연구·상품 개발 - 관련 디자인 연구, 개발 - 콘텐츠 경영, 시장 산업 조사 	교육/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체험, 몰입 실 질 교육 - 시민 참여 학습 - 기업체 종사자 재교육, 전문교육 - 교육/학습(에듀테인먼트)개발, 사업화 	지역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기기(디스플레이 등)와 내용물(콘텐츠)이 결합하는 최강 지역 혁신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브랜드화
방송제/페어 주최, 독립 프로덕션, 제4채널, DMC(케이블)유치	디지털방송, 연구소, 실험실 복합센터 운영 (DMB-Lab)	문화산업대학원 대학교 설치 추진, 대학 통합 과정/동아리 운영	최초 디지털방 송 시범 마을 조성 (D-cASTING Village, T-Caommunity, T-Gov.)

그림 9. 충남 문화산업 육성 전략

- 충남이 도내 문화산업 관련 역량을 모아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개시하고 이를 발판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국내 선도적 클러스터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타 지역을 압도할 수 있는 특성과 차별성을 담보해야 함. 또한 빠르고 제대로 된 글로벌화를 위하여 유럽, 중국 등지의 해외 선진 클러스터와도 'co-brand', 'co-marketing' 전략을 실행해야 함
- 충남은 또한 국내 다른 지역과 광대역 협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선도적 클러스터로부터 광범위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탄탄한 산, 학, 연,관 협력 시스템을 작동 시키는데도 주력해야 함

IV. 충남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세부계획

1. 부지 위치, 조성에정지 위치도

- 충남 디지털문화산업 클러스터는 1차적으로 천안시 일대를 최초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후 공주, 부여, 연기 지역과 보령, 태안 지역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
 - 1차 사업대상지인 천안 일대 부지위치는 천안시내 천안시 현청사(2005년 하반기 이전 예정)와 천안역 등 도심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영역으로 구상
 - * 핵심 지역은 도심의 천안시 현청사와 천안역 일대 1만여평 부지
 - * 확대된 클러스터 위성 지역은 천안밸리(영상미디어사업화 센터)와 천안시 전역, 아산시 기업 및 대학 특구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문화산업 기능들이 네트워크로 유기적으로 연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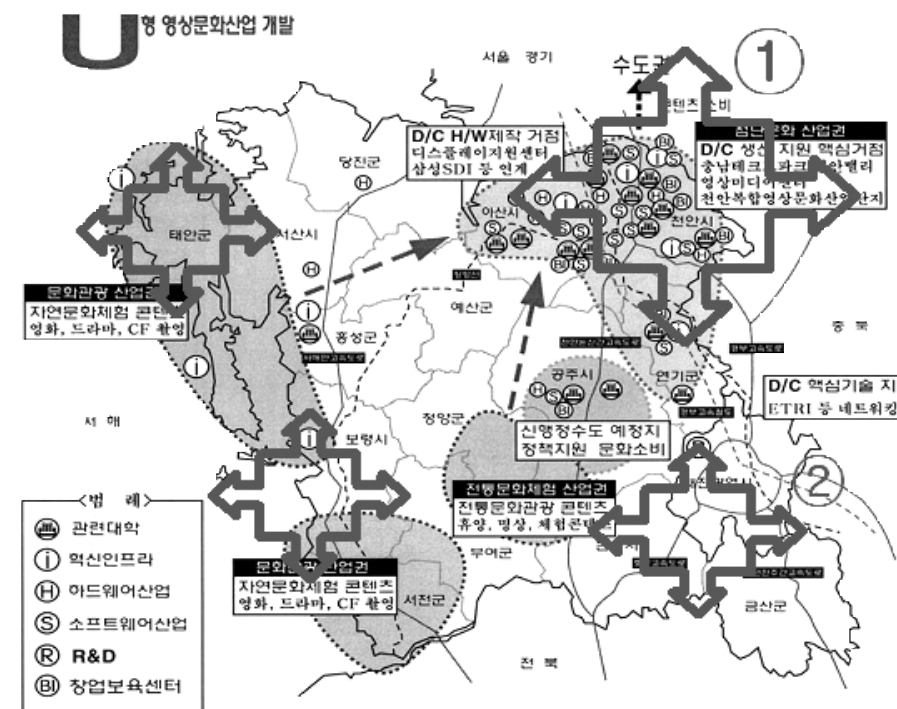


그림 10. 충남 문화산업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



그림 11. 충남 문화산업 클러스터 부지



그림 12. 충남 문화산업 클러스터내 영상미디어 사업화센터(II)



그림 13. 충남 문화산업 클러스터 핵심 구역

- 핵심 지역은 문화산업 관련 테마별로 나뉘는 특별 지구들로 구성됨
- 핵심구역 내 주요 시설 및 기관은 아래와 같음 (그림 참조)
 - *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 * 디지털문화콘텐츠쇼핑센터
 - * 청소년 문화콘텐츠 ZONE
 - * 워크스테이션(시민 학습, 재교육)
 - * 문화콘텐츠 산업체 및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컨벤션 센터, 상설전시장, 스튜디오 등)
 - * 대학촌 문화콘텐츠 광장
 - * 방송영상 테마파크
 - * 천안역 문화콘텐츠 정보센터
 - * 디지털미디어 체험 지구
 - * 세계 디지털문화축제 광장(충남 전통문화 체험관 등)
 - * 문화예술의 전당(대공연장, 소공연장, 갤러리 등)

03

충청남도 문화산업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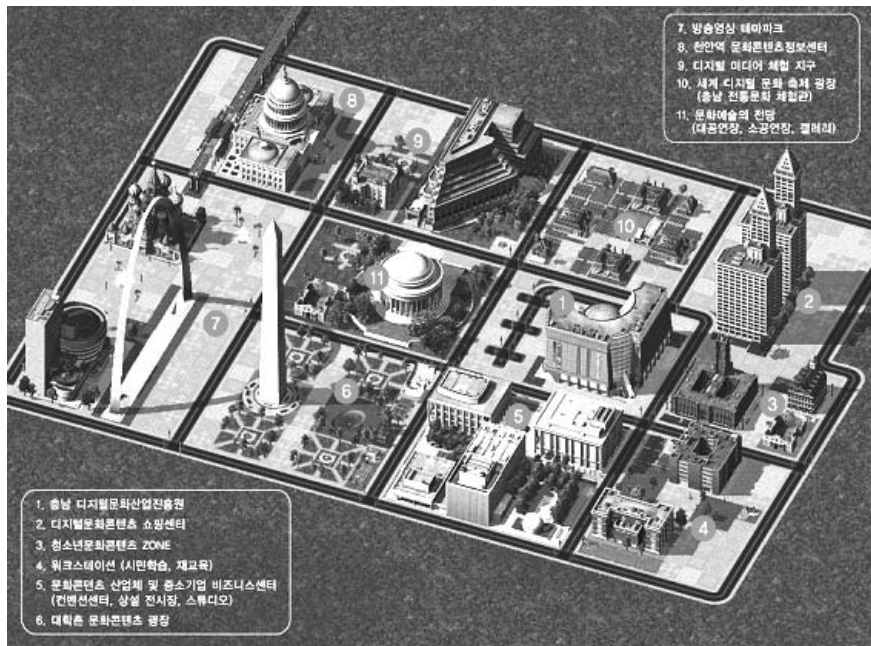


그림 14. 충남 문화산업 클러스터 핵심 구역 조성 개념도

- 핵심 구역내 디지털문화체험과 관련한 공간은 특별히 한국의 발달한 디지털, 모바일 관련 콘텐츠를 실험하기도 하고 (Test Bed), 홍보/마케팅 하기도 하며, 이용자들의 행태를 모니터링 하기도 하는(안테나 쉼)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게 됨
 - 홍보와 전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테마파크 문화 공간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 개념으로 설계, 운영

2.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추진일정

- 충남 문화산업클러스터 사업은 2005년부터 향후 10년여 동안 3단계별로 시기를 구분하여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 활동을 전개
 - 1 단계는 2005년중으로 <클러스터 골격 형성>을 하는 시기로서 우선 정책적으로는 '지역내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 '지정 절차 완료/국고 지방비, 민자 지원 개시'등을 완료하고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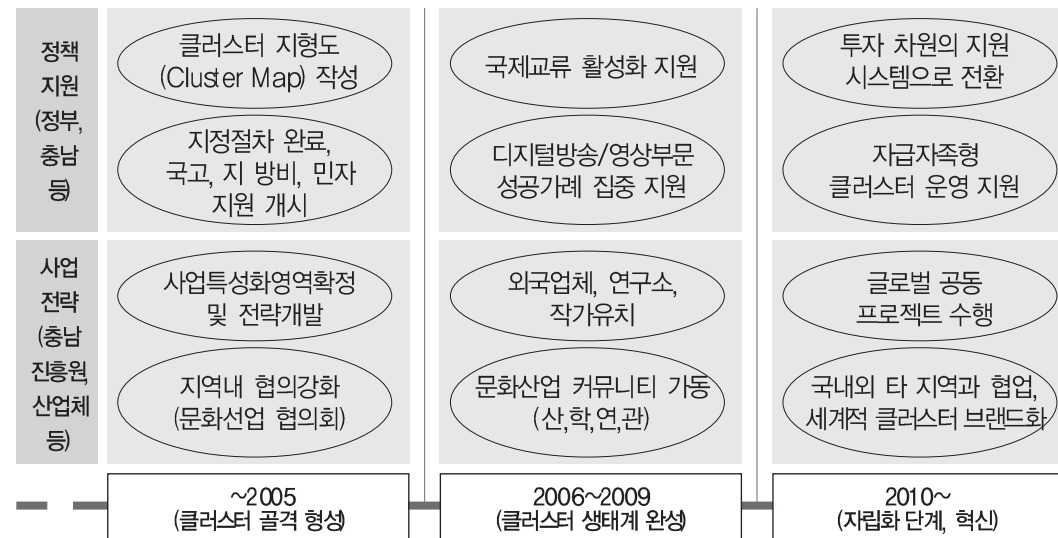


그림 15. 충남 문화산업 클러스터 사업 전략 로드맵

업전략적으로는 '사업특성화 영역 확정 및 관련 전략 프로그램 개발', '지역내 협의 강화' 등의 과업을 수행

- 2단계는 2006년부터 2009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정책적 과업으로서 '국제 교류 활성화 지원', '디지털방송, 영상 부문 성공 사례 집중 지원'이 있고 자체 사업으로는 '외국 업체 연구소, 작가 유치', '문화산업 커뮤니티 가동(산,학,연,관)'등이 있음
- 3단계는 2010년 이후를 가리키며 정책적으로는 '투자 차원의 지원시스템으로 전환', '자급자족형 클러스터 운영 지원'이 있고 사업 과제로는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 수행', '국내외 타 지역과 협업, 세계적 클러스터 브랜드화' 등의과업을 제시

■ 상세한 개별 사업별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구분	사업명	개시 년도	1단계 (2005~2007)	2단계 (2008~2010)	3단계 (2011~2014)
창업 보육 사업	글로벌 문화콘텐츠 마케팅 교육 및 세미나	2005년			
	문화콘텐츠벤처CEO 초청 워크샵	2005년			
	민간, 공공 인큐베이팅 협력 사업	2005년			
	디지털방송영상문화콘텐츠 전문전시회 및 계약대회	2005년			
	디지털방송영상문화콘텐츠 전문마케팅팀 운영	2006년			
	대기업, 벤처기업 파트너쉽 구축사업	2006년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프로그램	2007년			
	디지털방송영상문화콘텐츠 투자유치 사업	2007년			
	게임비즈니스 전시회	2008년			
	해외기업과 공동제작 지원사업	2009년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정비	2005년			
	지역 콘텐츠 리소스 센터(CRC) 유치	2006년			
	국내외 벤처 캐피털 유치	2006년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 기관 유치 및 접촉 화 사업	디지털방송영상문화콘텐츠 국내외 선도기업 유치 지원 사업	2007년			
	국내외 CT, IT관련 연구소 유치 지원 사업	2008년			
	CT 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사업	2011년			
	해외 디지털방송영상 관련 전문업체 유치	2011년			
	해외 디지털방송영상 관련 연구소 유치	2011년			
	전국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 공모사업	2005년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R&D 과제 공모 사업	2005년			
	문화콘텐츠 기업인력, 정보 DB화 사업	2005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2005년			
	디지털방송영상문화콘텐츠 선도시술평가자금 지원 사업	2006년			
콘텐츠 상품 화 및 연구 개발 사업	HDTV관련 기술 개발 지원 사업	2007년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 기술 평가 시스템 도입	2008년			
	첨단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2009년			
	상설 기술 거래소 운영	2011년			
	기술 개발 전용 펀드 운영사업	2011년			
	사이버 방송아카데미 운영	2005년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 학점 인정제 지원 사업	2006년			
	충남 콘텐츠 관련 동아리, 멤버십 활성화 지원	2006년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 전문가 풀 DB구축	2007년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 영재교육 사업	2008년			
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사업	외국교육전문기관과 협력 사업	2010년			
	외국교육기관 국내 분교 설립 지원 사업	2011년			
	글로벌 인력 해외 연수 지원 사업	2011년			

구분	사업명	개시 년도	1단계 (2005~2007)	2단계 (2008~2010)	3단계 (2011~2014)
기업 지원 사업	문화산업 특구 지정사업	2005년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 마케팅 전문회사운영	2005년			
	문화콘텐츠 정보제공기반 구축 사업	2006년			
	문화콘텐츠 종합지원단 운영 사업	2007년			
	문화콘텐츠 전용 펀드 조성 사업	2007년			
	콘텐츠 수출 지원 시스템 조성 사업	2009년			
	해외 클러스터 교류, 연계 기반 구축 사업	2010년			
	해외 우수 기업과 공동제작지원 사업	2011년			
산학 연관 협력 사업	산학 연관 협력기반 구축사업	2005년			
	산학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2005년			
	CT산업 교과과정 개편 지원 사업	2006년			
	국내외 산학연관 협력모델 벤치마킹 사업	2006년			
	산학연관 기술개발 로드맵 구축사업	2006년			
	산학연관 협력전담기구 운영사업	2007년			
	산학연관 정보센터 운영사업	2007년			
	Technical Connect Program 운영사업	2008년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 공모전	2009년			
	산학기반 신기술 콘텐츠 융합센터 운영사업	2011년			
네트 워크 구축 사업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 커뮤니티 운영사업	2005년			
	국내외 클러스터 네트워크 운영사업	2006년			
	국내외 콘텐츠 컨퍼런스 개최 사업	2006년			
	해외 문화콘텐츠 개발 자매도시 연결 사업	2008년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 조성 사업	2009년			

그림 16. 개별 사업 추진 단계별 일정

참 고 문 헌

- 구문모 외, 2000, 문화산업의 발전방안, 을유문화사
- 권오혁, 김홍석, 2000, 지방문화산업 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문미성, 2000, 산업집적과 기업의 혁신수행력: 수도권 전자통신기기산업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문화관광부, 2000, 문화산업비전 21
- 박삼욱, 1998,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정책과 산업단지 개발방향,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입지센터
- 박진수 외, 2002,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 1998, 지식기반산업의 발전방안, KID 정책자료 제74호, 산업연구원
- 유재운 외, 2000, 도시문화산업의 육성방안, 국토연구원
- 이공래 외, 2002, 우리나라 지식클러스터 실태와 육성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수영, 1998, '97 문화관광촉제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문화도시 문화복지 vol.30
- 이공래,심상완, 1999, 기업의 기술협력과 네트워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9-21
- 홍성범 외, 2002, 해외신흥학신클러스터의 성장 및 성장요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제2의 실리콘밸리를 위한 경쟁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문화콘텐츠진흥방안, 문화관광부
- 한재호, 1995, 과학기술단지의 조성방향과 향후 정책추진방향,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황주성, 이정성, 김영식, 김병준, 1999, 정보통신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서울 SW타운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99-17
- Amin, A. and Thrift, N., 1995, Globalisation, institutional "thickness" and the local economy in P. Healey, S. Cameron, S. Davoudi, S. Graham and Madani-Pour, The New Urban Context, John Wiley and Sons, London
- Asheim, B., 1996, "Industrial districts as learning region : A condition for prosperity,"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4, Aug., 379-401
- Batten, D.F., 1995, "Network Cities: Creative Urban Agglomerations for the 21st Century," Urban Studies, Vol.32, No.2, 313-327
- Camagni, R.P., 1991, Innovation networks: Spatial perspectives, Belhaven Press, London
- Camagni, R.P. and Salone, C., 1993, "Network Urban Structures in Northern Italy: Elements for a Theoretical Framework," Urban Studies, Vol.30 No.6, 1053-1064
- Christopher Freeman, 1987, Technology, policy, and economic performance : lessons from Japan, Pinter Publishers, London ; New York
- Christopher Freeman and Bengt-Ake Lundvall eds, 1988, Small countries facing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Pinter, London ; New York
- Cooke, P. and Morgan, K., 1993, "The network paradigm: new departures in corporate and regional develop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D, Vol. 11, No.5, 543-564
- Cooke, P., Uranga, M.G., and G. Etzebarria, 1998,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stitutional and organisational dimension," Research Policy 26
- Castells and Hall., 1994, Technopoles of the world : the making of twenty-first-century industrial complexes Routledge, London ; New York
- EDAW/Urban Cultures, 1998, Sheffield Cultural Industries Quater: Strategic Vision & Development study
- Lakshmana, T.R., and Okumura, M., 1995, "The nature and Evolution of Knowledge Networks in Japanese Manufacturing," Papers in Regional Science, vol.74, No. 1, 63-86
- Longhi, C., 1999, "Networks, Collective learning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Innovative high technology regions: The Case of Sophia-Antipolis," Regional Studies, Vol.33, No.4, 333-342
- OECD, 1996, Networks of Enterprises and Local development
- OECD, 1998, Focus Group on Industrial Clusters
- Oinas, P. and Malecki, E.J., 1999, Spatial innovation systems in Oinas&Malecki eds, Making Connections, Aldershot:Ashgate
- Roberta Capello, 1999, Sustainable cities and energy policies Springer, Berlin ; New York
- Saxenian, 1994, Regional advantage :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Scott, Dominic, 1995, Recollection and experience : Plato's theory of learning and its successors, Cambridge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ern, Scott, 2000, The Determinants of national innovative capacity, Cambridge, MA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orter, 2000, Measuring the "ideas" production function : evidence from international patent output, Cambridge, MA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orter, 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es of competition"Harvard Business Review Nov-Dec.

Yeung, H.W., 2000, "Embedding foreign affiliates in transnational business networks: the case of Hong Kong firms in Southeast Asia,"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32, no.2, 201-222

문화관광부, 2002, 문화통계연보

행정자치부, 2001, 한국도시연감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문화산업통계, 문화관광부

통계청, 1996, 서비스업총조사보고서

<http://www.helloodd.com>

충남의 민선자치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I. 머리말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의 직선을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채택된 이후 10년이 경과했다. 지난 10년간 지방자치제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10년 동안 자치입법, 자치경찰, 자치교육 및 행정·재정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음이 지적될 수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10년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7% 포인트가 감소되었고, 지방자치의 수행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지역주의 심화, 그리고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무분별한 시책과 사업추진 등의 시행착오가 빈번했다는 점이 비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난 10년은

지방자치의 학습기간으로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통제와 지시일변도에서 서서히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성과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주민의식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전에는 지역문제에 대한 외부의존적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노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세 번째의 성과는 지역의 자치역량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비록 인력,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자율권한과 능력에 제약이 큼에도 불구하고 10년간의 자치경험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지방분권 패러다임의 기초는 확고히 마련되었기 때문에 향후 10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획기적인 진전이 예견된다(김주현, 2005).

충청남도는 지방분권의 주창자로서 자치역량의 배양에 남다른 노력을 수행해 왔다. 이 글에서는 충남의 민선자치 10년의 도정방향과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고, 앞으로 예견되는 대내외 여건 변화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요자인 주민중심 마인드로 전환시키는 데 치중했다. 지역발전 차원에서는「4대권 개발경영구상」 및 「충남 New hope 21」을 수립하여 충남도가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 발전전략을 마련하였고, 기본 인프라 차원에서는 「충남 정보화 선언」을 통해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보령 댐을 건설하였다.

2) 민선자치 2기(1998. 7~2002. 6)

II. 충남의 민선자치: 정책기조와 성과

1. 충남도정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

1) 민선자치 1기(1995. 7~1998. 6)

충청남도는 민선자치 초기부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비전을 가지고 “인본주의행정”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목표로 도정을 운영해 왔다. 민선1기에는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지방행정 조직 내부의 자치역량 강화”를 도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민선자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자치역량과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정책실을 신설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을 설립하여, 자체 정책 및 자치행정능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중앙 및 공급자위주의 공직자의 사고와 관행을

민선자치 2기는 민선자치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발전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했다. 충남의 발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및 생산기반을 확대하였고,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긍지와 자신감 고취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이 기간 중에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선언,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 서해안 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관광 및 여가 산업 육성,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충남 선언」등 지역경제의 견실화와 미래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3) 민선자치 3기(2002. 7~2005. 현재)

민선자치 3기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촉진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역내부의 자치역량과 발전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중점

이 두어졌다. 특히 충남은 산업생산의 확대와 함께 행정도시의 건설 등 핵심적인 국책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의 위상과 역할이 점차 커지는 것에 대비하여, 충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Heart of Korea)으로 육성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와 연관되어 충남은 전국 차원에서는 “지방분권 촉구선언”을 주창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특히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의 뜻’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른 한편 지역적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업 테크노 파크를 개원하였고, 내포지역을 독자적인 문화권으로 지정받아 현재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기능적 연계를 위해 서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을 구축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석문공단 및 장항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산업육성과 혁신시스템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민선자치 10년의 지역발전 성과

민선자치 10년간의 성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행정역량의 강화, 시민의 참여와 주민자치 역량의 확립에서부터 지역발전

을 위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발전기반의 형성까지 다양하다.

특히 충남은 그동안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역량의 함양에 치중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그중에서도 건전재정의 실현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충남의 부채총액은 1995년 1,869억원에서 2000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연재해 증대로 4,338억원으로 크게 증대했으나, 그 후 건전재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부채가 2005년에는 851억원으로 민선자치 초기인 1995년의 1,869억원 대비 2배 이상, 2004년 4,238억원 대비 4배 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002~2004년간 3년 연속 전국건전재정운영평가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됐다.

충남도 민선자치 10년의 진정한 성과는 지역의 양적·질적 발전과 이에 따른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위상 격상을 들 수 있다. 첫째, 충남은 민선자치 10년 동안 인구의 감소지역에서 완만한 성장지역으로 변모했다. 민선자치 이전 충남의 인구는 1990년 201.4만 명에서 1995년 176.7만 명으로 13% 감소했다. 그러나 민선자치 이후 2000년 183.5만 명, 그리고 2005년에는 189.9만 명으로 증가했다. 둘째, 충남은 전통적 농업지역에서 민선자치기간 중 제조업의 비중이 전국의 충남인구 비중을 크게 상회하는 산업주도지역으로 변모했다. 1995년 충남의 제조업 종업원 및

생산액 전국 비중은 각각 3.8% 및 4.1%로 그 당시 인구 비중 4.3%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03년 현재 충남의 제조업 종업원 및 생산액 비중은 각각 5.2% 및 8.0%로 인구비중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의 2차 산업 비중은 1995년 27.3%에서 2003년에는 40.3%로 전국의 26.9%를 크게 상회하여 산업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충남은 국가성장의 배후지에서 국가성장의 선도지역으로 변모했다. 1995년~2003년간 전국의 GDP(2000년 불변가격)는 37.6% 증가한데 비하여 충남의 GRDP는 66.5%가 증가하여 전국 경제 성장률의 2배에 가까운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경제성장은 주로 제조업의 성장에 기인한 것이다.

〈 민선자치 10년간 충남의 주요지역 발전 지표 변화 〉

	1995	2000	2003
인구규모(천명) (전국비중%)	1,766.9 (3.96)	1,845.3 (4.00)	1,899.0 (3.95)
지역총생산(백만 원) (전국비중%)	20,941,551 (4.31)	28,962,820 (5.01)	34,877,823 (5.22)
1인당 GRDP 전국 비중	1.09	1.25	1.32
제조업 종업원수(명) (전국비중%)	112,358 (3.81)	129,484 (4.88)	143,375 (5.24)
생산액(백만 원) (전국비중)	15,071,065 (4.13)	39,131,782 (6.93)	54,243,276 (8.01)

*인구규모 2005년

예를 들면 1995~2003년간 전국의 제조업 종업원은 년 평균 0.95% 씩 감소했으나 충남은 오히려 년 평균 3.1% 씩 증가했고, 제조업 생산액 측면에서는 전국은 년 평균 8.4% 증가한데 비하여 충남은 17.4%의 놀라운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2003년간 충남은 전국의 제조업 신규 고용증가의 16.8%, 생산증가의 13.5%를 차지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파워하우스”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충남의 첨단제품의 생산 증

가로 우리나라 무역흑자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 9월 말 현재 충남의 무역흑자는 111억 200만 달러로 전국 무역흑자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충남은 민선자치 10년간 관광·여가산업의 급속한 증가로 농촌지역 경제의 소득증대 및 소득원 다원화에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민선자치 이전 10년간 충남의 관광객 증가율은 전국의 년 평균증가율 11.4%의 1/3 수준인 4.4%에 불과했으나,

1995~2003년간은 전국의 년 평균 성장률 3.7%의 3배에 가까운 9.4%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충남이 민선자치 10년간 우리나라의 어떠한 자치단체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성과를 거두면서,

〈 충남 주요통계 연평균 증감률 〉

(단위 : %)

구 분		1985-1995	1995-2003
인 구	전 국	0.98	1.02
	충 남	-1.87	1.00
GRDP	전 국	9.25	4.08
	충 남	10.81	6.58
업 체 수	전 국	8.13	1.99
	충 남	9.35	3.77
GRDP 종업원수	전 국	1.93	-0.95
	충 남	7.76	3.09
생 산 액	전 국	16.83	8.04
	충 남	24.10	17.36
관광객 수	전 국	11.4	3.65
	충 남	4.43	9.37

자 료: 인구총조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 지방재정연감, 대전 및 충남 통계연보 각 년도, 대전·충남 지역경제연보 각 년도

Ⅲ. 대내외 여건변화와 미래전망: 기회와 도전

1. 대외적 여건의 변화

1) 세계화와 중국 경제권의 부상

충남발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대외적 여건은 경제의 세계화와 중국경제의 부상을 들 수 있다. 지구촌 경제와 시장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로 국가간 집단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경쟁력이 높은 10여개의 국가가 세계 GNP의 80%를 생산하고 나머지 80%의 국가가 20%의 GNP를 생산하기

위해 경쟁하며, 사회적으로도 상위 20% 계층이 소득의 80%를 점유하고 80%가 나머지를 차지하는 양극화시대가 예상된다.

세계화의 추세와 함께 중국과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이 충남의 지경학적 지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이후 연평균 10%의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중국은 2002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5위의 교역, 세계2위의 외환보유고 그리고 세계1위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기록했다(이수훈, 2004: 124-125). 중국의 명목 GDP는 세계 7위 수준이나 구매력기준의 GDP는 6조 달러로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2위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의 고도성장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2015년이면 구매력 차원에서는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1:67). 이와 같은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우

리나라 대외교역 특히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4년 19.6%, 및 13.3%로, 미국에 대한 수출입비중인 16.7% 및 12.8%를 오히려 상회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해 보면 1997년에는 대중국 수출비중이 일본에 미치지 못했으나 2004년 대 중국수출액은 일본에 대한 수출액의 2배인 498억불 수준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의 부상에 따라 중국, 대만, 및 홍콩 등 중화권에 대한 교역비중 또한 이전의 미국과 일본 중심의 구조로부터 변화되고 있다. 2004년 현재 중화권에 대한 수출액은 778억불로 미국과 일본에 대한 년 간 총 수출액 646억불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통계청, 2005: 510-511). 우리나라의 개발축도 그동안 미국과 일본에 의존한 교역루트로 형성된 경부축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중화경제권을 지향하는 서해안축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중교역 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교역 총액 (B)	수출	766	822	960	1,251	1,297	1,362	1,323	1,437	1,723	1,504	1,625	1,938	2,538
	수입	818	838	1,023	1,351	1,503	1,446	933	1,198	1,605	1,411	1,521	1,788	2,244
	소계	1,584	1,660	1,984	2,602	2,800	2,808	2,256	2,634	3,327	2,915	3,146	3,726	4,782
대중국 교역 (B)	수출	27	52	62	91	114	136	119	137	185	182	238	351	497
	수입	37	39	55	74	85	101	65	89	128	133	174	219	295
	소계	64	91	117	165	199	237	184	226	313	315	412	570	792
비율 (B/A)	수출	3.5	6.3	6.5	7.3	8.8	10.0	9.0	9.5	10.7	12.1	14.6	18.1	19.6
	수입	4.6	4.7	5.3	5.5	5.7	7.0	7.0	7.4	8.0	9.4	11.4	12.2	13.1
	소계	4.0	5.5	5.9	6.4	7.1	8.4	8.2	8.6	9.4	10.8	13.1	15.3	15.1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5.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동북아경제권의 위상도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중국, 일본, 한반도 등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8%에서 2010년에는 27%로 2015년에는 30%를 상회하여, EU와 더불어 세계최대 경제권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의 교역량 증대는 이 지역의 물동량 증대를 가져와 물류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동북아지역 컨테이너 물동량의 변화 〉

(단위 : 백만TEU, %)

구 분	1998	1999	2000	2006	2011	2020
전 세계(A)	185	201	215	322	430	770
동북아(B)	50	54	58	97	137	277
B/A	27.0	26.9	27.0	30.1	31.9	36.0

자료 : Drewery Shipping Consultants(1998, 2000) 및 Ocean Shipping Consultant(1999); 전남·경남(2004),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9면 재인용

2) 정보화와 지식기반경제의 대두

충남발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대외적 여건으로는 정보화와 첨단기술의 대두에 따른 생산양식, 산업구조 및 경제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가발전전략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취업과 소득창출의 주된 원천은 대량생산에 기초한 제조업 생산기능이었으나, 최근의 기술혁신과 지식기반경제의 대두로 정보, 서비스 및 지식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원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 및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문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 여가 및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김용웅 외, 2003; 648-656).

이와 같은 거시적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국가발전전략기조도 기존의 요소투입형 발전전략에서 혁신지향적 발전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더 이상 요소투입형 산업생산을 지양하고 첨단기술과 제품의 개발, 정보와 지식의 창출, 다원적인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중시하는 소프트경제 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국가균형위원회, 2003).

3) 분권화 및 시민참여 확대

분권화는 중앙정부가 독점한 공공의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권한을 계층적인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와 자치단체로 분산하고,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민간부문의 자율단체와 비정부기관 등 민간 부문

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10년은 지방자치제의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10년 동안에는 실질적인 권력 분산(devolution)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7년 총액인건비제도의 전면 실시, 자치경찰제의 실시, 주민투표제(2004), 주민소송제도(2007)의 도입이 예상되어 획기적인 지방자율권 확대가 예상된다(김주현, 2005).

특히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분권화의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정부는 세계화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경제성장 전략을 지양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내생적 지역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목표는 지방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자립적 지역경제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자치단체의 자립과 자율의지가 더욱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분권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권화와 함께 예상되는 것이 주민의 참여의지 및 기회확대이다. 특히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와 역할증대가 예상되어 지역발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협력관계형성과 참여체계 마련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대내적 여건의 변화

1) 산업성장과 국가 중추기능의 확대

충남의 제조업 성장은 2004년도에도 이어져 연간 산업생산은 27.4% 증가하여 전국평균 11.2%의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수출증가율은 56.5%로 전국 평균 33.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¹⁾

이 같은 성장추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충남 아산탕정지역에는 68만평의 LCD단지가 조성되어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고 있고, 총 220만평의 LCD단지가 조성되어 30조원에 가까운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진지역에도 종업원 3,000명이상이 조업하게 될 대규모 철강생산이 본격화되고 있고, 앞으로 서해안 북부지역에 5,600만평에 달하는 경제특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어 충남은 신산업의 성장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더불어 국가적 중추관리기능의 확대도 예견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12부·4처·2청이 이전될 2,000여만 평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2020년까지 30만명, 2030년까지 50만명에 달하는

1) 2001~2003년간 제조업 지역별설비투자율을 보면 충남은 3년 평균 9.34%로 전국의 6.55%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 비중차원에서도 1064%를 차지해 전통적인 산업지대인 경기의 30.39%, 경북의 13.99%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박재곤·이원빈, 2005. 15~17면)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의 현대적 모범 신도시가 탄생할 것이다. 다른 한편 대전에 총 2,700만평에 달하는 대덕 R&D특구가 계획대로 조성되는 경우, 세계적인 R&D시설과 인력이 집중되고 첨단벤처기업과 다국적기업 및 대기업 본부, 국제적 비즈니스 여건도 갖추 수 있게 되어, 대전·충남권은 명실상부한 과학기술개발과 국가적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선도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저 출산 및 고령화의 급진전

향후 국가 및 지역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저 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인구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인구감소와 평균수명 증대에 따라 노령인구비중이 높아지면, 사

회적 생산 잠재력과 생산성은 떨어지고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는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이 지역개발에 있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의 가임기간(15세-49세) 중 평균자녀수는 2003년 1.19명으로 OECD 평균치 1.6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한 사회의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은 2.1명인데, 한국은 1983년에 이미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2.08인의 출산율이 나타났다. 2004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은 8.7%이다. 국제적으로 노령인구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 고령 사회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2000년 노령인구비율이 7%를 넘은 이래

〈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

구 분	도달년도			소요기간(년)		2002년65세 이상비율
	7%	14%	20%	7%→14%	14%→20%	
한국	2000	2018	2026	18	6	7.9
일본	1970	1994	2006	24	12	18.4
영국	1929	1976	2020	47	44	15.9
미국	1942	2013	2030	72	16	12.3
스웨덴	1887	1972	2011	85	39	17.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16.3

자료: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각년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3
OECD, 「OECD Health Data」, 2004.
(이원식(2006) 충남노인의 일자리 사업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121면 재인용).

급격한 고령화 추이로 노령인구비율이 2010년 10.9%, 2020년 15.7%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2005년 현재 노령인구비율이 14.4%로 추정되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0년경에는 초 고령사회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충남의 부여, 서천, 청양

군은 2005년 현재 노령인구비율이 각각 20.2%, 21.3%, 23.2%에 달하여 이미 초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공주, 보령, 논산시와 금산, 연기, 홍성, 예산, 태안, 당진군 등 9개 시군의 노령인구의 비율은 14%-19%에 달하여 고령사회에서 초 고령사회로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 시도별 노령인구 구성비 추이 〉

(단위 : %)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전국	3.1	3.8	5.1	7.2	9.1	10.9	12.9	15.7
충남	3.8	5.5	7.9	11.9	14.4	15.5	16.5	18.0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p15, 2005. 4.

3) 난개발과 지역 정체성 훼손우려 증대

충청남도는 산업성장의 증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개발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개발수요의 증대는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적 통제수단이 제한된 상태에서 개발수요가 폭증하면,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난개발과 환경 훼손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모범적 신도시가 건설되고 국가적 중추관리기능이 도입되는 등 급격한 사회-경제 및 물질 환경이 변화되면서 사회-경제적 이중구조의 형성과 함께

충남의 전통적 문화와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현재에도 공간적 구심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형적 성장과 함께 공간적 분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충남의 북부지역은 산업과 도시기능 차원에서 수도권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대전 인근의 시·군들은 대전과 통합된 반면, 서해안지역은 내륙지역과는 분리된 기능을 지니고 있어 충남은 통합된 정체성을 지닌 지역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자치충남의 발전 과제와 대응방안

1. 자치충남의 발전비전과 목표

1) 지역발전비전과 목표

충남은 그동안 지역발전의 양적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산업발전을 선도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는 국가발전의 가장 뚜렷한 선도지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앞으로 행정중심도시의 건설과 함께 예상되는 산업성장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10년간에도 충남은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파워하우스로 선도적 기능을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이 21세기 국가발전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3 가지 측면에서 지역발전의 역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혁신 지향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지역경제기반(competitive economy)을 구축해야 한다. 충남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의 양적 성장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급격한 양적 성장이 지역경제에 뿌리를 내리고 자생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의 과제는 지역산업과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문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세계화시대에는 국제적 차원의 생산성과 경쟁력

이 없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기능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와 환경, 경관을 중시하는 삶의 환경(livable environment) 조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쾌적하고 만족할 만한 자연과 사회환경의 제공은 주민만족의 제1차적 조건일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경제체제 하에서는 경제성장과 발전을 결정하는 경쟁력의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고품격의 문화, 쾌적하고 건강한 자연 및 생태 환경,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경관의 문제는 행정의 최우선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절대빈곤이 사라진 현재 주민들은 양적 생활보다는 질적 생활을 중요시하고 있다. 삶의 질을 강조하고, “참살이(Well-being)”를 중요시하는 삶의 방식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셋째, 갈등과 소외가 없는 “더불어 사는 사회”(inclusive society)의 실현이다. 세계화와 신자유경제체제하에서 소외되는 집단,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대, 갈수록 커지는 지역간 집단간 갈등의 해소는 지방행정의 핵심적 해결과제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충남은 행정도시의 건설과 함께 국가발전의 선도지역의 책무를 지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역이 상생, 협력하는 데도 중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소외되는 사회집단과 지역을 방치하고는 지속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자치충남의 발전과제와 대응방안

1) 충남 경제의 세계화와 선진화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경제기반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남지역경제의 세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세계시장 속의 경쟁력 확보와 세계경제와의 통합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충남지역경제가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외 기업이 세계적인 시각에서 불편 없는 기업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global standards)에 적합한 시설 및 서비스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 공단의 조성, 외국인 학교 및 국어와 영어공용의 초, 중, 고 및 대학시설의 확대 등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평택과 당진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경제특구 조성사업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생산과 물류, 교역, 업무기능의 유치를 통하여 충남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화를 촉진하는 핵심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국제적 수준에 맞는 관행, 제도 및 문화 기반을 갖추는 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치중해야 한다.

둘째, 세계화를 위해서는 해외자본 및 기업 유치도 중요하나 지역 내 기존 기업과 지원 조직의 국제기능과 역량을 높여야 한다. 개별조직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 증진과 대외적 진출을 촉진·지원해야 한다. 여기에는 단순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의 제공과 국제업무 전문인력의 양성고 유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 및 경제 분야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유망한 외부 기업의 유치에 치중해야 한다. 충남은 이미 천안-아산에 집적된 LCD,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등 자동차부품, 첨단 문화 콘텐츠산업, 농축, 바이오 및 관광여가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2) 지역통합적 혁신클러스터 구축

지식기반경제시대의 경쟁력과 성장의 동력은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innovation)에서 유발된다. 과학기술의 발명과 혁신은 개별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지나 이들의 발명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 자원을 지닌 경제주체 간 상호작용과 집단적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문화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충청남도도 행정복합도시 내에 국가의 과학 및 산업기술 정책을 주관하는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입주하게 되고, 충남북부지역에는 반도체 및 LCD 등 첨단 산업기반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덕단지에는 과학기술 R&D특구가 형성되고 있고, 바이오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는 충북 오창의 생명과학단지를

연결하는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관 산업의
집적지 및 R&D시설, 대학지원 등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나 그중에서도 다양한 기업, 연구기관, 대
학 등을 연계하여 상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매개자 또는 중계자 역할을 할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김용웅·차미숙, 2000).

3) 초광역 경제권의 형성과 지역간 협력강화

경제의 세계화와 네트워크 경제의 출현으로 지
역단위경제가 국가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주체가 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국
제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지닐만한 자립적 경제권
을 형성하는 것이다. EU에서는 자립적 경제단위
를 최대 인구규모 300만 명까지의 시군 집단지
역(NUTS II)과 최대 인구규모 700만 명까지의
초 광역 국가하위단위(NUTS I)로 상정하고 있
다(김용웅외, 2003: 28).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경제권의
규모를 초 광역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22개 레지옹을 8개로, 독일
은 16개 주를 9개의 경제권으로 통합하고, 일본
은 47개 도도부현을 7-12개의 경제권으로 통합
하려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김용웅외, 2003:
668-671).

충남의 경우에도 현재 충남 지역만을 가지고는
집적경제의 이익을 향유하고, 경제와 산업기능의
연계와 보완성을 지닌 자립적 경제권을 형성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단기적
으로는 대전·충남을 하나의 통합경제권으로 육성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전·충남·충북 그
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남부지역 일부 포함한
초 광역적 경제권 형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립적 경제권 형성은 지방행정구역과의 마찰
때문에 경제권 내의 지방정부와 자치단체 간 연
계, 조정 및 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거
버넌스의 형성이 불가피해진다. 영국과 같은 경
우는 지역경제발전의 주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
원과 감독을 받으며, 실질적 운영은 지역 내 기업
가 대표, 노동조합, 지방정부와 관련기관으로 구
성된 이사회가 담당하는 지역발전청(RDAs)을 설
치·운영하고 있다. 지역경제권내 발전시책과 사
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거버넌스는 다양한 형
태와 방식이 가능하다. 충청권의 경우는 참여하
는 지방정부 연합체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기
능적으로 연계된 지역경제발전 추진기구를 설
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현
재와 같이 경제적 보완과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지역의 위상이 변하
는 경우, 현재의 지방행정구역의 의미는 크게 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구역의 제약을 극복
하는 다양한 지역협력 거버넌스 체계 형성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김용웅, 2002).

4) 어메니티 증진과 지역 정체성의 확립

충남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파워하우스(powerhouse)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경관 차원의 쾌적성
과 문화적 품격을 갖춘 주거환경과 상생의 복지
기반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성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개발 수요를 계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군 단위를 초월한 광역적 토
지이용 및 보전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시·군별 토지이용 및 보전대책과 계획을
광역단위화하여 수립·집행하는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광역단위별 생태 및 환경,
경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관리하는 노력에
서부터, 광역적 수질 및 환경관리체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와 주거환경의 선진화와 지역정체성
을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와 주거환경
은 산업화과정에서 성급히 형성되었기 때문에 대
부분 21세기 선진국 수준의 도시기반을 확보하
기는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현재의 도시
기반과 주거환경수준을 가지고는 세계적인 경쟁
력을 지닌 지역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세계적인 모범
도시가 건설되면, 기존 지역 내 도시와의 이중구
조(dichotomy)가 형성되어 상호보완 및 상생의
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워지고 기존 도시가 쇠퇴화
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효율적인
네트워크 도시군(群)을 형성하고, 지역발전의 새
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도시 주
변의 기존 도시부터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병행하
여 대대적인 개조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국가 프

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
한 것이 충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살릴 수 있
는 독특한 도시개조와 정비모형을 개발하여 지역
적 정체성과 도시개발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
요하다. 서구에서는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디자인
과 조경을 통한 도시개발의 질적 제고를 매우 중
시하고 있다(김용웅·차미숙, 2000).

셋째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 밀착형의 마이크로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
고 추진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21세기 경
쟁력이 있는 지역이란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될 것이고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란
문화, 여가, 환경의 질이 높은 지역이 될 것이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감성적이고 심미적인 만족감
을 주는 시책과 사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판
단된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마을 방풍림 등 마
을 숲의 복원, 강변 숲 조성을 통한 충남 고유의
경관구축과 도시 건축물의 디자인 및 조경의 선
진화 등이 중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미래
학자 Alvin Toffler(2005)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
변화현상으로 분화된 사회(de-massified
society)와 개인성(individuality)의 증진으로 보
았다. 생산과 분배(유통) 뿐만 아니라 교육, 여가
및 주거환경까지 다양한 욕구를 개인적인 차원에
서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성적인 시책과 사업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5)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 내 균형발전 촉진

우리나라는 향후 경제성장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첨단기술과 정보화 등으로 고용이 없는 성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기존 노동력을 새로운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재교육 및 취업을 알선하는 일이 될 것이다. 새로운 고용 기회 창출을 위해서는 문화와 여가, 교육, 사회복지, 국토 및 환경 관리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의 고용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촉진은 당위적 논리와 장밋빛 청사진만의 제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발전의 성과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만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역발전에 있어 취업기회의 창출, 주민소득의 증대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증진이 지역의 총량적 성장보다 중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충남 지역 내 북부 산업지대, 행정중심도시 주변의 내륙지역, 서해안 지역간 통합성 증진과 지역간 존재하는 지역불균형의 해소와 상대적 쇠퇴지역에 대한 정주기반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상이한 특성을 지닌 지역 간 기능적 연계와 보완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지역간 순환형 교통 인프라의 구축, 협력발전을 위한 도시와 지역연합체 형성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지역별 특화발전 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이다. 지역별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잠재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등 상대적 낙후 우려가 있는 지역은 자연환경, 경관과 문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태영농마을 조성, 도농통합의 정주모형 구축 및 여가와 농업기능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경제동인을 개발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은 주거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기반과 인센티브의 제시와 함께 농업활동과 접목이 가능한 farm stay 형 농촌 체험 관광을 확대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 청정 농산물 생산과 지산지소(地產地消), 스로우 후드(slow-food)운동의 전개, 농촌의 매력도를 높이는 농촌 경관과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마인드와 제도적 틀의 마련이 필요하다.

V. 맺는 말

자치충남의 미래는 어느 지역보다 밝고 희망적이다. 시대적 여건과 국가정책의 기조 변화와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치충남의 발전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충남이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은 물론 지역 내 기업, 대학, 공공기관과 민간 조직의 내부의 혁신 및 발전역량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제 지역발전은 더 이상 중앙정부

에 의한 자원의 재분배나 지원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New regional policy is no longer about redistributing national growth, but about equipping all regions to compete in the global economy on the basis of their particular assets (Tomaney, 2005; 43)"]

지역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고 지방자치가 충남

에서 꽃을 피우게 하는 일은 지방정부나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앙과 지방 정부는 물론, 지역 내 대학과 기업,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시스템이 발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강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우선 순위와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도 관심을 두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김주현(2005) "민선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지방분권 및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토론회, 경기개발연구원
김용웅(2002), "분권시대 협력제휴형 지방자치 모델", 『지방행정』 7월호
김용웅·차미숙(2000), 『유럽의 지역개발성공사례와 동향』, 국토연구원
김용웅·차미숙·강현수(2003), 『지역발전론』, 한울 아카데미.
박재곤·이원빈(2005), 기업의 지방투자실태와 활성화방안, 산업경제연구원
이수훈(2004), 『세계경제, 동북아, 한반도』, 아르케
이원식(2005), "충남노인 일자리사업실태와 활성화 전략", 충남노인인적자원개발의 방향과 과제, 충남 RHRD 심포지움,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전라남도·경상남도(2004), 광역민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산업자원부(2005), "2015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안", 세계분업구조의 보완자(global industry integrator)", 『산업혁신포럼 2005』, 통계청(2005), 2004 한국통계연감
한국개발연구원(2001), 『2011년 비전과 과제, 열린세상 유연한 경제』
한국무역협회(2005), www.kita.net
Tofler Alvin(2005), Changing Global Environment and Industrial innovation Strategy in 2015,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ture industrial Strategies, Industrial Innovation Forum 2005, Grand International Hotel, Seoul, Korea, September, 6-7, 2005.
Tomaney John(2005), The governance of Regional policy in the UK,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gional Innovation organized b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rade, Daegu, Korea, 5th-7th, October, 2005

고령화시대 노인 의식 및 주거특성에 관한 연구

박철희 | 도시지역연구부 책임연구원

I. 서론

노인인구¹⁾는 우리나라 국가인구의 주요한 계층이며, 충청남도도 예외가 아니다.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9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8.3%를 차지하며 이미 고령화 사회²⁾로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충청남도는 1992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05년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선진국에서처럼 오랜 기간 점진적 대응시간을 주지 않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³⁾

사회속의 한 계층 또는 집단의 문제는 매우 다원적이어서 그 연구영역과 범위가 다양하다. 노인관련 문제를 살펴보아도 노화현상, 노인에 대한 사회인식, 경제적 처우, 건강, 보건의 등 사회서비스 시설 및 사회복지정책, 노인 개체로서의 연구, 각종 노인시설 계획, 건설, 운영문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⁴⁾

1) 노인인구의 구성에서는 병약한 저소득층과 고학력이며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이 공존하며, 연금 및 보험의 혜택을 받는 중산층 수준의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인구의 고령화 또는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는 사회를 뜻한다. UN은 국가의 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가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가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부양에 대한 국민부담 증가,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부족, 국가경제 성장률 둔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복지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 고성룡(1990),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계획",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

한편, 사회발전과 변화로 인해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 토지가격 및 주거비용의 상승 등은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노인에게 있어서는 주거와 주거환경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정된 재정과 복지환경 속에서 노인의 최저 주거수준 뿐만 아니라 노년을 더욱 만족스럽게 살기 위한 주거 및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증대되고 있는 노인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노인과 노인주거의 특성, 충남 노인들의 주거유형 및 주거의식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노인주거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노인과 노인주거의 특성

1. 고령화시대의 노인

노인을 위한 주거 특성을 알아보기 전에 선행적으로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⁵⁾ 그것은 노인에 대한 실제적인 행태 조사와 이해가 가장 기본적이며, 좋은 문제 해결방법이기 때문이다.⁶⁾

2. 노인에 대한 정의 - 사회·문화적, 생물학적, 제도적 측면에서

5) 이는 주거 및 주거환경 계획을 검토할 때 그 주체가 되는 대상에 대한 이해의 출발이 가장 기본적이며 좋은 문제해결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주거는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그 속에서 사는 거주자에 보호와 역할을 하며, 경제 및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하며 문화적인 가치를 전달하기도 한다. 따라서 거주자와 주거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물론 건축의 사용 용도에 따라 박물관, 전시관, 교회, 업무용 빌딩 등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공간이 있으나, 주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살의 그릇'이다. 그 속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미학이나 기능만을 중시한 주거공간에는 작품성과 기능성은 있을지라도 사용자는 없다. 노인건축의 중심에는 바로 인간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인간의 행태가 반영된 주거디자인과 건축환경이 인간의 심리와 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질(Quality) 높은 노인건축환경을 창조하기 위해서 건축 외에 어떠한 작업이 필요한지 디자인의 오류가 주는 교훈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자본주의 체제 등장과 경제규모의 확대는 건축에 있어서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와 공급자간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실제 사용자인 역명의 대중과 주거건축을 공급하는 대규모 자본가가 분리되면서 사용자가 자본을 가지고 주거를 상품을 사듯 구입할 수 있는 위치에 소비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힘든 사용자에게는 공급자의 일방적인 공급에 맞추어서 살아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시장원리의 확산과 함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건축공간의 세분화와 기능화는 건축의 실제 사용자와 공급자간의 의사소통을 멀어지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건축가와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건축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건축가와 사용자간의 건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상당하다. 건축물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건축을 하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 대중사이에 건축을 바라보는 상이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간을 형성하고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축가 그룹의 미학에 대한 관념과 생각이 일반 대중의 삶과 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 번째는 인간을 위한 건축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인간을 위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인간을 배제한 환경의 의미는 불가능하고 인간을 환경의 중심에 두고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환경과 인간은 상호작용하는 관계이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시적인 범위의 환경으로서 건축환경은 인간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생활은 주변의 환경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주변환경을 통해 자신의 위치, 의미, 상황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에 대해 기본적인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좋은 주거를 만든다는 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즉, 인간을 위한 건축을 중심에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질(質) 높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질 수 있으며, 그 속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질적인 삶의 향상 또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사회문화적, 생물학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정의의 통하여 그 특징을 간략히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은 직업 활동에서 퇴직 또는 가정에서 주부의 지위와 역할을 이양한 상태의 연령층을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자의 경우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정년연령의 변화로 조기노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예부터 환갑 노인이란 명칭으로 노인을 지칭하였는데, 이 자체가 노인에 대한 문화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 노인보호정책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오고 있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노인의 정의는 인체에 나타나는 노화현상 및 생리적 현상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이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정부에서는 각종 행정적 복지제도 측면에서의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고 있다. 이를 보면, 생활보호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

서는 무의무탁한 노인이 양로원 등의 노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로 규정되어 있어, 노인정책 측면에서는 노인을 65세로 사회단체 등에서는 60세부터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주거와의 관계

인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신체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고 신체 각 부위도 변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새로운 물리적 환경이 요구된다.

1)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주거

노인의 신체크기와 주거공간의 적정치수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노령화가 되면서 골격의 변화에 따라 신체 각 부분의 치수가 성년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축소된다.

노인의 골격 변화는 동작영역 및 작업영역의 축소를 의미하며, 일반 성인기준으로 형성된 각

종 스케일과의 차이만큼 생활공간이나 가구 등의 물리적 환경에 부적응을 의미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들은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으며, 노인주거 및 환경계획에 있어서 노인 스케일에 맞는 공간 계획이 요구된다.

노령화의 진행에 따라 신체기능이 저하되게 되는데, 노화의 정도는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대체로 내분비계, 순환계, 골관절계, 위장계 등이 문제가 되며, 치매현상 등 정신적 기능

장애가 생겨나게 되며 이 노화의 정도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난다.

노인 인구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만성 질병은 악성 신생물, 고혈압,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당뇨,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이다. 남성은 악성신생물과 뇌혈관 질환이, 그리고 여성은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정신 및 행동장애의 유병률이 높다. 이들 각각을 인구 1,000명당 유병률을 통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문상식 등, 2001).

표 2. 노인인구 1000명당 유병률

(단위 : %)

구분	악성신생물	고혈압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	정신/행동장애
남	14.0	89.3	48.0	44.3	51.5	13.8
여	8.5	146.2	42.3	69.2	61.2	26.6

시각은 40세를 넘으면 순응력이 더디게 되고 광속장애에 대한 예민도가 쇠퇴하여 노안이 된다. 시각장애가 심해지면서 필연적으로 작업속도가 떨어지고 일이 느려지며 생화의 적극성도 저하된다.

한편, 휘광에 대한 반응도 예민해져서 그에 대한 인내력도 감퇴되어 번쩍거리는 마감재료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안전사고 발생율이 높아진다.

청각의 쇠퇴는 시각보다는 일반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다가 70세 이후에는 노인의 20%이상이 난청이 되며 80살에 이르면 50% 정도가 난청이 되는 청각장애가 나타난다. 이러한 청각장애는

인간의 사회화에 필수적인 대화를 불편케 하여 노인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무의식중에 소외가 되어 고독한 노인을 만들게 된다.

기타 미각, 후각, 촉각의 경우도 성인에 비교하여 10% 정도 저하된다고 보고 있으며, 냄새로 위험을 지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방안의 온도도 성인보다 약간(2~3℃) 높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소화기계통은 치아 상실과 함께 음식을 씹는 힘이 약해지고 소화능력이 쇠퇴하여 노인들인 변비, 설사가 잦게 된다.

순환기의 경우 심장 박동능력이 떨어져 혈액순

표 1. 노인의 신체 각 부위 치수

항 목	나이별	남자노인(mm)	여자노인(mm)
신 장	60~69세	1,660	1,542
	70세 이상	1,624	1,491
눈높이	60~69세	1,529	1,409
어깨높이	60~69세	1,336	1,224
	70세 이상	1,324	1,206

자료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환이 원활치 못하며 혈관이 경화되면서 혈압이 상승된다. 위장의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못해 야뇨횟수가 늘어난다.

호흡기의 경우 근골근육의 약화와 폐의 탄력이 감소되고 폐활량이 감소되게 된다. 따라서 노인들은 대개 피로가 빨리오며 동작이 완만해진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와 그에 따른 주거환경상에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성격적 변화에 따라 노인을 위한 규모 및 치수계획이 필요하며, 둘째, 골격 및 운동기관의 쇠퇴에 따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환경, 피난 및 보호공간이 필요하며, 셋째, 감각기관의 쇠퇴에 따라 조명, 사인, 색채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넷째, 호흡순환계의 변화에 따라 난방, 공조방식 및 휴게공간 등이 필요하다.

표 3.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주거환경의 대응

신체적 능력변화	문제점의 발생	주거 환경
성격의 변화	- 작업영역의 축소 및 운동동작능력의 감소	- 노인을 위한 주거 스케일 - 노인을 위한 규모 및 치수계획
골격 및 운동기관의 쇠퇴	- 안전사고의 발생 - 이동보조기구의 사용	- 안전사고를 줄이는 계획 (경사로의 구조, 물매) - 피난훈련계획 및 공간계획 - 간호 및 보호공간의 계획
감각기관의 쇠퇴	- 야간의 시기능 저하 - 가시거리의 감소 - 독립화, 소외감 발생	- 조명, 사인, 색채계획 - 전달방법의 고려 - 사회화공간의 고려
호흡 순환계	- 동작이 완만 - 천식환자의 발생 - 지체장애의 발생	- 난방, 공조방식 고려 - 온도, 습도 설비 고려 - 휴게공간의 고려

2) 노인의 심리적 특성과 주거

노인의 성격변화는 지능, 기억, 학습 등의 정신기능, 신체적·생리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즉, 생물적인 요인과 생물학적

인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노인의 성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보수성이 강해진다.⁷⁾ 둘째, 고독감과 소외감이 생긴다.⁸⁾ 셋째, 의존성이 생긴다.⁹⁾ 넷째, 내향성 및 수동성이 강해진다¹⁰⁾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노인은 고령화되면서 새로운 행동양식을 획득하는 것이 곤란해지므로 이전의 생활양식을 고집하게 되며, 그 때문에 새로운 생활양식, 설비,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불만감, 위화감 등을 느끼게 된다.

학습능력 및 기억력 등 정신적 능력은 다른 정신적 기능이나 사회적 기능에 비해 퇴화가 늦은 편이며, 지능의 퇴화정도는 노인의 생활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편 지능 및 정신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치매상태가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인격 변화도 일어난다. 일반적

으로 노인성 치매 발생경향은 첫째, 나이와 건강상태 등이 상관관계를 맺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치매현상이 증가하며, 둘째, 근린집단이나 지역사회에의 참여도가 낮을수록 늘어나며, 셋째, 과거 직업이 지적, 정신적인 노동보다 육체노동인 사람일수록 증가되고, 넷째, 가정에서의 지위가 중심적 위치에서 벗어날수록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 변화에 따라 주거환경에는 거실을 중심으로 한 공간의 배려, 지적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시설 및 치매노인을 위한 단위공간이 요구된다.

표 4. 노인의 심리적 특성과 주거환경의 대응

신체적 능력변화	문 제 점	주거 계획
노인의 심리적 특성	- 생활상의 부적응 - 폐쇄성	- 생활의 중심인 거실 고려 - 공용공간의 배려
성격변화	- 물리적 심적환경의 영향	- 노인을 위한 환경계획
지적특성	- 지적 능력의 감퇴 - 치매환자의 발생	- 노인을 위한 교육시설 - 치매노인을 위한 단위평면 - 치매노인 Unit의 배치방법 고려

7) 행동이나 사고에 경직성이 증가되어 새로운 방식이나 기기의 수용보다는 관습적인 옛 방식을 고수하며, 완고하게 자기중심적 경향이 강해져 회고적 성격으로 변한다. 따라서 기존의 환경상태를 고수하려하여 일례로 주거지의 변화 등을 원치않는다.
8) 노인은 사회관계 및 경제적 조건, 육체적 능력이 소실되어 가는 것을 자각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사회적 소외감과 심리적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우울증 경향이 증가된다.
9) 수입상실로 인한 경제적 의존성, 신체노화에 따른 신체적 의존성, 정신기능 퇴화로 인한 정신적 의존성, 지인의 상실로 인한 사회적 의존성과 심리적 및 정신적 의존성이 커지며, 노인은 타인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심리적 안정과 가치를 유지하려 한다.
10) 노화에 따라 외부보다는 자기자신에 관심과 주의를 돌리게 되며,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보다는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따라 사물을 판단하게 된다. 또한 모든 문제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수동적으로 처리하거나 신비적 또는 우연에 맡겨버리려는 경향도 강해진다.

3) 노인의 사회적 특성과 주거

노화가 진행되면서 사회관계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일상생활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중 가장 주요한 원인은 퇴직 등으로 인해 직업인의 역할 및 사회적 지위가 하락한다. 대신 가족 내에 조부모로서의 역할과 의존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적으로 권위, 특권, 위신 등의 상실을 가져오며, 이로 인해 자발적인 사회 참여도 줄어들게 된다. 사회적 은퇴는 수입의 감소를 의미하며, 퇴직 전의 생활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퇴직 등으로 남자노인의 경우 주생활환경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바뀌게 되며, 여유시간을 이웃, 친지들과 같이 지록 및 혈록 중심 교제로 축소된다. 따

라서 노인은 새로운 주거환경인 이웃과 지역사회에 적응해야 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생리적, 신체적, 경제적 기능이 약화된 노인은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 유병율이 2~3배 높으며 만성적, 합병적 질병이 빈번하고, 건강유지에 취약하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보호문제를 노인의 주거환경과 연계해 고려해야 한다.

노인을 가정에서 부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핵가족화, 가족수의 소수화, 여성취업 및 자녀세대들의 가치관 변화로 부양이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건강이 악화된 노인의 보호, 간호문제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인주거환경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표 5. 노인의 사회적 특성과 주거계획의 대응

구 분	변 화	문 제 점	주거 계획
사 회 적	- 사회참여 - 사회적 신분, 직위 - 경제능력	- 고립감 - 허무감 - 역할 상실감 - 소유욕구 발생 - 열등감	- 사회복지시설 확충 - 여가선용, 취미활동 장소계획 -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과거 집착 - 불안 - 고독감 - 초조 - 인생의 낙오감	- 프라이버시 유지 - 밀도 확보 - 영역성 확보

Ⅲ. 충남 노인의 가구 유형 및 주거 의식

1. 충남노인의 가구 유형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형태는 부부와 미혼자

녀 2세대로 구성된 부부가족과, 자녀가 혼인후 부모와 동거하는 유형인 직계가족 형태이다. 직계가족은 세대수가 2세대, 3세대, 4세대이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족형태는 직계가족의 경우 노부부와 자녀세대가 분리되어 부부가족 또는 핵가족화 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표 6. 노인을 포함하는 가구의 유형

가구 유형	구 성 원
독신 노인	배우자사망 또는 이혼 후 홀로 남은 노인
1세대 노인핵가구	노부부
2세대 노인핵가구	노부부 + 미혼자녀
2세대 복합가구	노부부 + 기혼자녀 + 미혼자녀
3세대 복합가구	노부부 + 기혼자녀 + 손자녀 + 미혼자녀
3세대 직계가구	노부부 + 기혼자녀 + 손자녀

2003년 조사된 충남노인의 생활실태를 보면, 홀로 사는 독신노인은 26.6%, 노부부가구는 40.6%로 조사되었다. 즉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독거 및 노인부부¹¹⁾세대의 비율이 67.2%로서 전

체의 50%를 넘는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¹²⁾의 비율인 25.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 평균보다도(2000년 독신 및 노부부가구 : 44.9%) 매우 높다

표 7. 충남 노인의 가구 구성

(단위: 명, %)

가구 유형	전 체	시 부	군 부
독신 노인	263(26.6)	154(30.7)	109(22.4)
노부부 (1세대 노인핵가구)	401(40.6)	185(36.9)	216(44.4)
노부부+자녀	251(25.4)	131(26.1)	120(24.6)
노부부+손자녀	39(4.0)	21(4.4)	18(3.7)
기타	34(3.4)	10(2.0)	24(4.9)
합계	988(100.0)	501(100.0)	487(100.0)

자료: 충청남도, 고령 사회에 대비한 충남 노인복지 2010계획, 2004

11)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녀들이 직장이나 교육문제 등으로 떠나서가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가 23.2%, 자녀가 없어서가 7.4%로 나타났다.

12)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게 동거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자녀와 동거는 당연하기 때문으로의 응답이 전체 2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자녀가 원하거나 자녀의 주거사정상이 22.1%,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13.7% 순으로 나타났다.

2. 충남 노인 주거실태와 의식

1) 주거실태

충남의 노인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거점유형태, 주거유형, 주거밀도, 주거시설수준, 건축경과 년수(노화도), 주거이동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나, 현재까지는 주거점유형태만이 일부 조사 되어 있는 상태이다.¹³⁾

충남 노인의 주거점유형태를 보면 자가 소유가 76.3%를 차지하고 시부보다 군부 노인들이 자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전세, 월

세, 사글세 등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노인은 각각 6.4%, 2.7%, 4.8%로 나타났으며, 시부의 주거 점유 사정이 군부의 주거 점유 사정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성별로는 전세는 남성노인이 7.4%, 여성노인이 5.6%이고, 월세는 남성노인이 3.2%, 여성노인이 2.4%이며, 사글세는 남성노인이 2.7%, 여성노인이 6.2%로 나타났다. 여기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자가소유에서 6% 낮고, 사글세에서 3.5%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주거 사정이 열악하게 나타났다.¹⁴⁾

표 8. 충남 노인의 주거점유형태 (단위:명, %)

가구 유형	전 체	시 부	군 부	성 별	
				남	여
자 가	754(76.3)	360(71.9)	394(80.9)	326(80.9)	428(73.2)
전 세	63(6.4)	39(7.8)	24(4.9)	30(7.4)	33(5.6)
월세(전세, 보증금)	27(2.7)	19(3.8)	8(1.6)	13(3.2)	14(2.4)
월세(사글세)	47(4.8)	36(7.2)	11(2.3)	11(2.7)	36(6.2)
기타	97(9.8)	47(9.4)	50(10.3)	23(5.7)	74(12.6)
합계	988(100.0)	501(100.0)	487(100.0)	403(100)	585(100)

자료 : 충청남도, 고령 사회에 대비한 충남 노인복지 2010계획, 2004

13) 충남노인들에 대한 주거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거유형, 주거밀도, 주거시설수준, 건축경과 년수(노화도), 주거이동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추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

14) 충청남도(2004), 고령사회에 대비한 충남 노인복지2010계획, p36.

2) 주거의식

녀와 함께 살고 싶다가 35.7%, 장래에 자녀와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가 8.4%로 나타나고 있다.

(1) 독거 또는 노부부의 장래 동거 희망여부

반면 자녀와 동거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은 40.1%로 상당수 노인들은 노후 독립적으로 자녀와의 동거 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장래에 자 살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9. 충남 독거 또는 노부부의 장래 자녀와 동거 희망여부 (단위:명, %)

가구 유형	전 체	시 부	군 부	성 별	
				남	여
함께 살고 싶다	246(35.7)	134(38.8)	112(32.6)	100(32.8)	146(38.0)
살고 싶지 않다	276(40.1)	137(39.7)	139(40.4)	132(43.3)	144(37.5)
가까운 곳에 살았으면	58(8.4)	29(8.4)	29(8.4)	31(10.2)	27(7.0)
생각해 보지 않음	81(11.8)	39(11.3)	42(12.2)	38(12.5)	43(11.2)
기타	28(4.1)	6(1.7)	22(6.4)	4(1.3)	24(6.3)
합계	689(100.0)	345(100.0)	344(100.0)	305(100)	384(100)

충남노인의 주거의식에 대한 좀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와 복지수요 뿐만 아니라, 희망주거형태, 대인의식, 근린의식 등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호시설이 18.9%, 취미, 교육, 문화 등 여가생활 지원이 11.7%, 주거관련사업이 10.9%로서 복지정책과 함께 노인주거정책에 대한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관련 희망 사업

충남의 시군부 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은 기초 생활보장에 40.2%, 다음으로 노인병원과 장기보

특히, 주거관련사업에서 실버양로원 및 실버타운 건설에서는 시부보다 군부가 6%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 장래 추진 희망 사업 (단위:명, %)

가구 유형		전 체	시 부	군 부	성 별	
					남	여
주거 관련	소 계	10,8(10.9)	40(8.0)	68(14.0)	45(11.2)	63(10.8)
	실버양로원, 실버타운	74(7.5)	21(4.2)	53(10.9)	26(6.5)	48(8.2)
	주거지원사업	34(3.4)	19(3.8)	15(3.1)	19(4.7)	15(2.6)
의료, 기초생활보장		397(40.2)	224(44.6)	173(35.5)	162(40.2)	235(40.2)
노인 병원, 장기보호시설		187(18.9)	91(18.1)	97(19.9)	67(16.6)	120(20.5)
주간보호, 가정봉사원		16(1.6)	10(2.0)	6(1.2)	5(1.2)	11(1.9)
고용 지원		45(4.6)	19(3.8)	26(5.3)	22(5.5)	23(3.9)
여가 지원		116(11.7)	58(11.6)	58(11.9)	45(11.2)	71(12.1)
사회참여활동		18(1.8)	11(2.2)	7(1.4)	8(2.0)	10(1.7)
기타		101(10.2)	49(9.8)	52(10.7)	49(12.2)	52(8.9)
합계		988(100.0)	501(100.0)	487(100.0)	403(100)	585(100)

자료 : 충청남도, 고령 사회에 대비한 충남 노인복지 2010계획, 2004

IV. 결론

노인의 신체적 생리적 변화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환경적 변화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생리, 심리, 사회적 특성변화에 따른 주거환경 계획 요소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노인들의 생리적 변화에 따라 작업영역의 축소, 운동 및 감각기관의 쇠퇴, 호흡 순환계의 쇠퇴로 주거환경에서는 노인에 적합한 공간규모 및

치수계획,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공간계획, 노인의 시각각·순환계에 적합한 색채, 설비계획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심리적 변화에 따라서는 생활상의 부적응, 지적능력의 감퇴 등에 대한 생활공간의 배려, 노인을 위한 교육 및 치매노인을 위한 평면계획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사회·심리적으로 노인은 고립감, 허무감, 열등감, 불안, 초조, 고독감, 낙오감 등을 느끼는데 이를 위해 주거계획으로서 여가선용, 취미활동을 위한 장소계획과 함께 프라이버시 유지, 영역성 등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2) 충남 노인의 주거실태와 인식

충남 노인복지를 위한 주거실태와 인식에서는 충남 노인의 주거점유형태는 자가 소유가 가장 많은 비율인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전세, 월세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물리적인 주거실태인 주거유형, 주거밀도, 주거시설수준과 건축경관 년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미비하여 추후 이에 대한 좀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주거의식으로서 장애 자녀와의 동거희망 여부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의견보다 독자적으로 살고 싶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희망추진 사업으로서 의료·기초생활보장, 노인병원·장기보호시설 확충, 여가지원과 함께 주거복지관련사업을 원하였다. 특히 주거관련사업으로서는 주거지원사업, 실버양로원, 실버타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노인주거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방안이 모색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 노인의 생리·심리·사회적 특성과 주거환경 계획요소

구 분			문제점의 발생	주거 환경 계획
생리 적 변화	성격의 변화		- 작업영역의 축소 및 운동동작능력의 감소	- 노인을 위한 주거 스케일 - 노인을 위한 규모, 치수계획
	골격 및 운동기관의 쇠퇴		- 안전사고의 발생 - 이동보조기구의 사용	- 안전사고를 줄이는 계획(경사로의 구조, 물매) - 파난훈련계획 및 공간계획 - 간호 및 보호공간의 계획
	감각기관의 쇠퇴		- 야간의 시기능 저하 - 가시거리의 감소 - 독립화, 소외감 발생	- 조명, 사인, 색채계획 - 전달방법의 고려 - 사회화공간의 고려
	호흡 순환계		- 동작이 완만 - 천식환자의 발생 - 지체장애의 발생	- 난방, 공조방식 고려 - 온도, 습도설비 고려 - 휴게공간의 고려
심리 적 특성	노인의 심리적 특성		- 생활상의 부적응 - 폐쇄성	- 생활의 중심인 거실 고려 - 공용공간의 배려
	성격변화		- 물적 심적환경 영향	- 노인을 위한 환경계획
	지적 특성		- 지적 능력의 감퇴 - 치매환자의 발생	- 노인을 위한 교육시설 - 치매노인을 위한 단위평면 - 치매노인 Unit의 배치방법 고려
사회 심리 적 변화	사 회 적	- 사회 참여 - 사회적 신분, 직위 - 경제능력	- 고립감, - 허무감 - 역할 상실감 - 소유욕구 발생, - 열등감	- 사회복지시설확충 - 여가선용, 취미활동 장소계획 - 사회참여 기회 확대
	심 리 적	- 환경 적응력 - 활동영역 - 가족구성원의 상실	- 과거 집착 - 불안, - 초조 - 고독감, - 인생의 낙오감	- 프라이버시 유지 - 밀도 확보 - 영역성 확보

충남지역 쌀 브랜드화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권영현 | 충남발전연구원 산업디자인팀 연구위원

이충훈 | 충남발전연구원 산업디자인팀장

구승모 |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I. 서론

고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주된 경제원은 농업이었다. 그 중에서도 주곡인 벼의 경작이 대다수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업생산국이었다.¹⁾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를 보더라도 사(士), 농(農), 공(工), 상(商)으로 단계화하여 농업과 이에 종사하는 농민 계층의 지위 부여와 인적 자원의 관리에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農者天下之大本也라 하여 농업이 만물의 근간이 되는 기준임을 강조하였고, 벼(쌀)는 화폐와 동일시되어 환금기능까지 지니기도 하였다.

경작 지역을 살펴보면 크고 작은 하천을 기반으로 전국 각지에 걸쳐 수도작이 활발했다. 특히

충남 지역은 남부지역에서 발원한 금강, 충남 서북부의 삽교천 등의 풍부한 수량으로 경기, 전라 지역과 함께 주요 쌀 생산지로 손꼽혀왔다. 충남의 해안과 맞닿은 내포지역은 하천 상류에서 운반되어온 퇴적물이 쌓여 이룬 충적토양과 비산비야의 광활한 지형으로 벼생육에 적합한 토양과 우수한 일조량은 경작 조건에서 다른 지역 보다 탁월한 우위를 보여 주고 있다.

1970년대 들어 충남은 금강하구둑 공사와 삽교천 방조제, 서산 방조제등의 역사로 더욱 광활한 쌀 경작지를 확보하여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쌀 생산 지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러나 농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산업화로의 전환은 농업의 쇠락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여기에 다수확 품종의 개발, 거둬지는 연속 풍작에 의한 과잉 생산과 주곡인 쌀의 소비는 감소하는 대신 야채나 육

류 소비의 증가, 외식의 증가 그리고 탄수화물공급원을 미곡이 아닌 면류나 빵류 등 밀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의 내적 요인은 쌀 수요를 더욱 감소시켰다.

여기에 1994년 부터 구체화 되고 있는 쌀 시장 개방은 완전 개방에 앞서 2005년 11월 현재 유예화 과정에 있지만 단계적으로 수입량이 점차 늘려야만 하는 조건이며 궁극적으로는 완전 개방을 대비하여야 할 전망이다.²⁾

쌀 수요의 감소와 쌀 시장 개방이라는 위기에 대비하여 국내 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과 방안이 대두되었다. 이는 크게 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과 시장에서의 확고한 이미지 확보 전략 즉, 브랜드 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거 다수확을 겨냥한 품종에서 식미가 우수한 품종으로의 개량, 지력증진, 시비방법 등의 재배 방법, 저온 저장 등 보관 저장, 도정 방법, 선별 방법, 포장 방법 등의 개선에 의한 품질력 강화에 힘을 쏟는 외에도,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나 재배 방법을 차별화 하여 브랜드화 한 쌀 브랜드의 활용으로 시장에서 우위의 점유를 꾀하고 있다.

더우기 지방자치의 부활과 더불어 지역 이미지를 상품화하는 흐름 속에서 지역의 쌀 브랜드는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브랜드뿐 아니

라, 먼 단위의 세분화 된 지역의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쌀 브랜드의 풍작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쌀 브랜드의 과잉 공급은 다양한 브랜드 구색의 마련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선택의 폭을 제공하여 해당 브랜드를 추종하는 고객층을 형성에 도달하기는 커녕 군소 브랜드의 과도한 난립으로 해당 브랜드가 시장에서 지명도 형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 점유가 낮은 소규모의 개별 브랜드로는 시장에서의 인지도 누적의 미흡으로 시장성 있는 브랜드로서 견고한 위치를 형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렇듯 안정되지 못한 브랜드로는 신뢰도가 생명인 농산물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선택 되어지는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쌀 브랜드의 과잉 활용에 따른 생산자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통되는 쌀 브랜드의 유형을 분석하여 경쟁력 갖춘 브랜드의 규모의 제시, 활용 방안과 홍보방안 등을 제안하여 궁극적으로 위축되어가는 쌀 시장의 판매 촉진을 통한 쌀소비 확대를 이끌어내는 지자체 차원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BC10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탄화미가 한반도에서 발견, 벼가 재배된 것으로 추정함

2) 우리나라는 1994년 UR협상 결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쌀시장을 개방 않는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음. 2004년 재협상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개방 유예를 연장 하기로 WTO와 합의한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늘려 2014년에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7.96%를 수입키로 함.

II. 브랜드 기능 및 사례 검토

1. 브랜드의 정의 및 기능

1) 브랜드의 정의 및 종류³⁾

브랜드란 상품이나 기업이 다른 경쟁 상품 또는 기업과의 시장에서의 차별력을 갖추기 위해 표시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기호, 문자, 도형이나 이들의 결합으로 표현된 모든 식별표기에 대한 총칭으로 와인이나 위스키, 브랜드 등 농산물 가공품의 표시에서 기원하였다.

브랜드의 종류는 기능별, 형태별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별로는 회사명, 제품명, 서비스명, 슬로건 타이틀, 보통상표, 공동체상표 등이 있다. 형태별로는 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결합상표 등이 포함된다.

브랜드는 유형별로 패밀리브랜드(Family Brand, F/B)와 개별브랜드(Individual Brand, I/B)로 구분된다.

① 패밀리브랜드(Family Brand, F/B)

기업브랜드는 상호명을 그대로 브랜드로 활용하는 경우의 브랜드로 제품군이 단일 유사한 경우에 주로 활용되며 'Hite' 등이 대

표적인 활용 예이다.

계열브랜드는 동일 컨셉하에 복수의 제품군을 묶는 브랜드를 말하며 '찬마루', '드봉'을 들 수 있다.

제품라인 브랜드는 1개 제품라인을 묶는 브랜드로 '대상 헬스라인'을 들 수 있다.

패밀리 브랜드(F/B)는 마케팅 활동 집중으로 인하여 광고 홍보비용 및 관리비용의 절감 등 경제적 메리트가 있으며, 통일성있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 제품별 특성을 부각하기 어려우며 브랜드가 실패했을 때에는 회사 이미지 및 전제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② 개별 브랜드(Individual Brand) :

개별 브랜드는 개별제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맑은린', '뽕퍼스' 등이 예이다.

서브브랜드는 제품속성, 등급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브랜드로 모(母) 브랜드를 보다 정교화하는 유형이다. '삼성 문단속 냉장고'를 들 수 있다.

개별 브랜드 (I/B)는 제품특성 및 이미지 전달력이 강하고 브랜드 실패시에도 계열 제품에 대한 파급효과가 적은 것이 장점인 반면 각각의 브랜드 고지를 위한 커뮤니케이

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브랜드의 기능⁴⁾

브랜드는 시장에서의 차별성을 띠게 하는 상표 식별이라는 1차적 기능 외에 품질보증 소비자의 욕구 충족 등 복합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기본이 되는 기능으로 호칭 및 광고 기능을 들 수 있는데 브랜드는 상품을 지칭하는 호칭이 되는 동시에 제 3자에게 전달을 통한 광고기능을 스스로 가지게 된다.

두번째로 출처표시를 들 수 있다. 브랜드는 특정한 생산자가 제조·판매한다는 사실을 표시 내지 과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세번째로 자타상품식별 기능이다. 소비자는 상품의 유형·무형의 이미지를 상표와 연관시켜 기억하는 습성이 있어 브랜드는 자연히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네번째로 품질보증을 들 수 있다. 위의 기능 외에 생산자는 자신의 상품의 우수성이나 특이성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자사브랜드가 부착된 상품을 믿고 선택하게 유도한다.

재산적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상과 같은 대중의 믿음으로 신용을 확보하게 되면 그 상표는 시

장에서 타 브랜드보다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기업에 큰 이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수브랜드는 그 자체로서 기업의 크나 큰 자산이 된다.

소비자의 소유 및 사용욕구 충족 기능을 지니고 있다. 브랜드란 물리적인 존재로서 제품에 소비자의 주관적인 이미지, 기대감, 만족감 등 유형·무형의 복합체이므로 소비자는 특정브랜드가 부착된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유 및 브랜드에서 오는 심리적 만족감을 얻게 된다.

또한 매체의 다변화에 따라 시각이나 청각에 의존하는 전달 수단에서 듣고 분리워지는 브랜드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어 브랜드가 곧 마케팅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브랜드의 영향력은 크게 작용한다.

지역의 상품에 부착된 브랜드는 지역의 고유한 매력과 특성을 전달하는 주요하면서 저렴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3) 브랜드의 요소⁵⁾

브랜드를 이루는 요소로는 관념적인 브랜드의 의미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이해도를 높이는 이해의 요소와 시각적 인상을 통한 이미지 제공의

4) 권기대·허무열, "친환경 농산물브랜드 선택이 고객가치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2003.

5) 이원진, "농산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 쌀브랜드를 중심으로-" Journal of Package Design Research Vol. 15, 2004.

로 제품의 느낌을 전달하는 서체, 그리고 음성적인 뉘앙스로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칭호를 들 수 있다.

이상의 3요소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브랜드를 굿 브랜드라 할 수 있다.

2. 타지역 사례 조사

1) 경기미의 판매촉진 전략⁶⁾

경기미의 판매 전략은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품질 종자의 확대와 생산과정의 섬세한 관리를 통한 완전미 추구에 있다. 이를 토대로 대형 유통업체와의 제휴로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내부에서는 지역쌀 먹기 등의 운동으로 소비를 견고히 하고 있다.

홍보매체의 활용에 있어서도 기존 매체 외에 인터넷 매체, SP매체,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전방위적인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다.

① 경기미 품질 고급화

경기 농업을 고품질, 고부가가치를 지닌 미래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지정리, 수리시설 정비, 농로포장 등 농업 SOC를 대폭 확충하는 동시에 농업인의 자발성

과 창의성이 결집된 ‘선택형 맞춤농정’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제고와 농촌의 삶의 질을 도시수준으로 향상을 하고 있다.

②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

최고품질의 경기미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청, 오대, 일품, 고시히까리 등 고품질벼 11만 2천 ha(전체 재배면적 11만 5천 ha의 95%)를 재배하고 있으며, 고품질 우량종자 5천6백톤의 전량보급과 지력증진을 위해 논토양에 벧짚환원운동 전개, 토양개량제 공급, 객토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육묘공장을 35개소에 이어 20개소 추가 설치했으며,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38개소에 색채선별기, 싸라기선별기 등 가공 시설 개선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장 13개소를 조성해 총 56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③ 판로확대 및 이미지 차별화

SK, LG, 삼성카드 등 대형유통업체와 판매제휴로 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기획하며 소비자 중심의 판촉전 및 포장디자인 개선, KBS, MBC, 경기방송 등 라디오 CM방송을 통한 경기미 우수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역, 제주공항 등 대도시에 와이드컬러를 설치하여 이용자 행태에 적합한 SP매체의 활용에도 적극적이며, 경기미 설명제 실시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제 실시하고 있다.

그외 쌀소비 촉진 방안으로는, 학교급식에 경기미를 공급, 아침밥 먹기 운동 및 경기미 평생회원 10만명 확보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유통망 외에 신유통 활용 실태로는 인터넷 주문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자상거래 확대, 농가체험단을 모집해 쌀 생산 현장 견학, 경기미의 이미지 파급을 위한 DRS(Delicious, Safety, Reliance)운동 전개를 실시해 경기미 신뢰상승에 주력 하고 있다. 월드컵 마케팅을 들 수 있다. 2002년 3월 18일부터 경기미를 구입한 후, 판매업체에 품질표시사항을 붙여 응모한 고객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2002명에게 쌀 4kg씩을 증정, 16강 진출 기념으로 16명에 쌀 10년분, 8강 기념으로 8명에 대해 쌀 20년분, 4강 기념으로 4명에 대해 소형승용차를 증정, 이에 따라 경기미 판매액이 행사전에 127억원이었던 것이 6월이후에는 250억원에 이르렀다.

2) “구마모토의 팔리는 쌀 만들기 추진대회” [熊本 賣らる米づくり推進大會]

구마모토 현의 쌀 수급은 「새로운 쌀정책개혁」에 의한 생산 판매 2년차를 맞게 되었다. 「안전. 안심 JA미」⁷⁾의 생산확대로 서(西)일본 제일의 쌀 생산현 명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안정공급을 위한 집하수량의 확보 필요에 따라 현 전체의 운동을 전개 하고 있다. 활동 주체가 구마모토현이 주체가 아닌 “구마모토 팔리는 쌀 만들기 추진본부”라는 민간단체에 의해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팔리는 쌀 만들기 실제 활동은 마케팅믹스 전략의 기본 요소를 다루고 있으며 판매 홍보 분야(Promotion) 생산(Product), 유통(Place), 소비 확대(홍보의 연장)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판매.광고선전을 들 수 있는데 판매처와의 관계강화를 도모하는 마케팅 활동의 강화를 골자로 한다.

둘째, 생산으로 판매처의 수요에 대응하는 생산태세를 갖추는데 있다.

세째, 출하로 출하계약 확대를 통하여 안정판매할 수 있는 출하수량을 확보하는데 있다.

네째, 소비확대로 식육교육(食育教育)등을 통한 소비확대를 도모하는데 있다.

구마모토가 목표하는 안전.안심 JA쌀의 확립은 종자갱신, 농산물 검사, 생산이력 기입의 실천에 있으며 세부 실천 부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갱신으로 파종전 품종표시를 명확히

6) 이원우 · 정구현 · 류병서, “경기미의 브랜드특성 및 상품차별화 조사 연구”, 식품유통연구 제17권 제3호, 2001.

7) JA : Japan Agricultural Cooperation(日本農業協同組合)



그림 1. 구마모토 지역별 적합 품종

출처 : 구마모토 현 팔리는 쌀 전략계획

하여 산지명산의 신뢰를 확립한다.

둘째, 농산물검사 방안으로 적정 검사에 의한 품질의 안정을 도모, 신뢰를 주는 쌀산지 이미지를 확립한다.

셋째, 생산이력기재로 생산과정을 명확히 기록,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확립한다.

판매처와 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마케팅 활동

수요정보(동향)에 기초한 생산판매계획서의 책정을 골자로 판매처의 수요정보 수집과 생산능가에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여 생산판매계획을 책정 유도하는데 있다.

첫째, 수요정보(동향)의 수집·분석을 들 수 있는데, JA와 생산자가 하나되는 판매추진으로 판

매선등에 의한 정보교환회·교류회를 활발히 하여 수요동향의 수집·분석을 실천한다. 또한 「얼굴을 보여주는 생산」을 목표로 생산자가 판매활동에도 적극 참가하여 소비자의 소리를 직접 듣는 방식을 채택하여 실천한다.

둘째, 생산농가에 적시 정보전달을 들 수 있다.
각 산지의 노력, 업계지 등에 의한 수요·가격동
향 등의 정보를 농가에 전달한다.

세제, 지역별·품종별 생산판매계획의 책정·
유도로 한정적인 생산목표 수량 속에 지역의 특
성을 충분히 살리고, 우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에 근거한 품종구성·재배방법을 책정
하고 시행되도록 유도한다.

의 판촉전략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쌀 브랜드 단독의 활동 보다는 지자체의 BI전략과 보조를 맞춰 지역 이미지가 내포된 상품이 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브랜드 간 또는 품질 간의 가격차가 존재하는 브랜드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에 품종이나 등급 표기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 지역에만 380개가 넘는 쌀 브랜드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구마모토의 경우 5개 정도의 브랜드 보유와 전용지대 사용의 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

2) 품질의 문제점

3. 시사점

1) 브랜드의 문제점

지역 농산물의 규모화된 마케팅을 위해 활용하는 공동브랜드의 운용이 경직성을 띠며 다른 브랜드에 비해 소비자에게 편의제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통체계의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관리 등의 주체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생명인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쌀 브랜드의 인지 경로는 매장 내 포장진열 (59.4%), 매체를 이용한 광고(18.2%)로 구매시점

소비자의 상품 선택 안목이 높아진 것에 비해 생산자의 품질차별, 품질평가 기술 개발, 생산자의 상품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며 생산자의 품질 관리에 대한 장기 계획이나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쌀 구매 기준 또한 소비자의 쌀 구매 기준은 쌀 맛, 가격, 영양소 순으로 나타났다.

최소 기준인 규격범주를 초월한 강력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지역, 지형의 특성에 적합한 구분 경작이 적합한 품종을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유통 및 홍보 문제점

지역내 생산량의 유통경로의 정확한 파악이 급선무로 유통경로의 명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계획 생산과 정확한 시장파악이 있어야 마케팅 전략의 구사가 가능하다.

지자체(중앙·지방정부) 중심이 아닌 전협(일본 JA)에서 사업을 주도하는 일본의 경우를 보듯이 민간단체에 의한 쌀소비 확대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지역쌀의 가장 큰 소비시장은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적합한 인근 지역을 겨냥한 내부 홍보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잠재적 고객의 확보 관리를 위해 입맛이 길들여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쌀 인식, 밥맛들이기 방안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Ⅲ. 쌀 경작지원정책과
충남 쌀 브랜드 현황

1. 쌀 수요변화의 추이

1) 쌀 시장의 변화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곡물 보다는 육류와 과일·채소류의 비중이 증가되며 쌀에서 면류나 빵류 등 밀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과잉 칼로리 섭취는 탄수화물의 비중이 감소되는 식단의 변화로 이어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0년 사이 연간 24.5kg이 감소하여 82kg의 소비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 거주자의 경우 77.8kg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쌀 소비의 감소와 연속 풍작에 의한 공급의 과잉과 같은 내적인 위협 속에 1994년 체결된 UR 협상 이후 구체화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추세는 2005년 11월 국회 비준을 통과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쌀 생산의

표 1. 경지면적의 변화

(단위:천 ha)

	2002(A)	2003(B)	2004(C)	B-A	C-B
전 체	1,862.2	1,846.0	1,835.6	△16.6	△10.4
논	1,138.4	1,126.7	1,120.0	△11.7	△11.8
밭	724.2	719.3	720.7	△ 4.9	△ 1.4

출처 : www.maf.go.kr 농림부 자료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논 경작 면적이 1만 8천400ha가 감소 하였으며 정부와 농협에 의한 추곡수매의 중단과 벼농사직불제가 본격화 되면 경작 면적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의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태풍·한발·홍수의 불규칙적인 발생과 기후대의 변화로 인한 경작의 위축 등의 현상은 가장 기초적인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쌀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를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미루어 둘 수 없음을 여러 면에서 시사하고 있다.

수입쌀의 유통 등 직면한 우리 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시장 대응력을 규모화하는 방안이 가장 유효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유통·홍보 방안 등 다각도의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고 이 전략을 구체화하고 계통화 하는 방안이 바로 브랜드 전략인 것이다.

표 2. 추곡수매량의 변화

(단위:천석)

	1993	1997	2000	2001	2002	2003
생산량	32,986	37,842	36,742	38,299	34,216	30,911
수매량	9,978	8,500	6,296	5,753	5,496	5,210
정부	6,478	5,000	3,163	2,888	2,756	3,270
농협	3,500	3,500	3,128	2,865	2,740	1,940
생산대비 수매율(%)	30.3	22.5	17.1	15.0	16.0	16.9

출처 : www.maf.go.kr 농림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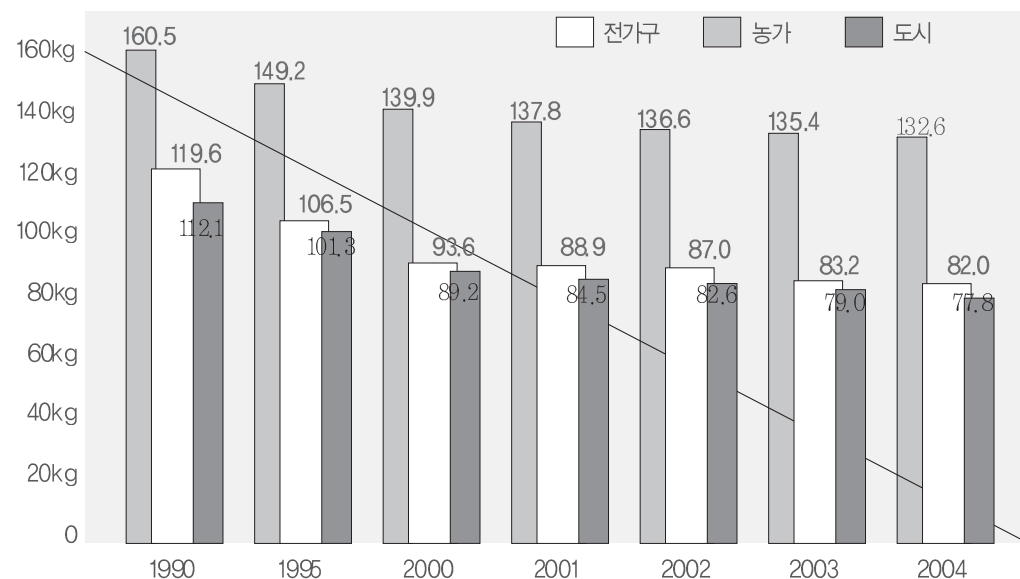
2) 쌀의 특성화

① 특색미의 개발

현재 재배 또는 판매중인 특색미는 흑미와 향미와 같이 육종을 통해 개발된 쌀, 게르마늄쌀, 키토산쌀 처럼 특이한 성분을 이용하여 재배한 쌀 종류와 인삼쌀, 영양소 코팅쌀과 같이 쌀에 특이성분을 첨가하여 가공한 쌀, GMO와 같이 유전적인 변형을 통해 개발한

쌀로 나눌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회복기능 등 새로운 기능이 더해진 다양한 기능성 쌀이 판매되고 있다. 기능성 농산물은 인체에 특별한 작용을 발휘하게 되는 물질을 새롭게 찾아내거나, 해당 농산물이 지닌 고유의 성능에다 생체방어·신체리듬조절·노화억제·질환방지 기능을 첨가한 농산물을 말한다.

그림 2. 일인당 연간 쌀소비량



출처 : www.maf.go.kr 농림부 자료

② 특색미의 종류

특색미의 종류로는 향찰벼를 꼽을 수 있다. 향찰미는 향기가 있는 찰벼를 말하며 아랑향찰벼, 설향찰벼 등의 품종이 있다.

흑미는 검은 빛을 띤 쌀을 말하며 흑진주벼, 흑남벼 등의 품종이 있다.

향미는 향이 있는 벼를 말하며 종류로는 향미벼1호, 향미벼2호, 향남벼, 미향벼가 있다. 이외에도 대립양질 성질을 이용, 튀김·양조용으로 적합한 대립벼 1호 등이 있다.

③ 유통

대부분 정부보급종이 아니므로 농가의 신청에 의한 공급은 없으며 재배 희망 농가가 작물시험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종자를 구입하는 실정이다.

재배면적은(작물시험장추정) 2만ha이내일 것으로 추정되며, 소비처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④ 특이한 성분을 이용하여 재배한 쌀

게르마늄 쌀은 울진지역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게르마늄 성분을 이용하여 비료를 조

제하여 살포한 쌀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에 의해 고품질 환경농산물 생산되고 있다.

키토산 쌀은 게에서 추출한 키토산을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화학비료를 소량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농협에서 재배농가에 액상 키토산 및 유기질 비료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2) RPC 중심의 계열화

현재 지역에 산재되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RPC 중심의 계열화를 통해 고품질 쌀 산체제 정착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품종통일·저투입농법·수확후 관리강화·브랜드화 하며, 경영이 부실한 RPC의 통합병을 촉진하고,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며, 소비자가 식별하기 쉬운 쌀 포장표시제의 본격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3) 고품질 쌀 생산 체계

완전미의 추구를 위해 완전립(모양·색태·쌀알이 균일한 모양이 우수하며, 윤기·찰기·질감·냄새가 우수한 밥맛 좋은 쌀)을 지향하며, 안전성이 검증된 친환경쌀, 브랜드를 통한 차별화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고품질 쌀 생산 전략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RPC)를 핵심체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계열화를 들 수 있다.

지력증진(토양개량·유기질 비료·벼집환원) ➡ 품종(고품질·적지·적품종) ➡ 재배방법(친환경·적기이앙·적정주수·적기 수확) ➡ 수확후 관리(건조적온저장·완전미가공) ➡ 유통(유통기간 단축·포장·브랜드·품질표시제)의 과정을 거친다.

2. 쌀경작 지원 정책

1) 경쟁력 기반 구축

쌀경작 지원은 쌀 시장 개방확대 시에도 쌀소득만으로 지탱할 경쟁력을 갖춘 기반 구축하는데 우선 목표가 있다.

경작규모로는 6ha 수준의 전업농 7만호 육성하며, 영농규모화사업 지원 확대, 금리 등 지원조건 개선하고 있다.

또한 경영이양직불금을 대폭 인상, 매월 수령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1ha, 60~69세 월 41만원, 10년 이상).

또한 DDA 이후를 대비, 공공비축제 도입 등 전반적인 양정 제도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충남논단 3

충남지역 쌀 브랜드화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4) 농축산물 홍보 시스템 구축

홍보 관련 예산과 마사회적립금 등을 활용하여 쌀, 우유, 과실에 대한 소비홍보를 확대하여 소비자 신뢰를 통한 소비기반 확보한다.

일회성 홍보보다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장기적인 방안을 유도한다.

5) 충청남도 의 쌀 홍보 방안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농협중앙회와 연계한 충남쌀 행사(서울 및 대전 하나로 마트)를 연간 2회 개최하고 있다. 하절기에는 대전, 부산, 강릉 등 충남쌀 홍보 해수욕장 투어 실시하고 있다.

매체 광고로는 서울과 대전, 충남 지역 시내버스 외부광고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수도권에서의 대형 전광판 광고를 실행하고 있다.

3. 브랜드 쌀의 소비자 인식⁸⁾

1)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의 구매 형태

친환경농산물 브랜드의 유형별 구매빈도는 농협브랜드(35%), 기업형 브랜드(26.8%), 생산자 브랜드(23.9%), 유통 업체브랜드(10.9%), 지자체

단체 브랜드(3.4%)로 나타났다.

브랜드 운용상 장기적 관점에서 영세한 농산물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브랜드가 남발되어서는 브랜드의 차별성을 확보 할 수 없으므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이미 구축한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마케팅하는 것이 신뢰감과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다.

브랜드 선호도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구매이유로는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 같아서”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이에 따른 브랜드 선호도는 농협 브랜드, 기업형 브랜드, 생산자 브랜드의 비율이 유사하였다. 따라서 전국적인 유통망과 대량 거래처가 상품 관리에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고 있다.

2) 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쌀 브랜드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현재 쌀 브랜드 1,034개가 등록, 상표등록 브랜드 266(25.7%), 의장등록(6.9%), 품질인증 브랜드 226개(21.9%)로 지역별로는 전남, 경기, 전북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지역에는 2005년 현재 38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쌀 브랜드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지역 이미지 강조한 브랜드로 ‘임금님표 이천쌀’, ‘안성맞춤 쌀’ 등이 이에 속한다.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브랜드로는 ‘휴전선 쌀’, ‘계화도 간척지쌀’ 등이 있으며, 광역공동브랜드인 충남의 ‘청풍명월’을 볼 수 있다.

쌀의 품질에 따른 브랜드로는 안정성 강조하는 유형이 대부분으로 ‘오리농법 쌀’, ‘메뚜기 쌀’이 있다.

유색미, 향미 등 기능성 강조 브랜드로는 ‘미네랄 쌀’, ‘기토산 쌀’, ‘인삼 쌀’을 들 수 있다.

쌀 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으로는 구매규모가 소형화, 포장단위를 소포장화 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쌀의 기준으로는 윤기와 투명(25.3%), 묵은 냄새가 없는 것(17.4%) 등으로 완전미에 대한 잠재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밥맛의 결정요인으로는 생산지(22.7%), 품종(21.7%)으로 인지되고 있다.

쌀 구입시 주 고려사항으로는 잔류 농약정도, 영양가 높음, 쌀알의 모양, 쌀 생산지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브랜드 쌀의 브랜드 파워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쌀 브랜드 파워가 1위(30.35), 2위(23.03)로 나타나 전체 1위(신라면 82.61), 2위 해표 식용유(80.52), 3위 서울우유(77.83)에 비해 극히 저조한 편이다.

매장에서의 불만요인으로는 밥맛이 없음(36%), 찰기부족(22%) 등 품질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포장재 표시항목 중 가장 관심을 보이는 항목으로는 브랜드명(25%), 생산지명(22%)으로 나

타났다.

쌀 포장재의 추가 기재요구항목으로는 보관방법(23%), 안정성 표시(18%)가 요구 됐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의 종류로는 밥맛이 좋은 쌀(32%), 찰기 있는 쌀(20%)등 품질문제가 주로 대두되었다.

기능성 쌀 중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비만(24%), 두뇌(18%), 성장발육(12%)이며, 쌀 구매시 포장디자인의 영향은 그렇다(54%), 그렇지 않다(30%)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장디자인의 영향 : 백화점(75%), 미곡상(23%)으로 고소득 층의 경우 영향력이 크므로 브랜드 고급화 전략에서 포장디자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시중 쌀의 브랜드 미흡 요소로는 품질유지(25%), 홍보 및 마케팅(20%), 시장개척(13%), 차별 브랜드 개발(12%)로 조사되었으며

브랜드 파워 강화 방안으로는 균일한 품질유지(29%), 인증의 신뢰성(20%), 안정성 차별화(13%)를 꼽았다.

3) 소비자의 쌀 구매 기준

2005년 5월 대전에서 개최된 충남쌀 축제 행사장을 방문한 일반인 3,114명을 대상으로 쌀 구매행태에 관한 소비자의 기준을 산지, 맛과 질, 친환경, 브랜드, 가격대별 기준과 포장단위별로 청취한 결과 대전지역의 경우 충남쌀과 지역쌀

(고향쌀)에 대한 구입 선호가 일방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쌀의 주 소비시장은 대전을 비롯한 충남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쌀 구입기준은 맛과 질이 67.9%, 친환경미가 16.6%, 가격대 10.1%, 브랜드 지명도 4.5%, 홍보 영향이 0.9%로 나타나 브랜드의 영향력 보다는 품질에 의한 기준이 구매를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구입하는 포장단위는 20kg이 75.2%, 10kg이 12.7%를 나타나 아직까지는 중용량 포장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쌀 판매 개방에 따른 구매의사는 69.5%의 응답자가 사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나 가격이 저

렴한 경우 구입하겠다는 의견도 13%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주요국가별 쌀 식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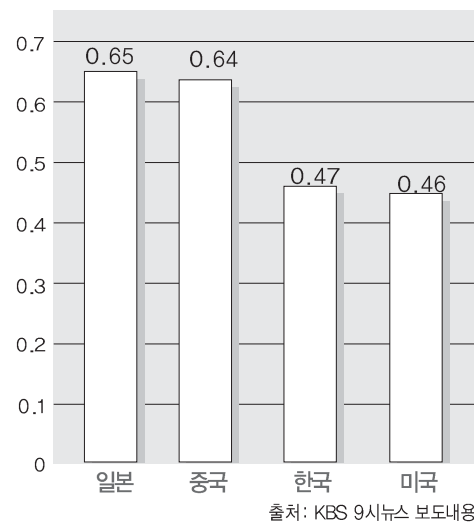


표 3. 소비자의 쌀 구매 기준

구입쌀의 산지	충남		고향지역		경기		기타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2,139	68.7	615	19.8	130	4.2	230	7.4	3,114		
구입 기준	맛과 질		친환경미		홍보가 잘된 쌀		유명 브랜드		저렴한 가격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2,115	67.9	516	16.6	29	0.9	141	4.5	313	10.1	3,114
포장 단위	5kg		10kg		20kg		40kg		기 타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42	1.4	394	12.7	2,340	75.2	305	9.8	33	1.1	3,114

출처 : 충청남도 농산과 자료

표 4. 수입쌀 구입 의향

수입쌀 구매 의향	사지 않겠다		가격저렴시 구입		품질에 따라 구입		한번은 구입		모르겠음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2,164	69.5	403	12.9	82	2.6	144	4.6	321	10.3	3,114

출처 : 충청남도 농산과 자료

4. 충남지역의 쌀 브랜드의 문제점

충남지역 쌀 브랜드의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지자체 공동브랜드, 농협브랜드, RPC별 브랜드, 개인 영농, 작목반 등 개별 브랜드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브랜드는 해당 상품의 품종이나 특성의 표현 보다는 지명, 지역 명소 등 지역 차별성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브랜드의 소재에 있어서도 단순한 지명 위주로 브랜드로 품질이나 품종의 식별이 어렵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소재의 제약은 독창성의 결여로 이어져 유통중인 브랜드의 모방이나 패러디화하여 표현 되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충남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충남 지역쌀 중 대표 브랜드로 내세울만한 브랜드가 아직 확고히 구축 되지 못한 현실이다.

1) 지역공동브랜드

지역공동브랜드는 지역 농산물 시장 규모의 약점을 보완하여 조직적인 홍보와 판로 개척 등 마케팅 전략의 구사가 용이한 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른 품목의 이미지 하락에 따른 동반 효과를 감수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상품마다 브랜드 또는 포장에 표현하여야 할 장점이나 브랜드 체계가 타 상품과 연계가 가능한 획일된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쌀 브랜드

의 주 기능인 품질 전달의 원활한 전달이 어려워지게 되며, 이러한 보편적인 장점의 표현으로 지역 특성이나 재배 방법이 유사한 인근 지역과의 비슷하게 전개 될 수 있다.

2) 농협브랜드

농협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여 계획 집하, 선별, 포장, 유통, 홍보 등 전 분야에서 주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주체이면서도 지역에서 이미 만들어진 브랜드와 포장재에 농협마크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유통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3) RPC브랜드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출하하는 브랜드의 유형은 동일한 지역내의 브랜드와의 차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내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를 RPC별로 부분개작, 패러디에 따른 아류를 만들어 내는 사례가 빈번한 편이다.(예 : 서천 동백쌀 ➡ 서해 동백쌀) 이러한 임의적인 개작은 브랜드 경쟁력의 저하와 조형 수준의 하락을 초래하여 본래 브랜드의 이미지마저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4) 개별 브랜드

개인영농, 작목반이 사용 주체인 브랜드로서 체계적인 과정의 브랜드 개발 과정이 아닌 스스로 제작하는 경향을 보이며 브랜드 유형이 소비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보다는 감성적 문구로 흐르고 있다.

매출량이 적기 때문에 시장접근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브랜드의 구축이라는 목표보다는 이미 지명도가 높은 인근 타 지역의 기존 브랜드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동반 효과를 노리는 경향이 있다. 개별 브랜드의 현황 역시 높은 수준의 활용에 못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5) 조형성의 문제점

브랜드 개발과정에서 브랜드 전문가에 의한 브랜드 창안 비율이 40%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소요되는 개발비용 역시 5백만원 이하의 소액 사례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상품의 특·장점, 지역의 특성, 지자체의 브랜드와의 연계, 지역의 중단기 비전의 이해, 시장의 설정과 판단 등 브랜드 개발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과정의 이행 없이 아이디어 도출 수준의 이름짓기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브랜드 차원의 개발이 아닌 지대(포장)디자인을 포함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브랜드 개발을 브랜드 전문가가 아닌 지대 제

작업체가 주도하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다.

① 소재상 문제점

단순히 지명을 사용한 브랜드는 지역을 벗어난 외부시장에서 인지도 부족으로 브랜드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 위주의 브랜드 이름에서 벗어난 차별화 할 수 있는 요소의 활용이 요구된다.

브랜드 자체 또는 포장재에 표기되는 청결미, 특미 등 모호한 품질 표현 역시 오히려 상품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품질표기로 상품의 품질을 구분하기보다는 표시가격에 품질 판단을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쌀 품종이 구매를 좌우하는 가장 비중있는 요소임에도 브랜드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아산의 ‘둔포갯벌추청쌀’ 한 사례뿐이었다.

② 독창성의 문제점

충남 내 쌀브랜드 현황의 문제점으로 독창성을 들 수 있다. 지역에서 이미 사용되고있는 브랜드를 모방한 경우로는 ‘칠갑산청양미’/‘청양칠갑미’, ‘아산맑은쌀’/‘칠갑산맑은쌀’, 연기의 ‘으뜸이쌀’/태안의 ‘으뜸쌀’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기능쌀의 경우 지역 차별력은 표현하지 않았

으며 ‘키토미’/‘키토산미’ 사례처럼 상품차별력 또한 기능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미약한 수준이었다.

6) 지적재산권상의 문제점

조사 대상 브랜드 중 상표 및 의장등록률이 28.9%로 지적 재산권화 및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등록의 과정은 독창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며 수준 높은 개발 촉진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상표 및 의장등록률이 낮은 것은 개발 사용하는 브랜드가 상표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공동브랜드가 아닌 개인 소유의 단독 브랜드인 경우 출원부터 등록, 매년 납부해야하는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7) 마케팅적 문제점

충남지역의 쌀은 최적의 경작조건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임에도 타 지역의 쌀에 비해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좋은 가격대를 받고 있는 경기미의 가격지수를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 충청미 96.0, 전라미 94.0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매자의 브랜드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높으나 가격의 차별을 인정하여 프리미엄에 대한 댓가를 지불할 의사는 낮기 때문에 현저한 차별화

또는 품질의 계량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충남쌀 브랜드 중 소비자 주관의 경진대회에 입상하여 지명도를 갖춘 경우가 있다. 하지만 쌀시장에서 확고히 위치를 확보한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는 아직 없다. 강력하게 집중된 브랜드 대신 수많은 군소 브랜드의 산재로 파워브랜드 조성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단일된 이미지의 갖추고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브랜드를 도입한다는 의미는 브랜드 네이밍과 포장 디자인에만 집중하거나 새로운 네이밍을 기존의 상품에 새로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이름에 맞는 내용물(품질)의 혁신이 동반되어야 하며 새로운 브랜드를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라는 전략의 수립까지 포함하고 있다.

생산자 역시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관련 정보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브랜드가 자산이라는 인식 부족에 브랜드 관리 능력도 부족한 현실이다.

충남쌀의 타깃의 다변화와 및 식생활 패턴의 변화, 수입 개방으로 복잡해져가는 쌀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개인브랜드라 할지라도 전략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8) 정책적 문제점

개별적인 작은 규모의 브랜드 개발 지원으로서의 효과적인 충남쌀 홍보에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 평가대회 수상 브랜드등 객관적 평가 사례를

소재로 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 표시만 했을 뿐 충남이라는 지명을 표시한 예가 전무한 형편이다. 지역의 쌀 브랜드 지원이 충남쌀이라는 소속을 분명히 한 경우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만 한 사례를 추천 또는 지원할 이유가 없다.

최근 들어 지자체에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활동과 국내의 판매유통망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의 주도는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시장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속적인 품질관리, 시장 대응 등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품질평가기술 개발과 품질평가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하며, 정부 주도가 아닌 품질 관리 유지기반 마련, 정보의 공유 등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의 원활한 활동이 요구된다.

V. 충남지역 브랜드 쌀 개선방안

1. 생산자 역할

1) 경작방법의 공조

개인의 경작 규모나 유통물량으로는 친환경농

업을 위한 토양 조성 등 이상적인 경작환경의 조성, 시비나 지력 증진, 농약의 선택과 사용, 시장 확보 및 홍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경작 방법이나 품종선택 브랜드 채택 등을 연계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생산 및 유통의 투명화

파종부터 수확 까지 전 경작과정을 기록, 생산 이력제나 실명제 도입에 대비하여 기록하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생산이력을 토대로 상품에 표기 등급이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정해지도록 한다.

유통 역시 자신이 출하한 쌀이 어떠한 브랜드의 상품으로 어느 지역에서 소비되는지의 경로를 파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보의 공유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등 빠른 정보를 수집 공유하여야 하며 생산자 자체의 쌀 경작연구회 등을 통한 자가 발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시장전략의 보유

소규모의 작목반이나 개인영농이라 할지라도 복잡해져가는 쌀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

나 판매 방안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설령 유통을 다른 기관이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생산한 상품에 대한 관심과 책임은 이어져야 한다.

2. 지자체 역할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그간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지자체의 농산물 마케팅 분야의 관여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당 지역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의 의무 사용 조례가 위법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 되는 등 지역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케팅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지방정부와 농협 그리고 민간단체의 역량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 정부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지침 및 기준 마련과 품질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의 마련, 쌀 생산자의 교육, 그리고 위축되어 가는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방안 지원에 주력하여야 한다.

1) 충남쌀 고품질화 방안 수립

급변하는 쌀시장에서 대응하기 위한 충남쌀의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충남쌀이 도달하여야 할 품질 수준에 부응하는 기술 개발과 상향된 검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웰빙 바람과 함께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소비자가 쌀을 구입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과거의 기준인 가격대보다는 안전성과 품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권장표시 사항인 등급도 특품·상품 등 일정한 기준 없이 매겨지고 있어 등급표시의 객관화가 시급하며, 품종혼입 및 완전미 비율 등 품질요소의 표기 의무화와 위반시 제재가 강화되어 '완전미(Head rice)' 유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완전미 생산을 위한 생산 환경의 조성으로 지역, 지형에 적합한 종자의 개발과 권장, 토양개량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비나 물관리와 같은 경작방법, 저장, 도정 등 보관 유통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완전미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인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도정기술과 도정기의 개선이 요구된다. 경기도의 경우처럼 색깔선별기의 도입으로 한 차원 앞선 품질관리 수준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의 기준이나 규격에 맞추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상향된 기준의 설정과 관리로 자신있는 충남만의 쌀 품질을 구축하는 앞서가는 자세만이 쌀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쌀 포장지대의 표기 내용의 변경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쌀 지대에는 포장중량, 생산년도, 생산자명, 전화번호, 품종명, 특.상 등 등급표시, 변질시 교환

문구, 취사법, 기타 사항이 표기되었다. 이를 포장중량, 생산년도 및 도정일자, 생산자코드, 품종명, 세분화 된 등급표시, 변질시 교환 문구 및 전화번호, 그해 경작 지역 기후 상태, 적합한 용도로 변경이 바람직하다.

넷째, 소비자의 고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인증도 중요하지만 생산이력 추적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이다. 생산이력제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재배되고 수확되었으며, 수확 후 어떤 방법으로 가공·유통되었는지를 소비자가 직접 농산물 생산이력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우수 농축산물 관리제도로써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와 생산이력제에 대한

연구개발과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이력제 도입을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 토양환경, 시비, 방제, 수확, 건조, 저장, 도정 등 쌀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들이 기록관리 되어야 한다.

2) 브랜드의 계열화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제품표기사항 외에 충남이 생산지라고 표기 한 경우는 보령의 푸른내음쌀, 태안의 으뜸쌀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마모토에서 생산 유통되는 ‘아소 고시히카리’ (阿蘇 コシヒカリ), ‘삼도 도키메키’ (三度のときめき), ‘아키게시키’ (あきげしき), ‘모리노 구마상’ (森のくまさん), ‘구마상의 꿈’ (くまさんの夢) 등 5종의 전용지대를 살펴

표 5. 충남쌀 브랜드 통합 유형

서해(간척미)	태안, 서산, 보령, 서천 서해연안의 청정 재배환경과 간척지, 충적토의 토양의 우수성
내포쌀	당진, 예산, 홍성 전통적인 고품질 쌀 생산지의 이미지 부각, 쌀 생산 환경 적지
서해(간척미)	아산, 천안, 연기 도시지역에 위치한 경작지로 재배과정의 투명성 등의 부각
계룡미	공주, 청양, 논산 계룡산 칠갑산 등 고산 청정 지역과 논산평야의 자연 환경 강조
금강쌀	금산, 부여, 서천 일부 충청의 젖줄인 금강의 수원이라는 재배 환경의 부각
기능쌀 경우	상품별 개별성을 살려 유연하게 활용됨을 원칙으로 하며 군단위 명칭을 브랜드화 (예: 홍성 키토미 등)

표 6. 쌀 브랜드의 평가 기준

총점 60점	품 질	상품질 (15)	품종(5)	●●●●● 추청, 일품, 새추청, 수라 등
			식미(5)	●●●●● 미각, 후각, 촉각 등 맛 기준
			외관(5)	●●●●● 이물질, 광택, 균일, 백미, 균열, 반점
		생산환경 (15)	기후(5)	●●●●● 재배 지역의 그해 기후 조건
			저장(5)	●●●●● 저장 방법의 구분
			도정(5)	●●●●● 도정 방법의 구분
	외 관	조형미 (15)	전문성(5)	●●●●● 전문가에 의한 개발, 개발비
			차별성(5)	●●●●● 소재 등 타 지역과의 차별성
			포장재(5)	●●●●● 포장 지대의 재질, 디자인 등
		마케팅력 (15)	마케팅방안(5)	●●●●● 명확한 타겟 및 방안 마련
			홍보활동(5)	●●●●● 광고나 이벤트 등 홍보활동
			수상경력(5)	●●●●● 경진대회 등 수상 경력 유무

본 결과 ‘구마모토쌀’, ‘삼립지역 구마모토쌀’이라는 표현이 포장재 상단에 일정하게 표기되고 있었다.

충남이라는 지역명칭을 삭제하고 시·군 명칭이 또는 아예 지역을 인지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이미지의 축적이 어렵다. 이러한 규모를 연합하려는 방안으로 기존의 난립된 브랜드를 통폐합하여 대표적 브랜드와 포장재를 개발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홍보를 하자는 방안이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임금님표 이천쌀’ 과 같은 대표 브랜드에 의한 경기도산 쌀 전체의 이미지가 함께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시·군 공동브랜드가 아닌 공간적으로는 시·군의 규모를 넘어선 조직적이며, 지형, 재배 특성을 부각하여 지역의

상세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외부의 소비자 입장에서 신뢰가 가는 브랜드 형태가 필요하다.

둘째, 막연한 등급화보다는 소비자가 이해하고 차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등급화를 통한 품질 유지 및 합리적인 가격대 제시가 소비자의 신뢰로 이어지게 된다.

세째, 기능쌀인 경우 충청남도산이라는 표기 외에 각기 특성을 살린 개별 브랜드 유형의 활용이 적합하다. 다만 시장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슷한 기능인 경우 브랜드나 함께 사용되어지는 디자인 요소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신규 브랜드 개발은 물론 사용중인 브랜드 또한 브랜드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브랜드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조형성 등 매우 주관적인 요소의 비중

이 크며, 소비자 조사에서도 쌀 구매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쌀맛 등 상품의 질로 나타났기 때문에 품질과 품질을 뒷받침 해주는 경작환경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저장의 평가는 저온 저장고 등 시설의 구분으로 평점하며, 기후는 재배 지역의 그해 기후가 벼의 생육조건에 가장 이상적인지 공동 배점을 마련하여 평점하는것이 바람직하다.

3) 쌀 지원 민간센터 설립

완전미 지향의 품질관리 시스템이나 생산이력 제 등 품질관리의 강화방안은 일본쌀의 인증 시스템과 같은 특별재배미, 시스템미의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품질 이행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이 기존의 농협이나 곡물검사소 외에 재배이력이나 재배관리일지의 확인을 시행 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설립이 예상된다.

쌀센터에서는 이러한 재배 관리의 확인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루기 힘든 쌀 소비확대운동을 민간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쌀관련 민간단체에 의한 학교급식 식단 구성에 밥 비중이나 지역쌀의 소비를 요구를 하고 있다.

쌀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쌀홍보교실, 쌀음식 개발, 소규모 쌀컨테스트 개최등을 수행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3. 농협의 역할

농협은 조직화된 유통망, 저장, 생산설비의 보유 등 쌀 품질 향상과 소비 확대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쌀 소비 확대 및 유통 개선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추곡수매정책의 중단 등 쌀 시장의 거센 변동 속에서 농협이 쌀 유통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새롭게 변모된 위상을 보여주어야 하며 쌀소비 확대를 위한 집중적인 마케팅을 수행해야 한다.

1) 소비자 대상의 쌀홍보 확대

생산자와의 접촉을 지자체에서 담당한다면 쌀 소비자와의 접촉은 농협의 몫이다. 막연한 쌀 소비 확대나 지역쌀 팔아주기 등의 호소가 아닌 쌀의 품질을 인지할 수 있는 소비자의 안목을 키워주는 등 교육과 홍보가 결합된 형태의 메시지 전달이 소비자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2) 쌀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방안 수립

① 충남쌀의 정확한 시장 설정

충남.대전지역을 대소비 시장으로 겨냥하여 생산물량의 많은 비중을 지역내에서 소비하여야 한다.

구마모토현의 경우 전체 집하물량 64,400

표 7. 충남쌀 브랜드 차별화 방안

가격대별	고가미	일반 상품과 차별력 있는 노블 브랜드로 일반 기준이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가격대는 일반 상품의 1.5배 이상을 책정, 일정한 매장에서만 선별 판매 대량 수확 시스템이 아닌 선별 경작 가공 시스템으로 경작 이력 기재가 가능 수도권 및 대도시 공략 상품/기준 포장 단위의 탈피/개별포장 실 부착
	중저가미	기존의 가격대를 유지하는 대중 상품으로 기준 규격이 엄격히 적용된 상품
용량별	소량소비	쌀 소비가 적은 소비층을 겨냥한 상품으로 완전미를 전제로 소량화 세척미, 향의 유지를 위한 진공 포장 등의 적용, 편의점 등에 진열이 유리한 소형 행거 위주의 포장 방식
	일반용	일반적인 가정사용을 타겟으로 하는 용량 및 포장 유형을 유지하는 상품
판매장소	급식용	음식점, 시설급식 등 소비량이 많은 소비처를 위한 상품유형으로 지대 위주의 포장재, 단색 또는 2색의 간결한 지대 인쇄 처리
	외지용	생산지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 상품군으로 충남 지역의 표시가 분명하며 상품 품질 표시의 전달이 수월한 상품군으로 3~5개의 대표 브랜드화
	내지용	생산지 내에서 유통할 상품으로 외부 판매용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브랜드를 활용 하면서 자연 도태후 생존하는 브랜드의 유지 전략

톤 중 현내 출하가 35,300톤(54.8%), 광역 지역인 큐우슈우 지역으로의 출하가 12,400톤에 이르고 있다.

② 대표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 개발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표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권역별 또는 시·군 지역별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집중관리 및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브랜드 및 디자인 평가를 실시하여 브랜드 수를 대폭 축소 조정 할 필요가 있다. 강한 브랜드는 성질이나 품질 표시와는 무관해야 하고, 지리적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야 한다. 강한 브랜드는 특허청의 등록 가능성이 높고, 법률적 시비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가 거

의 없으며, 또한 등록된 후에는 그 보호 범위가 넓어 타인의 무단사용을 저지할 수 있다. 지역 명칭을 초월하는 브랜드는 장차 그 제조원을 당해 조합의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국 대상으로 확장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③ 쌀 브랜드 파워 향상과 RPC 구조조정

고품질 쌀을 생산 가공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가격을 받고 거래가 되려면 최첨단의 RPC 시설개선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RPC 경영자의 전문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타 지역 우수 RPC의 브랜드화 판매전략 등에 대한 벤치마킹 방안도 필요하다. 기존의 RPC는 전국 최고수준, 그리고 수입쌀과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쌀의 가공과 지속적인 브랜드 파워 향상에 역부족이다. 많은 RPC는 낙후된 시설, 규모의 경제성 상실, 첨단장비/시설의 결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품질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브랜드 파워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④ 고객관계관리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도입
- CRM은 「고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오래 유지시키고 결과적으로 고객의 평생가치(Life time value)를 극대화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된 프로세스로 고객이 평생동안 경쟁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 자사의 것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관리 방안을 말한다.
- 이를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 먼저 진정한 가치를 주는 고객은 누구인가를 파악 유효 타깃의 설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고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고객의 성향 파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진정 원하는 고객의 욕구, 필요 파악 등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 따라 차별

화 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등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쌀 판매 확대를 위해서도 이렇듯 고객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쌀 소비 고객에 대한 관계는 현재까지 광고나 판촉 행사 외에는 전무하다. 고객과의 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아동층, 청소년층 등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고, 식미치와 품질의 유지관리, 고객의 요구의 청취 등을 통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하여 이탈고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고객을 관계 누적에 따라 점차 우량 고객으로 격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유통 차별화 전략

수입쌀이 시판되기 시작하면 브랜드간 가격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고품질의 안전성이 있는 브랜드 쌀 가격은 매우 높게 형성되고, 반면에 품질이나 맛, 안전성 면에서 특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저가로 판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쌀의 품질차별화가 가격 차별화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자는 최선을 다해 대형 판매점과의 계약공급을 추구하면서, 리콜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판매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소비자들간의 체험담을 통해 실질적인 홍보가 잘 이뤄

지게 된다. 주로 고품질로서 자신감을 갖춘 브랜드 쌀은 대형 백화점을 상대로 판매계약을 시킬 수 있도록 집요한 협상을 해야 하고, 중저가로 판매될 수 있는 쌀은 연쇄점과 같은 유형의 판매처를 택해서 유통시키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차별 분야로는 소비자 세분화에 따른 가격대의 이원화, 용량별 차별 상품 등이다. 기존에 사용하는 브랜드는 도내 또는 대전 지역용으로 계속 공급한다. 분명한 마케팅 전략이 수반된 대표 또는 통합브랜드는 외부 시장용으로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브랜드는 자연 도태되어 파워브랜드만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쌀소비 촉진을 위한 지자체 지원 방안

1) 쌀홍보 방안

① 쌀에 적합한 매체 활용방안

쌀 특성상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의 형성이 어려우며 대중 매체를 통한 광고나 가상 매체의 효과가 미미한 형편이다. 최근 지자체가 클라이언트인 쌀CF의 노출이 늘고 있는데, 전달하는 메시지가 지자체 생산쌀 광고인지 전반적인 쌀 소비촉진 홍보인지 모호할 정도로 대중 매체의 활용은 위험 부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쌀의 홍보는 쌀축제 등의 판매촉진전에 큰 비중을 두며 터미널, 기차, 버스, 건물 외벽 등 옥외 매체인 SP 매체의 활용, 방송, 신문 등 대중매체의 적절한 활용이 적합하다.

매체광고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매장에서 현품을 직접 보고 구매욕구를 느낀다는 선행 연구결과 등을 미루어 구매시점 판매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매장에 해당 상품의 입점 또는 실물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코어)를 자극하는 홍보가 효율적이다.

이러한 소비 특성을 살려 현재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봄, 가을, 여름철 해수욕장 투어와 같은 판촉 행사의 개최 횟수를

그림 4. 개발된 쌀음식(쌀빵, 밥커들렛, 쌀가루수단)



늘려 전국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격의 투어 식 홍보전이 필요하다. 또한 하절기 해수욕장 투어처럼 가을철 산행전 등 특별전을 개최하는 방안도 도입되어야 한다.

2) 쌀음식개발의 확대

① 쌀음식 개발

쌀소비 감소의 대표적인 요인인 밀 소비를 쌀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로 쌀 음식 개발이 시도 되고 있다. 밀 사용을 쌀로 대체하는 시도 외에 밥의 영역 확대(퓨전화)와 근본적으로 쌀성분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개발을 들 수 있다.

대표적 유형으로 밀의 대체용도를 들 수 있는데 쌀빵, 쌀국수, 쌀피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는 밥의 영역 확대에 따른 꽃게밥, 밥경단, 밥버거, 밥커틀렛 등이 있다. 밥이 아닌 쌀 성분의 활용은 쌀가루묵, 쌀젤리, 쌀가루스프, 쌀가루수단이 있다.

현재 개발되는 쌀음식의 주류는 밀 대체나 쌀 음식의 영역의 확대로 패스트 후드와의 퓨전음식이라 할 수 있다. 음식의 새로운 창출은 특정한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식문화의 창출이기 때문에 두터운 선호층과 시대적 경향의 부합이 요구된다.

최근 불기 시작하는 슬로우 푸드, 저칼로리 음식의 선호는 쌀 음식 개발 방향에 많은 것

을 시사하고 있다. 퓨전 위주의 음식에만 의존이 아닌 품위있는 고급 음식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밥을 먹을 수밖에 없게 하는 주변 음식인 김치나 불고기 등의 상승 또한 쌀소비를 늘리게 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역의 특색 음식으로 자리 잡은 영양굴밥, 대량 유통에 성공한 식반, 쌀음료, 기내식으로 각광 받는 불고기나 김치저장고 등이 쌀(밥)소비 확대의 주역이라 할 수 있다.

쌀 음식 개발에 있어 주안점은 첫째, 대체용도나 퓨전 형태 보다는 기존 용도의 고급화나 새로운 용도의 창출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식문화 개념으로 접근과 시대의 트렌드와 부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쌀 소재 음식 외에 쌀 소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차림 음식 개발을 들 수 있다.

② 쌀 음식 컨테스트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쌀 음식 컨테스트의 기획으로 충남은 곧 고품질 쌀이라는 연상을 증진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밥맛 들이기

입맛이 형성(각인)되는 시기의 어린이들에게 충남쌀에 대한 인식 증대와 더불어 밥맛

에 길들여지도록 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밥(쌀)의 가치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교재제작 및 교육, 민간단체에 의한 관내 학교급식의 충남쌀 사용을 권장한다.

④ 충남쌀 사용업소 권장

우수한 품질의 충남쌀 사용 음식점을 활성화 하여 초기에는 도내를 기반으로 시작하여 대전, 서울 등 큰 소비시장으로 확대해

표 8. 유럽의 그린투어리즘 관련 조직 현황

프랑스	설립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캉스 문화가 정착 1950년대 부터 정부와 민간조직이 합심하여 농촌의 관광사업을 추진
	조직현황	전국 최대의 민박 조직인 '지트 드 프랑스(Gite de France)' 전국연맹의 민박사업과 농업회의소에서 공동브랜드 네트워크로 운영하는 '농장에서 오신것을 환영합니다(Bienvenue a la Ferme)'
	운영방식	지트 전국연맹은 전국 농촌 민박 체계를 단일 조직망으로 연결 5가지 유형(독채대여, 객실대여, 아동민박, 농가 캠프, 간이 민박)운영 최저 1등급에서 4등급 까지 보리의 수로 표시
	프로그램	농업회의소 그린투어리즘은 내용이 다양함(농가숙박, 식사, 특산물, 승마, 어린이농장체험, 농업체험, 사냥, 가족단위 체류, 캠핑)
독일	설립배경	60년대 이후 알프스 산악지역인 바이에른 주에서 농업을 관광에 접목시킨 정책이 처음 시도 후 인접한 바덴 주, 뷔르템베르크주 등으로 확산 '농가에서 휴가를'이란 그린투어리즘운동으로 발전
	조직현황	독일농업협회(DLG)와 식량농업국 정보서비스협회(AID), 독일 농민연맹, 농업신용은행 등에서 운영.
	운영방식	숙박시설로는 객실형, 별채형, 여관, 하숙, 간이, 특급호텔, 유스호스텔, 야영장 등이 제공 국립특허기관(RAL)이 인정하는 DLG 품질보증마크
	프로그램	공공시설로는 다목적 온천시설(Cure house), 향토박물관, 음악당 사우스시설 승마장, 자동차 야영장(Camping Car)등을 갖춘
영국	설립배경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영국에서는 '휴가사업(holiday business)' 이 활성화. 1983년 전국적 네트워크 규모의 농장휴가협회(Farm Holyday Bureau) 설립 2000년 Farm Stay UK로 개편
	조직현황	Farm Stay UK는 농가 민박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공동 마케팅활동, 회원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뉴스레터, 홍보물 제작), 웹사이트제공, 대형 슈퍼와 연계 농산물 판매 및 스티커 배부, 연수회 개최
	운영방식	소규모 민박을 중심으로 숙박형과 식사형이 발달(농가의 일손을 줄이기 위해 잠자리와 아침식사만을 제공하는 B&B형 민박이 주류)
	프로그램	새로운 시설의 신축 없이 있는 그대로의 시골생활 문화, 역사적 유산, 풍경 마을 주민들의 환대 등을 상품화 1991년 부터 농촌경관을 복원 보전하여 휴양시설로 이용하는 농가와 농촌경관관리인 제도를 시행 보조금 지급

나간다. 대상 업소에는 현물 지원, 충남넷을 통한 소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3) 쌀 경작과정의 관광자원화

① 소비자의 생산 참여

먹거리의 경우 상품에 대한 신뢰 보다 생산자 또는 생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작환경, 경작 방법의 공개로 관심있는 소비자의 참여가 곧 매니아로 이어지는 친환경, 생태체험 관광, 고품질 안전 농산물로 묶여지는 장소 마케팅의 실현이 필요하다.

VI. 결 론

2005년 11월, 쌀시장 개방 유예를 2차 연장하기로 한 WTO와의 협상이 국회 인준을 통과 하면서 쌀 시장의 완전 개방은 기정 사실화 되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농업도인 충청남도의 쌀 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중차대한 고비를 맞게 되었다. 쌀시장 경쟁력을 넓히고 소비촉진을 확대하는 방안의 수립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충남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동원되어 왔다. 브랜드 부문만 하더라도 공동브랜드의 개발로 마케팅을 강화하려 시도 하였다. 그러나 운영의 미숙과 품질 관리의 미흡으로 오히려 수 많은 쌀 브랜드가 난립하게 되었다.

현재 충남쌀의 품질 수준은 소비자 단체의 객관적인 평가라 할 수 있는 각종 쌀평가대회에서의 시상이 대변해 주고 있듯이 상위 수준임을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가격의 인정이나 충남쌀을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가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쌀에 대한 대외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시기이다.

충남쌀의 마케팅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작, 도정 등 생산과정이나 유통, 홍보 등 전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브랜드 측면의 실태의 파악과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소 쌀 브랜드의 통폐합이다. 380개가 넘게 난립한 브랜드로는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의 확보도 어려울 뿐 더러, 본래 지닌 가치조차 인정받기 어렵게 되는 요인이 된다. 브랜드의 통폐합은 도내의 산재된 RPC의 기능 통합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브랜드의 출시는 고품질을 수반하여야 한다. 충남쌀의 품질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격에 연연하지 말고 충남만의 고품질 규격의 설정이 필요하다. 더우기 생산이

력제의 도입이나 완전미의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범위를 제시한 규격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자세가 요구된다.

셋째, 쌀이라는 상품 특성에 적합한 홍보방안을 수립 실천 하여야 한다. 대중매체와 같은 기존 4대 매체의 활용보다는 실물을 보여 주어 소비자의 욕구(Need)를 자극하는 마케팅 방안이 필요하다. 적합한 홍보 방법으로는 충남쌀 홍보캠페인(전국투어 행사)과 SP매체 광고(아웃도어)의 활용이 대표될 수 있다.

넷째, 쌀맛 길들이기 전략의 시행으로 아동 시기부터 쌀과 친숙하도록 하여 입맛을 각인시키는 방안이다. 다양한 쌀음식 개발 등도 병행하여야 할 과제이다.

또한 쌀 정책이나 유통개척에 지자체와 농협 그리고 생산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효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학교 급식 식단에 지역쌀 또는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을 지자체가 나서서 권장 또는 조례화할 방안이 없다. 오히려 민간단체가 수행한다면,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쌀 품질 인증이나 이력 검증 기능 역시 민간단체의 역할이다.

쌀시장이 아무리 위협을 받고 위축되더라도 쌀이란 존재는 지속되어 이어져야 할 안보 차원의 기반이자 쉽사리 도태시킬 수 없는 우리의 유구한 문화이다.

이러한 원초적 중요성이 오히려 관심을 집중하

고 유지 시켜야 하는 대상임에도 그간 소홀히 다루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과 전환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쌀을 포함한 농산물은 상품진화측면에서 바라볼때 가장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산만 하면 판로가 보장되던 과거를 털고 경영과 전략의 도입 등 새로운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는 전환만이 충남쌀이 확고히 자리잡게 할 수 있는 기반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순철·권오박, "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구매 행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0권 제1호, 2003.

권기대·허무열, "친환경 농산물브랜드선택이 고객가치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0권 제4호, 2003.

김철호·권우영, "지역브랜드 쌀에 대한 소비자반응분석과 판매전략-대전지역에 있어서 '청풍명월' 쌀에 대한 사례연구-", 식품유통연구 제17권 제3호, 2000.

박평식, "쌀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마케팅전략",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0권 제4호, 2005.

이원우·장구현·류병서, "경기미의 브랜드 특성 및 상품 차별화 조사연구", 식품유통연구 제17권 제3호, 2001.

이원진, "농산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쌀 브랜드를 중심으로-", Journal of Package Design Research Vol.15, 2004.

최광훈, "국내 공동브랜드 쌀 포장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 Journal of Package Design Research Vol.15, 2004.

“충남지역 핵심전략산업의 인력수급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백남훈) 와 충남자동차 인력양성 사업단(단장 이금배)은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자동차산업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지역 핵심전략산업의 인력수급현황과 과제'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충남지역 전략산업의 육성과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이룩해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함석동 국가균형발전위 지역혁신국 과장의 "국가 균형발전에 따른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강연을 가진데 이어 ▲ "충남지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의 인력수급현황과 과제" (이금배 충남자동차 인력양성사업단장) ▲ "충남지역 전자, 정보기기산업의 인력수급현황과 과제" (설용태 디스플레이 중견 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 ▲ "충남지역 첨단 문화산업의 인력수급현황과 과제" (송복희 캐릭터 제조 산업 육성 및 지역인력양성사업단장) ▲ "충남지역 농,

축산 바이오산업의 인력수급현황과 과제"(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금배단장(충남자동차 인력양성사업단)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자동차, 부품산업분야 인력양성의 개선방향으로 ▲ 특성화 교육실시 ▲ 미래형 기술인력 양성 ▲ 산학연관 교류 활성화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을 들었다.

또 설용태단장(디스플레이 중견 전문인력양성사업단) 충남지역 전자, 정보기기산업의 인력수급현황 개선방향으로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활성화 ▲ 교육기관의 교육시스템의 변화 ▲ 산업체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력양성 참여 등을 들었다.

송복희단장(캐릭터 제조 산업 육성 및 지역인력양성사업단)은 캐릭터 제조산업 활성화방안으로 ▲ 캐릭터 제조산업 단지 조성 ▲ 캐릭터 제조 신기술 및 신소재 지원 ▲ 캐릭터 상품 공동 브랜드 개발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권희태과장(충남도청 혁신부권담당관), 황장순과장(충남도청 과학산업과), 장진식 본부장(자동차부품연구원), 이석희박사(대구경북RHRD지원센터장), 한무호박사(충남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등이 나서 주제발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충남인적지원센터 백남훈센터장은 "충남지역 핵심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력수급개발 전략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며, "오늘 세미나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들을 모아 충남도의 전략산업 인력수급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의미를 두었다.

기조 연설

CHUNGNAM FORUM

국가 균형발전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함석동 | 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 과장

왜 지방인가

위기이기 때문이다.

첫째 전문적 기술이다. 전문적 기술은 경험, 교육, 훈련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서 어떤 정보화 사회,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는 앨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와 같은 세계적 석학들은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를 그 특징으로 들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논리가 성립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 들어 지역혁신전략이 가장 중요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등장하였다. 이제 지방은 단순히 중심에서 벗어난 일부가 아니라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체로써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의 지방대학에 대한 문제제기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지방대학을 살리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발전, 지역혁신의 원동력으로서의 대학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의

우리나라 RHRD 잘 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지역 단위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는 국가 단위보다 동질성과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 단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지역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사실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지역발전전략은 세계은행이나 OECD, UNESCO 등 국제기구에서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영국이나 아일랜드, 핀란드 등 선진국들이 1990년대에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현실은 대단히 미흡한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에 따라서는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수도권과 지방간 경제력 격차의 심화 지역내 경제적 수준이 당해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수도권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의 46.3%, 중앙정부 부처는 100%, 30대 대기업 본사의 88.5%, 10대 명문대학의 80%, 제조업체의 57%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등 총량 경제력의 52.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 집중도를 보면 지역총생산의 경우 46.3:53.7, 은행예금 및 대출은 70.4:29.6,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은 70.9:29.1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은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제개발이후 지속되어 왔던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 인적자

원개발이 활성화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우수 인적자원이 유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수도권 집중 경제력 격차와 함께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지역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가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를 가져옴에 따라 직종 구조 또한 매우 다른 상황을 보이게 된다.

실제 직종별 취업자 구성을 보면,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에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이 집중되어, 서울의 경우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의 비중이 약 30%에 이른다.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다. 도 단위로 갈수록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의 비중은 줄고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지방의 우수 인적자원이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근로조건이 양호하며 미래 전망이 밝은 직종이 이렇게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 바로 그 지역 소재의 대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 학생들의 지방대학 진학 기피로 인해 전체 4년제 대학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이 제약을 받고 있다.

2003년 기준 수능 성적 상위 4% 이내 학생의 서울소재 대학 진학률이 68.8%에 달하는 상황임을 볼 때 우수한 인재가 지방대학 진학을 기피하고 있음은 분명히 확인된다. 또한,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004년 기준 수도권 4년제 대학의 미충원률은 0.4%인데 반해 지방대학은 9.9%에 육박하고 있음을 볼 때 이렇게 지방대학 기피 양상이 계속될 경우 일부 지방대학은 생존조차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구심점 미흡 및 파트너십 부재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은 정부의 각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기획·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간의 사전 협의·협력이 부재하여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복투자라든가 일관성 부재, 통합성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 결과(KEDI, 2001), 타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험에 있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물론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담당자들의 압도적 다수(89.9%)가 타 기관과의 연계 필요

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관련 주체들 간의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처의 파트너십 미흡을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현재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논의할 장관급 협의체인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신설되어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업무들을 조정하고는 있으나, 부처간 칸막이식 정책수립 관행과 관련부처의 안건 상정 및 회의 참여에 소극적인 점 등으로 중앙단위에서의 인적자원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WTO 체제하에서 특정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 지급이 곤란해짐에 따라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부부처(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가 기업체나 특정산업에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산업경쟁력의 원천인 기술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분야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만의 정책대상이 아니라 많은 정부부처의 정책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재정지원을 위한 부처간의 협의나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방조직간의 관계가 기획과 실행기능으로 나뉘어져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이 하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주요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

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집행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은 정책 대상이거나 정책집행자로서만 기능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 결과(KEDI, 200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압도적인 다수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지역 중심성이 바람직하다(70.0%)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산업과 인적자원간의 연계 부족 지역경제의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필요에 걸맞게 인적자원이 양성되고 공급되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지역산업의 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경우처럼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 특정산업의 인력이 부족할 때, 다른 지역의 인력이 이 지역으로 이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역의 인력공급 시스템이 지역 산업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체들의 파트너십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역내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관련된 정보의 생성 및 제공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 산업과 관련된 인력예측모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관련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OECD의 경우, 평생 학습(Lifelong Education)을 지역혁신 및 지역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할 정도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특히 초·중등교육의 질은 바로 해당지역의 잠재적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정주 기피현상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교육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초·중등 교육 내실화, 지방대학의 혁신, 평생학습체계 구현 등 종합적인 접근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단위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둘째, 지역 초·중등 교육을 내실화하여 우수한 자녀교육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내 평생학습을 활성화하여 '지역학습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로는 지역별 산업구조, 노동시장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혁신역량 강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사람과 돈과 권한들을 어떻게 지방으로 잘 분산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지방이 잘살고 활력있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분권을 실시하고 아울러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한 지방화 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분산된 혁신자원을 네트워크화하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발전, 산업발전, 문화발전의 중심축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지역혁신체계란 대학, 기업, 지자체, NGO, 지방언론 및 연구소 등 지역내 혁신주체들간의 활발한 상호협력과 공동학습을 통하여 지역의 연구개발, 생산과정, 행정제도 개혁, 문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시도를 말한다. 이러한 긴밀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지방대학의 육성 지역혁신의 활성화 지역산업의 발전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완화 인재의 지방 정착 지방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은 이러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지역혁신역량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과 취약한 지역혁신역량 속에서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R&D 및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육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이제 대학은 지역혁신의 중심에 설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과 연구된 기술로 대규모 굴뚝산업의 집적이 없이도 지역의 일

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근로자를 배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신기술형 지식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대학이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지방대학은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에 부응하기 위한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지역인적자원의 고용축진 및 정착지원 청년 실업률이 악화되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어려움, 대기업 선호경향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 기회는 더욱 제한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경력직 위주의 채용구조, 중소기업의 취약한 근무환경 등 경제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지만,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의 인력수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다양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학사운영체제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 출신자의 취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수준에서의 고용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그간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추진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은 참여정부가 최고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혁신 사업 중 최초로 실행하는 것으로 수도권-지방간 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비전 아래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체, 연구소 등이 연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혁신 클러스터 구축, 지역발전에 필요한 현장 적응력 있는 우수 인력 양성 및 지방대학 특성화를 통한 우수 학생 유치와 졸업생의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전국 지방대학의 112개의 우수 사업단(대형 25개, 중형25개, 소형 62개)을 선정하여 동 년도에 2,200억원을 지원하였고 동

사업단은 연차평가 후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5년간 계속지원을 받으며, 향후 선정될 신규 사업단을 포함, 2005년도 2400억원, 2006년 2700억원, 2007년 3000억원, 2008년 3,400억원씩 총 1조 3,7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추진 체계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기준으로 권역을 구분하고 각 시·도별로 구성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검토 및 추천을 거쳐 추천 사업단을 대상으로 중앙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누리사업은 신청 사업 분야의 제한 없이 전문대학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에서 지역발전 전략을 토대로 지방 대학별 특성화 분야에서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교육의 질 향상, 취업을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우수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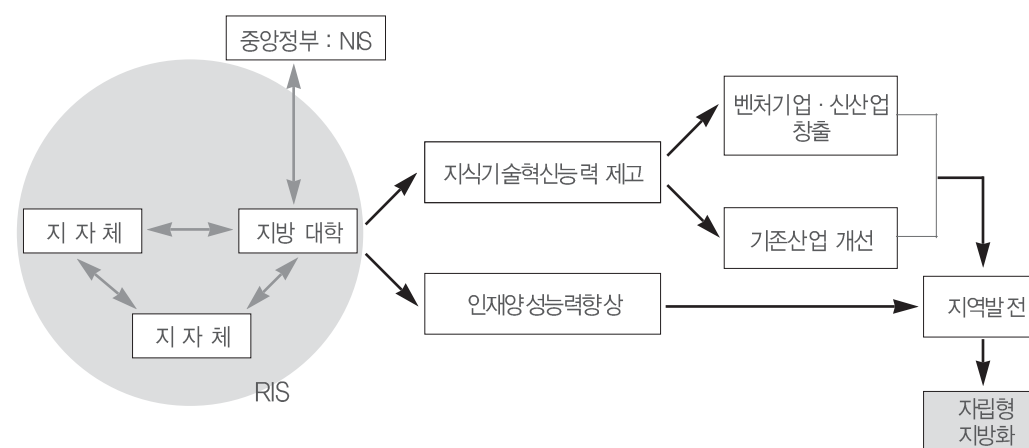


그림 1. 지역혁신체계에서 지방대학의 역할

출처 :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200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즉, 각 사업단은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개선·운영 계획, 산학협력 프로그램,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성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업단 참여 학부(또는 학과, 전공)는 5년간의 집중투자와 사회수요를 반영한 교육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졸업생의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즉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공급을 이루어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2004년도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총 454개 사업단 중 전략산업과 관련된 신청 사업단은 165개이며 이중 50개 사업단이 선정되었다. 지역 전략산업분야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형 사업은 기계 자동차 분야 6개, IT분야 7개, BT분야

4개, NT분야 4개, CT분야 3개, 물류 분야 1개로 25개 사업단이 선정되었으며 중형사업에서는 메카트로닉스 분야 등 10개 사업단, 소형사업에서 섬유, 홈네트워크 등 15개 사업단이 지역 전략산업 분야를 신청·선정되었다. 2004년에 선정된 사업단은 정부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을 위해 이미 지정한 6개 시범단지 중 수도권을 제외한 5개 단지의 전략산업과도 일치하고 있어, 해당 산업 필요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전략산업 외에 관광, 디자인, 의료, 환경, 복지, 해양, 경영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의 특성에 바탕을 둔 교육프로그램들이 선정되었다.

누리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지역전략산업의 발전단계별로 누리사업의 지원방안을 차별화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 1. 지역전략산업의 발전단계별 지원방안 예시

구 분	해당지역 산업(예시)	중점 지원분야
성숙단계	자동차(울산), 항만물류(부산) 지식기반기계(경남), 섬유(대구)	· 기존 산업분야별 핵심필요인력 양성 및 교육
초기진입단계	의료기기(강원), 광(光)산업(광주), 전자정보기기(충남), 정보통신(대전)	· 신규 급성장 예상산업의 소요 핵심인력의 연차별 양성
태동단계	영상·IT(부산), 대체에너지(전북) 차세대전지(충북), 생물(전남) 등	· 창업보육 및 교육 · 신산업 창출 인력 양성

위의 표에서 보듯이 자동차(울산), 지식기반기계(경남), 항만물류(부산) 등과 같이 지역산업이 성숙

단계에 이른 곳의 경우 누리사업은 기존 산업 분야 및 핵심필요인력양성 및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좋

다. 의료기기(강원), 전자정보기기(충남), 광산업(광주) 등과 같이 지역산업이 초기진입단계에 있는 지역은 신규 급성장 예상 산업의 소요 핵심 인력을 연차별로 양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영상·IT(부산), 대체에너지(전북) 등과 같이 산업이 태동단계에 머무른 지역은 창업 보육 및 교육과 신산업 창출인력의 양성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기존 산업이

전무하거나 미활성화된 지역의 경우 지역의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 및 창업 보육 강화, 기술경영 및 기업가 정신 등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누리사업과 지역전략산업 진흥정책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토록 하고 나아가 혁신도시 건설 및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하여 신산업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

표 2. 지역전략산업 분야별 신청 및 선정사업단 수

구 분	전략산업 분야 및 선정사업단 수				계
부산광역시	항만물류 (3 → 1)	기계부품소재 (7 → 0)	관광컨벤션 (6 → 0)	영상·IT (7 → 3)	23 → 4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메카트로닉스 (2 → 1)	전자정보기기 (6 → 4)	섬유 (3 → 1)	'전자정보기기 및' 생물 분야는 대구/경북 중복	23 → 11
	신소재 (1 → 1)	문화관광 (4 → 2)	생물·한방 (7 → 2)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산업 (1 → 1)	디지털전자정보 (2 → 2)	첨단부품/소재 (1 → 1)	문화 (5 → 2)	21 → 8
	생물 (5 → 0)	신소재 (1 → 0)	조선 (1 → 1)	관광 (5 → 1)	
대전광역시	정보통신 (4 → 1)	바이오 (4 → 0)	차세대전지 (0 → 0)	메카트로닉스 (5 → 0)	13 → 1
울산광역시	자동차 (1 → 1)	조선해양 (1 → 1)	정밀화학 (1 → 1)	환경 (1 → 0)	4 → 3
충청북도	바이오 (4 → 2)	전자정보 (8 → 2)	반도체 (0 → 0)	2차전지 (0 → 0)	12 → 4
충청남도	전자·정보기기 (9 → 2)	자동차·자동차부품 (2 → 2)	첨단문화 (9 → 1)	관광 (4 → 0)	24 → 5
강원도	바이오 (3 → 2)	의료기기 (2 → 1)	관광문화 (8 → 2)	신소재 (1 → 1)	14 → 6
전라북도	자동차부품/기계 (4 → 1)	방사선기반생명 (3 → 0)	대체에너지 (1 → 0)	전통문화관광 (8 → 2)	16 → 3
경상남도	기계 (2 → 1)	로봇 (1 → 1)	홈네트워크 (4 → 1)	생명공학 (5 → 0)	12 → 3
제주도	관광 (1 → 1)	건강뷰티·생물 (0 → 0)	친환경농업생명 (2 → 1)	디지털컨텐츠 (0 → 0)	3 → 2
합 계					165 → 50

이 사업에서 지방대학은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산업체, 연구소 등 각 부문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학은 이 사업에 참여 하기 위하여 2005학년도 입학정원을 총 7,271명(대학 4,073명, 전문대학 3,198명)감축하였으며, 교육여건 개선의무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즉, 사업단으로 선정된 대학은 대학전체의 신입생을 매년 60% 이상, 교원도 2008년까지 6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과·학부는 신입생을 매년 90% 이상 채워야 하고, 사업기간 동안 교원을 80% 이상 확보, 졸업생 취업률도 70% 까지 개선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1차년도 사업성과를 보면 특성화 분야 교원확보율이 12.4% 향상되었고 특성화 분야 학생충원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전년에 비해 6.3%가 증가하는 등(60.2%

고되었다. 또한 현장 적합성 높은 전공교육이 강화되었으며 산학연간, 대학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누리사업 참여 113개 대학 중 77개 대학에서 10,341명의 학생정원이 감축되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도 기여하였다.

표 3. 2004년 누리사업 선정 결과

구 분		계	대 형	중 형	소 형
사업단 수		112	25	25	62
연간지원액		2,135억원	1,032억원	604억원	499억원
사업단별 평균 지원액 (백만원)		1,906	4,128	2,414	805
참여 기관	대학 (협력포함)	113교 (충북 제외)	79교	55교	66교
	기타협력 기관	1,000개 (일부 중복)	388개	290개	322개

2004년 1차년도 선정사업단 점검(1차 04. 8., 2차 04. 12.)을 통하여 1차 점검시 허위기재 1개 사업단 선정 취소 및 66개 사업단을 경고조치 하였으며, 2차 점검시 사업비 부적정 집행 6개 사업단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2005년에는 예산 증액분 200억원에 대하여 대형 3, 중형 2, 소형 2 등 총 7개 사업단 이 추가 선정되었으며 사업 참여 조건을 교원 확보율 56%(04년 50%), 신입생 충원율 80%(04년 60%)로 강화하였다. 2005년 7월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총 112개 사업단 중 7개 사업단의 선정을 취소하였으며 61개

사업단의 사업비를 삭감하였다. 이러한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발생된 잔여사업비(선정취소·사업비 삭감·협력대학 탈퇴 등으로 발생된 279억원)로 예비후보 사업단의 순위에 따라 11개(대형 4, 중형 4, 소형 3)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였다.

이로써, 누리사업은 2004년에 선정된 105개 사업단(연차평가 결과 7개 탈락 사업단 제외)과 금년 6월에 선정된 7개 신규 사업단을 포함하여 2005년도에 123개 사업단에 총 2,4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누리사업 선정사업단의 사업계획대로 누리사업이 추진되면 누리사업 참여대학 및 사업단의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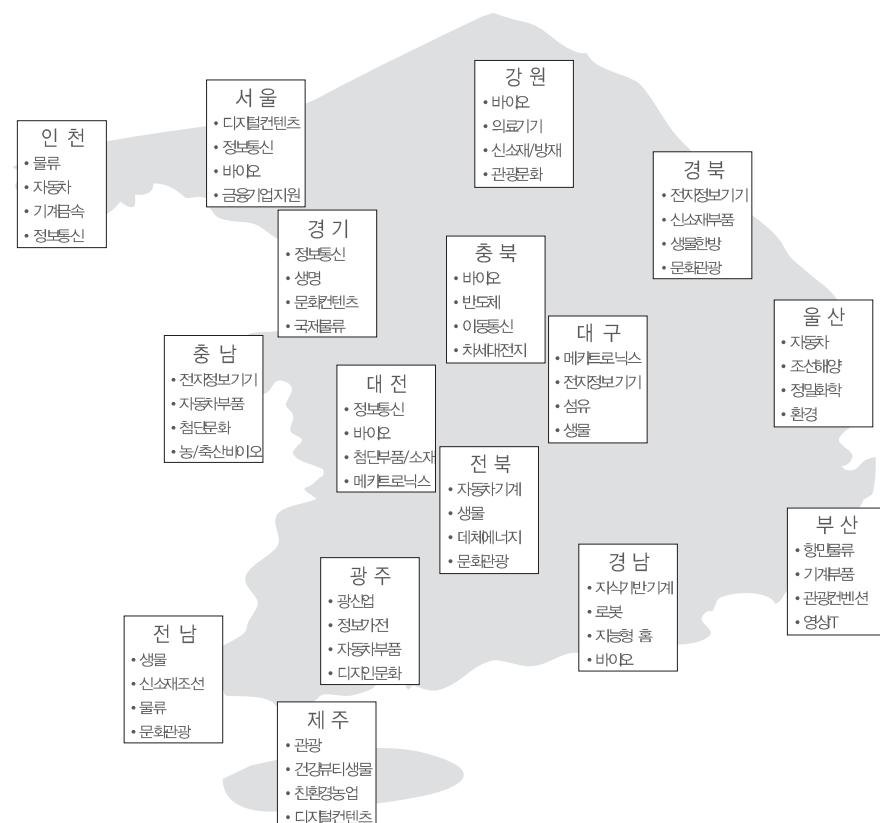


그림 2. 지역 전략산업의 현황

충원률이 높아지고 특히 지역 내 우수인력의 유입이 확대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또한 참여대학과 지역산업체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참여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및 지역산업체 유입비율이 높아지고 지역산업 발전기반이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단 내에서는 대학내 학과간 연계 협력, 대학간 교류 협력이 활발히 나타날 것이며, 참여 대학들은 특성화 분야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시키게 되어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또한 누리사업 참여대학과 경쟁하기 위하여 지역내 타 대학들도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누리사업 참여대학과 사업단의 성과가 지방대학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사회 측면에서는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이 촉진되고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 대학이 지역산업의 R&D 기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높아지면 문화 및 복지서비스도 확충되어 지역경제사회에 대한 만족도 내지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적 측면에서는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으로

지역의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대학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의 정착과 상생발전으로 지방의 자생력이 확보되고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이 촉진되며, 지역인적자원개발(RHRD)과 지역혁신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강화 및 경험 축적, 혁신역량 강화 등을 기반으로 지역여건 및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연차 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1차년도 사업기간의 부족(실제 사업기간 약 8개월)과 사업단장 등의 누리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으로 교육과정 개편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보다는 손쉬운 장학금 지급, 해외 어학 연수 및 인턴십 등에 상당부분의 예산을 투자한 사례가 많았으며, 사업예산의 과다, 사업비의 방만한 집행 및 교수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실질적인 산학협력이 미흡한 누리사업단의 경우 산학협력 전문가 등의 상시 컨설팅 제도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누리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단장, 사업팀장 등에 활동비 지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누리사업과 지역전략산업(산자부 4+9 지역전략산업 등)의 연계 강화를 위한 평가시 우대 점수 부여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누리 사업단이 제기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누리사업 재정집행 관리의 문제는 사업의 탄력적 운용 저해 및 사업단이 사업의 성과도출보다는 지침준수에만 치우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누리사업의 공공성 확보 측면과 사업단 운용의 탄력성을 적절히 조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누리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첫째, 누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정성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단별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서상의 자체 성과지표 등 사업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원충원률이라면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충원여부, 취업률은 취업의 질(상용직 여부, 지역내 취업 여부)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산학협력과 교과과정 개편은 그 중요성을 감안, 해당 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면밀히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산학협력실적은 기업임직원의 교수 혹은 겸임교수 채용, 교수의 기업 파견,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실적, 기업재직 근로자의 재교육실적, 창업이나 사업지원 실적 등의 평가를 포함하고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기업의 참여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매해 사업년도 종료 전에 지역산업체 및 졸업생에 대한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당해 연도 결과 및 그에 대한 대응, 연도별 만족도 증감 추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둘째, 누리사업 선정사업단이 계획대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선정사업단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연차평가시 장기적 차원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선정 후 현장 점검을 통하여 1개 사업단을 탈락 처리하였고 66개 사업단에 대한 "경고" 조치로 정부의 철저한 사업관리 의지를 인식시킨 바 있다. 일관되고 엄정한 정부의 사업 관리와 더불어 연차평가시 평가팀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대상 사업단에 대해 세부적이고 집중적인 평가 작업을 수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잘못에 대한 단기적 처방 차원의 제재 자체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사업단이 계획서에서 제시한 필수사업지표 및 기타 자체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 형식의 컨설팅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누리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분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 재정 투자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NURI 사업도 사업 중간 시점에 지방대학 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에 대한 사업투자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체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혁신 사업간 중복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공동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네째, 사업단별 누리사업의 추진상황 및 성과, 평가자료 등을 DB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의 투명성 제고, 평가결과의 검증과 평가지표의 개선 등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성과 확산측면에서 본다면 정례적인 누리사업 성과 발표회를 통하여 peer review가 가능하도록 하고 우수사례의 선정과 포상을 통하여 다른 사업단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방대학의 구조개혁 촉진 우리나라 대학은 백화점식 학과운영으로 산업화 시대의 인력양성에는 적합한 모형이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다양하고 특화된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은 수도권-지방간 격차심화로 지방출신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입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은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식과 인적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고등교육의 재구조화 및 질 제고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개혁을 통해 지방대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초기조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

화, 그에 따른 수도권-지방간의 격차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12월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 및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대학간 통폐합, 정원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대학구조개혁과 관련된 신규 수요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대학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대학구조개혁 추진본부'를 2005년 3월 17일 발족시켰으며, 대학 통합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권역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5년 800억원을 투자하여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학체제를 사회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대학 운영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성화를 위한 대학의 독자적인 발전전략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크게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사업』과 국·공·사립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결과 '06년도부터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 충주대학교와 청주과학대학 등 8개 국립대학이 4개로 통·폐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00억원 중 국립대학 통·폐합에 5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통·폐

합을 통한 캠퍼스별 특성화 및 자원 재배분에 보다 무게를 두었다. 고려대, 경희대 등 수도권 주요 8개 대학과 서울 소재 국립대학 및 지방대학 7개 등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위하여 15개 대학에 3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통폐합 과정에서 일부 학생 및 교수들의 반발 등 진통이 있었으나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고 권역별구조개혁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통폐합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예정대로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구축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인적자원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장관들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2001년 12월에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2002년 8월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인적자원개발의 법적,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중 '지역단위 인적자원 정책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제6차 인적자원개발회의(2002.5.29)에서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추진 및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역혁신체계

(RIS), 지역혁신협의회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RHRD)과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통해 정책 혼선의 최소화와 원원 전략을 구현할 필요가 높아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6차 인적자원개발회의 결과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시범지역' 추진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단'을 구성하고, 설명회, 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2년 10월 부산, 광주, 충북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 대학, 교육청,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시범지역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계획 수립, 지역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부터는 시범지역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로 확산하였다.

이를 통해 2004년에는 전국 시·도별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역혁신협의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다. 또한, 금번에 구성된 시·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활용하여 교육인적자원부 NURI사업 등 지역발전 사업을 상호 연계 및 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였으며, 향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 평생학습도시사업, 농어촌교육특별지원사업 등도 연계·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지역 초·중등교육 내실화 및 평생학습 활성화 초·중등교육의 질은 바로 해당지역의 잠재적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 기피현상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교육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의 우수한 자녀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여 도 농간 균형발전과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농어촌 교육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9년까지 농어촌 우수고교 88개교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005년에는 소규모 학교 운영개선, 우수고교 육성, 우수교원 확보,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 확보를 "농특위"와 연계하여 추진하여 「약칭」농어민 삶의질향상특별법」(2004.3.5)에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수립시 농어촌 우수고 육성 사업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집과 유치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안전한 도보 통학에 애로가 있는 농어촌 지역 공립 유치원에 통학차량을 지원하여 유치원과 방과 후 보육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기준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17.2%로 매우 저조하고, 이에 대한 국가차

원의 지원이 미약하여 평생학습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범국민차원의 평생학습운동을 전개해 왔다. 2003년 9월에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직업능력개발 사례의 전파를 위한 제2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에 11개였던 평생학습도시를 2004년에는 19개, 2005년에는 24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4년 제주에서 제3회 전국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평생학습 대상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취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인적자원의 지역정착 유인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등 교육기관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배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2002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대학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20%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의 산학협력에 의한 인력양성 시스템을 보편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으로 40

만명에 육박하는 청년실업자가 존재함에도, 중소기업은 14만명의 일손이 부족하여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들은 수도권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하는데 더 큰 애로를 느끼고 있다. 우선적으로 대학이 산학협력으로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 구축에 지원을 확대하였다. 산업체 수요에 부응한 '주문식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1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를 중소기업 채용수요에 근거하여 선발한 후 5개월간 기업 현장에 맞는 직무교육을 하여 중소기업 채용까지 알선 지원하는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으로, 2004년 벤처기업협회 등 42개 보조사업자들이 7,924명을 교육하여 이 중 2,771명이 취업하였다. 2005년부터는 시범적으로 '공고-중소기업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산학협력에 의한 인력양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학 재학생에게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직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중 1개월 이상 장기사업에 약 1만 3천 여명, 7일 이내 단기사업에 10만 여명이 참여하여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

이 개선되었다고 조사되어 사업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추진 누리사업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국책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가 부실한 사업단은 선정 취소 및 사업비 삭감, 사업내용 조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생한 잔여 예산은 지역추천을 받아 예비후보로 선정된 사업단 지원 및 우수사업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업관리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연내 관련 DB 및 On-line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선정사업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의 전 과정에서 각 사업단이 사업을 본래 취지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상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사업단에 대한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누리사업은 이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단지 및 시도별 지역전략산업분야와 연계되어 추진함으로써 해당 산업 필요인력을 공급하여 지역발

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대학이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산업체, 연구소 등 각 부문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사업단 참여 분야는 5년간의 집중투자과 사회수요를 반영한 교육으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졸업생의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지방대학의 구조개혁 촉진 지방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 대학의 특성화계획과 재정 지원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구조개혁 실적을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고, 실적이 미흡한 대학은 타 부처 사업에도 참여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누리사업의 경우 대학 통합, 과감한 정원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 대학에 대하여는 사업참여 및 추진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군살을 제거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전문서비스 분야인 경영, 금융, 물류 전문대학원 설립을 촉진하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통한 네트워킹 강화 등 대학 구조개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구축 전국적으로 확대운영되기 시작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시·도별로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여 지역단위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협력관' 등의 인사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회의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개정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밀착형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 지역의 실제 산업 및 인력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에 지역 차원의 기초 실태 조사와 지역 특화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는 이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역밀착형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모제 등을 통해 선정한 우수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그 사업비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로 이루어진 인력수요조사를 실업자 직업훈련과정 개설 시 반영하여 지역의 실제 인력수요가 있는 분야에 직업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훈련의 효과성과

훈련수료자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초·중등교육 내실화 및 평생학습 활성화 지역별 특성과 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중·고교 체제 및 운영모델을 다양화, 특성화함으로써 지역내 우수한 자녀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특히, 소규모학교 운영개선, 우수고교 육성, 우수교원 확보,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농어촌 등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축제' 등을 보다 확대하여 지역학습공동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내 교육기관을 활용한 평생학습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대학의 취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인적자원의 지역정착 유인 지역수준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지방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박사급 연구인력 등의 채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 46개 고용안정센터에 '청년취업지원실'을 설치하여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대학생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확대, 대학생 인턴십 지원 확대, 대학생 창업 동아리 발굴 지원 등 다양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턴십, 현장학기제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을 보다 유연화하고, 대학내 취업지원부서의 기능을 확대하며, 지역내 취업지원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수 인적자원의 지방 정착을 위한 각종 유인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소재 우수 학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장학제도'를 개선 확대해 나가고, 기숙사 확충, 대학촌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 현상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충남지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의 인력수급현황과 전망

이금배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인력양성사업단장

자동차 · 부품산업분야 인력양성의 개선방향

3차원설계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1. 충남 자동차·부품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 실시

1) 자동차·부품 3차원설계분야 전문인력 양성

■ 충남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부품산업 유망집적지에서 한 단계 높은 핵심집적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의 발전단계는 확립단계에서 성장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은 충남의 지역특화산업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판단됨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지역혁신 주도형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동차·부품산업의 R&D 기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고, 연구·개발분야 핵심 기술인력인 "자동차·부품

2) 자동차 생산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 자동차 부품의 모듈발주, 기술발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부품업체가 M&A를 통한 대형화가 급속히 진전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부품 모듈 생산 전문화 단지, 생산클러스터 조성 등 "자동차 생산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됨

3) 자동차 소재 및 전장분야 전문인력 양성

■ 자동차 부품·소재관련 기술은 극소, 극한, 초경량, 고기능, 고성능의 특성과 환경 친화성, 안전 및 편리성의 제고 방향으로 발전

■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각종 기계·자동차부품의 전자화 진전으로 "자동차 소재 및 전장분야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판단됨

2. 미래형 자동차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

1) 미래형 자동차 설계기술인력 양성

■ 세계 자동차산업은 과거 100년간의 가솔린엔진 탑재형 자동차시대에서 환경·에너지·IT 기술을 접목한 무공해·첨단자동차시대로 이동 중이고, 기술개발의 중심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전환

■ 최근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상용화되면서 차세대 기술 개발의 목표는 수소동력 연료전지(Hydrogen-powered Fuel Cell) 자동차로 발전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생산체제로 급격히 변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의 핵심 기술인력인 "미래형 자동차 설계기술인력"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2) 카일렉트로닉스분야 전문기술교육 강화

■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각종 자동차·부품의 전자화 진전으로 차량 안전에 필요한 각종 센서 및 전자제어 시스템, 엔진효율 향상과 관련된 부품 등의 개발

- 예방안전시스템 : 운전자 위험상태 정보, 주변차량 정보수집 및 정보, 야간운전시계 및 시인성 향상, 도로정보수집 및 정보 등

- 사고회피시스템 : 차량동역학 제어, 사각사고 회피, 도로정보에 의한 사고회피, 운전자 위험상태 회피

- 충돌안전시스템 : 충격흡수, 승객보호 보행자 피해 경감

- 자율주행(자동운전)시스템 : 자율주행(자동운전)

- 재해확대방지시스템 : 다중충돌 방지, 사고 발생 자동통보

■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 기술요소는 전자화, 멀티미디어화, 네트워크화로 변화되면서 지능형 차량 부품의 개발 가속화로 "카일렉트로닉스 분야 전문기술교육"의 강화가 필요함.

3. 산학연관교류 활성화

- 산·학·연·관이 참여하는『산업별 인적자원 개발협의회(Sector Council)』구성·운영
- 기업·대학간 협약을 통해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형 학과제와 주문식교육의 확산

1) 자동차분야 전공 산업체 현장실습 강화

- 자동차 분야와 관련된 산업체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2주~4주 동안 산업체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간접적인 직장체험을 통하여 직업의식의 고취와 전공분야 학습능력 향상

2) 자동차분야 전공 산업체 인턴십 실시

- 자동차 분야와 관련된 산업체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1개월~6개월)동안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도록 운영
- 연수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 학점인정(현재 82개 대학, 1~15학점, '04년

- 81회, 5,643명) 실시
- 연수관련 소요비용 일부 지원('05년 4억2천만원)
- 연수체험 사업(청소년 직장체험(노동부), 이공계 현장연수(산자부)

3) 산업체 기술인력 리콜교육

- 산업체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신기술 재교육 및 리콜교육"등을 실시하고,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기자재의 공동활용

4) 자동차분야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연구노력하고,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함

4.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 대학은 노동시장의 주된 공급자이면서 그동안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
- 재학생의 취업증진을 위한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 강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대책 마련, 추진

1) 청년층 취업 촉진을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 유도

- 대학별·학과별로 취업률을 공표(현재 대학별 시범 공표)하여 대학이 취업에 보다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

-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한 대학에 대한 보상시스템 마련

- 취업률, 취업실태 및 취업지원노력을 대학 평가에 반영

2) 대학 교육과정 모델 발굴·보급

- 졸업생 취업률이 높은 대학 모델 및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 교육과정 개발·보급
 - 향후 5년간('05~'09) 대학 이공계 교육과정 개선 지원(매년 50억원)

- 교육과정의 산업수요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기업의 요구 등을 파악, 관련 정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유도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회, 공학교육인증

원, 대학평가전문기관 등에서 기업의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실시('05년)

충남지역 전자·정보기기산업의 인력수급현황과 전망

설용태 | 디스플레이 증권 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

문제점

요구된다.

1. 우리나라의 이공계 인력양성의 문제점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한국 약 45%, 일본 약 24%, 미국 11%). 따라서 국내 경제발전은 곧 수출경기와 직결되며, 수출의 대부분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전자정보기기와 자동차 및 선박 등 대부분이 이공계 중심의 산업인력에 의한 공산품 중심이다. 이런 점에서 이공계인력의 양성은 국가경제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5-6년 전부터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매우 심각하여 우수학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 선호는 물론 대입수험생의 이과 지원비율이 80년대 초의 60%수준에서 현재는 30% 미만으로 양적인 면에서의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치우개선과 병역특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으로 이공계 선호기반 조성이

(대학의 양적팽창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 우려)
최근 10여년 우리나라의 대학은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여 전국에 400여개에 달하고 있다(전문대 200여개, 4년제 200여개 등). 이에 따라 수년 후면 고교졸업자 수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아지는 현상이 초래되어 현재도 학생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지방대학 들은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다. 전체대학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대학교육의 부실을 가져와 국내 인력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최근 국립대학도 구조조정과 함께 법인화 등을 시도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질 높은 대학교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대학의 자구노력과 외부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산업체의 인력양성에 관한 인식 부족)

고교나 대학 등에서 양성된 인력의 최종 수요자

는 기업으로 양성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배출된 인력의 질이 떨어진다는 불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어떻게 하면 고교나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함께 기여할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기업은 신입사원에 막대한 재교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국제경쟁력 확보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교와 대학 등에 대한 산업체의 다양한 지원으로 정규 교육과정부터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2. 충남지역 전자정보기기관련 인력양성의 문제점

- 지역소재 고교생 중 상위권 학생은 수도권대학으로 진학하여 우수한 지역학생 확보에 대학 및 기업 들이 어려움이 많다. 이는 아직 지방대학에 대한 편견과 지역소재 대기업 등도 선진국들과 같이 특별히 지역출신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신입사원의 일정규모를 업체가 소재한 지역 출신인력을 채용하는 지역할당제와 같은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지역대학 재학생중 상당수가 수도권 학생들로 졸업 후 수도권 소재 기업의 취직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천안/아산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약 6-70%의 학생이 수도권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어 많은 우수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내 기업에 취업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 고속철도와 전철 개통 및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충남이전 등으로 앞으로는 상당히 개선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 대졸인력과 산업체 인력 재교육 등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이나 기능 인력과 석박사급의 핵심인력 등의 확보에 대한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능인력의 경우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등에서도 다수의 현장인력으로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도 필요하다.

개선방안

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활성화

최근 정부에서는 6개 관련부서(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재단,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공동으로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Sect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uncil)을 발족하였다(2005.3.9). 당 협의체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10개 산업(기계, 전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 섬유, 자동차, 조선, 철강, e-Biz)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 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산업인력양성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SSC, 캐나다의 SC 및 호주의 ITAB 등을 참조한 것으로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의 효율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이 협의체가 아직 시작단계이고 정부주도로 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산업체 및 대학의 협조 등이 수반되면 우리나라 인력수급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교육기관의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필요

앞서 언급한대로 최근 대학의 양적팽창에 따라 대졸인력의 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행히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NURI 사업과 산업체 인력재교육 등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다 혁신적인 대학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과 실습교육의 확대 및 현

장실습제도 및 영어 능력 향상 등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될 것이다. 앞절의 설문조사자료에서 언급한 산업체에서의 요구사항인 인성교육 등 전공이외의 질 높은 교육체계 개편도 요구된다. 또한 고교생들의 이공계 선호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는 이공계 인력의 우대 등 사회적인 여건성숙이 없이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체가 소재한 지역출신 인력을 선호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고교졸업생의 수도권 진출을 지역대학으로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NURI 사업의 일환으로 호서대 디스플레이공학부에서 실시중인 지역소재 고교생 특별전형 등도 좋은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산업체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력양성 참여

'05년 9월에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Advantage Korea: Global Competitiveness 2015 산업혁신포럼에서 향후 10년 후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5,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인적자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를 위한 3가지 추진과제로 산업수요 지향적 인적자원 공급체계 구축, 고령, 여

성인력 활용 여건개선 및 인적자원 개발 투자 확대 및 평생 학습체계 구축 등을 들고 있다. 현재까지 인력양성은 교육부와 대학 등에서만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즉 주체는 양 기관이 되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자체의 협력이 수반된다. 이는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의 최종 수혜자는 이들을 고용하는 산업체이기 때문이고 그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행정을 끌어가는 1차 기관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라는 관점에서다.

지금까지 대학과 산업체간의 협력관계는 선진국에 비해서 미미한 실정이고 지자체와 대학간의 협조도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체와 지자체가 기능 인력과 대졸인력들에 대해서 양성과정에서부터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체가 필요한 수준 높은 인력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NURI 사업은 처음으로 지자체가 인력양성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산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산업체는 현장실습/인턴제, 맞춤형 교과과정 운영 및 지역 인재 채용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충남지역 미래인재 육성방안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는 12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 6층 국제회의장에서 초·중등학교 교사, 자치단체 및 교육청 관계자, 직업교육 전문가,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지역 미래인재 육성방안"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미래인재육성은 충청남도 도정 중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심포지엄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수립하고 충남 지역에 적합한 인재육성 기본정책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건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장 정경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모두 세 가지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경주 교수는 "충남 청년지도자 육성방안과 과제"에서 농촌 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살피고 지역 사회 청소년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지역 연계방안을 강조하였다.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김언주 교수는 "충남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 발제에서 국가 수준의 영재교육과 충남의 영재교육시행계획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10대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학술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진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김안국 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현식 교수(호서대학교), 하주현 교수(건양대학교)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심포지엄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하였으며 건양대학교 기획진로처장 황복주 교수와 아동보육학과 황성원 교수가 주관하였다. 관계자들은 "충남지역의 미래인재양성방안에 대한 이번 심포지엄이 지역대학과 지역 연구기관의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충남 청년지도자 육성방안과 과제

권경주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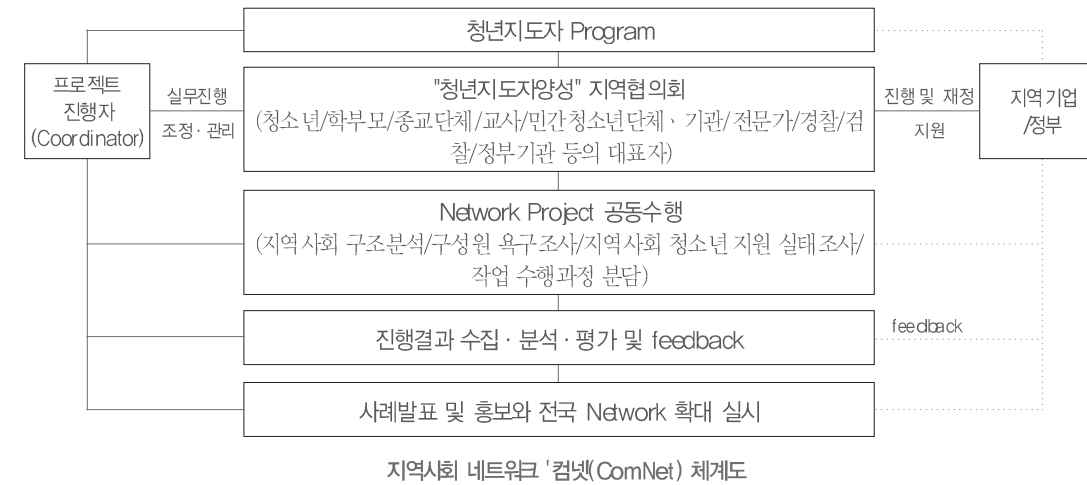
오늘날의 우리 지역사회는 급격한 산업발달과 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과정을 겪게 됨으로써 사회해체적 성격을 강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도시문제는 지역사회해체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문제로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내의 청소년문제를 크게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육성의 과제는 기성세대와 전체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기능회복을 통한 공동체 확립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 중심에 지금의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대비하고 능력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여러 나라에서도 보편화 되어 지역공동체 교육운동을 통하여 견실한 민주시민사회를 구축한 예를 보면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 캐나다의 농촌라디오 토론회운동, 일본의 공민관을 통한 교육운동, 서독의 국민고등학교, 미국의 지역사회화교육운동 등은 잘 알려진 지역공동체운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사회는 단순한 주거 및 생활공간으로만 인식되어 왔을 뿐 지역사회조직, 시설의 활성화를 통

한 청소년의 복지증진이라는 적극적인 기능은 간과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청소년기관, 단체들은 해당지역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에 기초한 지역중심의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결여로 많은 인력 및 자원의 낭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자원과 서비스 운용의 구심점을 확립함으로써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청소년기관과 단체들을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조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년지도자 육성체계의 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 산재해 있는 제반 사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화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사회의 확립은 지역사회가 사회구성원의 복리를 위해서 투자하고 역할을 확대해 나갈 때 가능하다. 지역주민은 자기 지역사회의 청소년육성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문제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어 갈 청년지도자의 지원확보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면서 자라기 쉬운 젊은이들이 소외를 극복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강제적으로 참여를 강요하는 활동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충남의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언을 끝으로 논의를 마친다.

충청남도과 시 군은 청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초기 형성단계에 바람직한 인적·물적 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홍보와 각 지역사회 자원들의 참여 및 연계, 사전 준비모임의 주선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조사나 여러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 등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초기단계에서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

2. 네트워크 전담 운영자(coordinator)의 투입 및 재정지원

충청남도는 네트워크 초기 형성단계 과정과 프로그램 관련 지역사회 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그리고 네트워크의 핵심 본부인 네트워크협의회 각 구성원의 연계·조정 및 협력체제 구축 등 네트워크 운영의 모든 과정을 전문가로서 총괄책임을 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전담운영자(coordinator)를 반드시 네트워크 내에 두어야 한다.

만약, 상근 인력으로 투입하기에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면 지역사회 내 전문적인 유관기관에게 위탁을 주어 그 기관의 기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과 재교육 및 연수를 통해 코디네이터 역할을 전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자치단체 장의 지속적 참여 제도화

지방자치 단체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자치단체장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초기 형성단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네트워크협의회의 장의 역할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매번 참석하기 어려울 시를 대비하여 관련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

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스스로와 지역구성원들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의식을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

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공동 협력체제 구축

충청남도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폭력 대책 관련 민간부문의 각 자원들 즉, 변호사, 의사, 교사, 종교인, 기업인, 학부모, 청소년지도사, 기타 청소년지도 관련 지역사회 유휴 자원인력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네트워크 형성단계에 지역구성원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및 코디네이터 등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공동 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열거한 민간부문들 가운데 중 고교와 지역의 대학 등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하려는 자세와 협력의지를 가지고 시설과 전문가들을 지원하며 네트워크 형성과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 핵심본부인 네트워크협의회의 신중한 구성 및 역할과 책임 명문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질적 핵심본부(headquarter)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협의회'의 구성은 향후 네트워크의 운영을 직접 주도하고 모든 사업을 결정하므로 신중히 구성원들을 선별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자치적 운영을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뚜렷한 역할과 책임을 조례나 협의회 규정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네트워크협의회 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중지를 모으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자치단체 장은 네트워크 형성단계를 제외하고는 주로 협의회 밖에서 운영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협의회는 자치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는 코디네이터가 조정하고 화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네트워크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및 feedback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운영결과는 분석 및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며 그 결과가 환류(feedback)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과 시 군은 이에 필요한 소요 경비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네트워크의 최종작업인 사례발표와 전국적 홍보 그리고 과정을 수료한 청년지도자들의 지역개발참여 네트워크 확산의 사전 작업 의미가 있으므로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전문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때에 모든 가능한 지원을 통해 도와야 그동안의 노력이 효율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7. 네트워크 운영결과 사례발표와 홍보 및 모델의 전국 확산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폭력문제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네트워크 운영결과에 대한 사례발표와 모델사례 발굴 및 홍보와 전국 network 확대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정책적인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와 같은 중앙차원의 관련 사업이나 타 자치단체와의 프로그램 협력 사례 발표회를 갖고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충청남도에 적합한 지역지도자 개발모델을 전국에 보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8. 법제도 제정 및 개선을 통한 네트워크 지원

충청남도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재정적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또는 위탁운영자나 기관이 청소년폭력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역사회 조사나 청소년폭력 대책 관련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등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제반 여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제정 및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지도자 양성방안을 위한 전제 조건

박현식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우리사회의 문제는 급속도로 진행되어온 현대화,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비단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사회의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권경주 교수님의 논문에서 지역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획일화된 문화와 입시위주의 청소년문제에서 지방(농촌지역)청소년 상황의 인식 속에 대안 제시에 큰 의미를 둔다.

청소년의 문제는 정보화에 따른 비인간화와 가치 혼란으로 인해 정체성의 문제는 미래사회의 전망을 불투명, 불안하게 예견케 한다.

우리나라의 획일화된 문화 환경속에 지역적 차이로 인해 청소년 스스로 사회와 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이질감, 소외를 갖게 해 주는 현상을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역적인 상황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부재와 입시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청소년 스스로의 의사결정 구조, 의사전달로 인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질까? 라는 문제를 제기해 봐야 한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의 대책으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논문에서 지적했듯이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결정에 따른 집행기관으로의 역할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결의 방안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리더십 배양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었는데 현재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속에 청소년문제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이러함의 원인은 지방정부가 당면한 한계로 재정 분권화로 인한 예산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두 번째,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기관의 중복성과 프로그램 집행기관 또한 중복되고 있음으로 자원 낭비와 효율성, 효과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갖

게 한다. 이러한 한계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나타난다.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결벨트모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학교임으로 교육적 입장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청소년의 문제를 비행, 탈선의 사회문제로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정책결정, 집행기관의 혼란은 더욱 심각한 형태로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내의 다양한 자원의 참여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의 방향을 세 가지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 측면이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지역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고령화사회문제중 하나는 농촌지역의 현상이다. 그중 특이한 현상중 하나가 조손가정이 도심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안정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문화 환경의 부족이다. 이는 언론 및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문화와 지역 내 보유하고 있는 문화의 차이로 인해 막연한 동경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내에 청소년들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만한 충분한 공간, 시간의 부족이다.

둘째, 공급자원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청소년 문제의 접근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는 교

육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지역기관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는 접근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와 지역복지관, NGO등 자원네트워크를 통한 인프라구축의 요구된다. 재정분권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산부족은 사회복지축소, 위기현상으로 복지다원주의를 요구로 공급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생산적형태의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도 복지적 측면으로의 접근을 위해 지역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공급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자율성의 측면이다. 청소년 문제를 위한 실행기관의 자율성과 청소년 스스로 참여,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실행기관의 지원과 집행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이다. 자원의 공급기관으로 인해 집행기관은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의 문제는 이러함에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은 요청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청소년 지도자양성을 권 경주 교수님이 밝히고 있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지방의 상황과 자원의 공급, 참여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충남 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

하주현 | 건양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접어들면서 우수 인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영재의 지적 능력과 재능을 계발시킴으로써 그들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는 공헌도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한 사람의 인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수만명,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이제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재 선발 및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영재 교육 또는 수월성 교육에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15%의 학생에게, 영국은 5~10%, 싱가포르 1%, 호주는 1%, 이스라엘 3%, 대만 1%, 러시아 1%의 학생에게 영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대상 학생은 04년도 기준으로 0.3%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2000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공포되고 난 후 2002년도에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영재교육을 포함하여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이 발표된 바 있으며,

2010년까지 전체 5%의 학생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 지역마다 미래인재 양성에 주력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특목고를 육성하여, 이들이 후에 지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남지역의 미래인재를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제 모색을 하는 이 자리가 매우 뜻 깊고 의미 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 언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충남 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론자는 김 언주 교수님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본 논문을 읽고 토론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지적하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영재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2년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을 담은 '영재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관한 권장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 제시된 영재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대상자의 창의적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고 도덕성을 함양한다.

둘째, 영재교육대상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최대한으로 계발한다.

이외에도 영재교육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재교육의 목표를 종합해 보면,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신장,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태도 함양, 도덕성·사회성·지도력의 계발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에의 공헌으로 요약할 수 있다(박성익 외, 2003). 이는 일반학생을 위한 교육목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영재교육에 있어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 자기력의 계발이 더 많은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충청남도의 영재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과 교육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

둘째,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 및 성취 욕구를 충족한다.

충청남도의 교육목표가 국가적 영재교육의 목표와 차이점이 있다면 창의적 과학영재를 양성하는데 특화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영역의 영재를 선발하고 양성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때 과학영재에 한정해 교육의 목표를 삼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군들이 충남에서 배출되어야 지역의 발전이 소홀히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영재만이 아니라 인문영재의 양성은 지역의 미래에 대한 꼭 필요한 투자가 될 것이다.

2. 영재교육의 시행 및 운영계획

표1.에 의하면, 학급 수준에서 영재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는 충남 전체 모두 3곳으로, 초, 중, 고 각 1개교씩이다. 또한 지역 교육청 소재 영재교육원은 모두 7곳으로, 천안교육청, 논산교육청, 서산교육청, 보령교육청, 부여교육청, 홍성교육청, 예산교육청 등이며 이외에 충남교육청 영재교육원으로 충남 과학고가 있다. 대학수준의 영재교육원은 공주대학교에 있다. 그러므로 충남의 시군 지역분할을 미루어볼 때 아직까지도 영재교육선발 및 교육이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특히 영재선발에 대표적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 특목고의 경우, 04년도 기준을 전국적으로 모두

표 1. 충남 영재교육 추진계획 총괄표(2005)

구 분	기관수	학급수	학생수	강사수	연수인원	대상학생	개설과목	운영예산
2005 계획	학급	3	37	640	150	-	초, 중, 고 전체	620,380,000원
	원	8	31	620	127	120	초, 중 수학, 과학	
	대학	1	24	260	50	-	초, 중, 고 수, 과, 정보	
	계	12	92	1,520	327	120	초, 중, 고 -	
2003 실적	4원	13	238	60	29	초, 중, 고	수, 과, 정보	344,198,000원
2004 실적	4원	14	280	60	41	초, 중	수학, 과학	573,841,000원

118개의 학교가 있으며, 충남에는 현재 충남과학고등학교 1개교만 있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예술고와 정보고 각각 1개교씩만 개소될 계획이 있어서, 영재학교의 수가 타도에 비해 현저히 적다. 보다 더 많은 영재학교를 개소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충남의 영재학교출신의 영재들은 충남이 고향이 아니더라도 제 2의 고향이 되어 충남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영재육성을 위한 전략

김연주 교수님이 제시하시는 "영재육성을 위한 10대 전략"은 충남의 영재교육에 꼭 필요한 제언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본 토론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현재 교육청과 공주대학교 영재교육원 주

체로 이루어지는 영재교육은 그 내용이나 대상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참여대학의 확대, 연구소, 기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에 의한 영재교육을 통하여 영재교육의 질과 양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영재교육을 시행하는 주체 간에 역할 분담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각의 역할 분담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도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며, 초·중·고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영재교사 연수를 실시하며, 연구소 및 연구기관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영재교육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재량활동 시간이나 방과후 활동 시간, 또는 주말프로그램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시군별로 영재

교육의 선발 및 교육이 모두 제공되지는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딴 지역의 학생들이 재량활동시간이나 주말에 영재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생들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사이버 영재교육 운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방학 중 영재교육 캠프가 확대되어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영재교육의 영역을 과학뿐만이 아니라, 예술, 언어, 창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또는 특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배출된 다양한 분야의 영재들은 곧 우리나라를 이끌 인재가 될 것이며, 이는 충남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영재교육에 있어서 창의력 교육이 중시되어야 한다. 2002년에 마련된 “영재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 기준”에서는 창의력 교육이 영재교육의 지향해야 할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충남의 영재교육은 창의력 교육보다는 교과 중심의, 특히 수학 및 과학 분야에만 치중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창의적 사고는 서로 다른 내용 영역이나 지식 영역의 틈새에서 생기거나 어떤 것을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에 생긴다. 21세기가 지식기반사회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미래의 인재들에게 무엇보다도 통합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방식을 계발케 하는 창의력 교육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풍토가 마

련되어야 한다. 영재교육의 성공 여부는 수행하는 교사에게 달려있다. 교사는 성공적으로 영재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테크닉, 그리고 소명의식을 지녀야 한다(김홍원, 2002).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안하고 있는 “2005 영재교육 시행계획”에 의하면,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는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국내연수의 경우는 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국외연수는 2005년도에는 계획에 있지 않다. 선진의 국외 우수한 영재교육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접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임이 분명한 데, 오히려 우수한 교원양성에 대한 지원 풍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수한 교원양성에 대한 행·재정적 여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토론자에게 충남 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신 김 언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충남의 도시 4_ 청양군

Cheongyang-Gun



요즘 청양에 가면 “하늘 빛, 땅 빛, 물 빛 모두 아름다운 청양으로 오세요”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다. 청양은 과거 한때 구봉광산, 삼광광산 등 광산이 개발됨에 따라 인구가 십만명 이상에 이를 정도로 번창하였지만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정부의 각종개발정책으로부터 소외됨에 따라 오늘날 충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낙후된 지역의 현실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주민이 인근 대도시로 떠나게 됨에 따라 지역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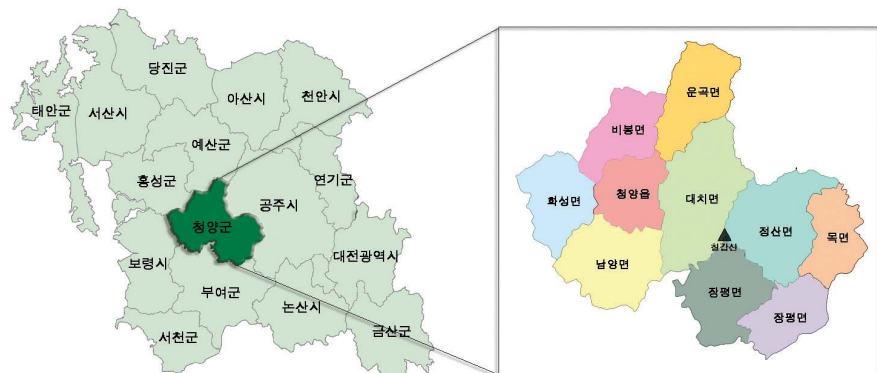
최근에는 이러한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금까지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인식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문구로 대표되는 그린-컴(Green Come)운동이다. 그린-컴 운동과 더불어 최근 자립형 지방화를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도읍육성사업과 신활력사업,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수혜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청양군은 더 이상 낙후지역이 아니라 누구나 찾고 싶은 청정지역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충남의 도시4_ 청양군

Cheongyang-Gun

청양의 일반현황

청양군은 충청남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동쪽은 공주시, 서쪽은 보령시, 남쪽은 부여군, 북쪽은 예산군과 인접해 있으며 광역적으로 대전시의 사회 경제적 영향권에 포함된다. 동서길이가 약 32km, 남북길이가 28.5km로서 전체적인 모양새가 '山' 자 형태를 가진 청양군의 면적은 479.57km²로서 충청남도에서 5번째로 작다. 행정구역은 1읍(청양읍) 9개면(운곡면, 대치면,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권은 칠갑산을 중심으로 남동부의 정산지역과 북서부의 청양지역으로 나뉘어진다.



청양군 위치도

청양군은 전체면적의 64.8%가 임야지역 일뿐만 아니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충남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해 충남의 지붕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양군은 충남의 알프스로 불려진다. 또한 청양은 내륙에 위치하여 사계절이 뚜렷하고 같은 위도상의 해안지역에 비해 겨울기온이 낮고 기온의 연교차가 큰 내륙성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고추, 구기자, 메론 등 특산물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청양군의 하천은 주로 칠갑산, 오서산 등 차령산맥의 지맥에서 발원하여 금강본류나 지류, 무한

천 수계로 유입되고 있다. 즉, 청양군내 모든 수계는 지역내 산지에서 발원하여 타 시군으로 흘러가며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하천은 전혀 없다. 이러한 수계적 특성과 함께 지역내 대규모 오염원이 없어 청양군의 하천은 청정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청양군의 인구는 37,194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규모의 약 2%를 차지하며 1990년 이후 연평균 2.68%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인구구성비를 살펴보면, 노년층의 구성비가 23.2%로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더구나 고령화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업체수 기준으로 살펴본 청양군의 경제규모는, 지난 7년간 연평균 0.1% 감소하였고 고용자수는 1.2% 감소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 청양군의 산업구조는 농가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55%로서 전국 평균의 5배를 넘고 있어 전형적인 농업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청양을 대표하는 지역특산물로는 고추와 구기자, 메론 등을 들 수 있다. 고추의 경우 생산량이 연간 2,210톤으로 충남 지역 생산량의 12.9%를 차지하며 밤낮의 일교차가 큰 지역의 기후특성으로 인해 매운 성분 함량이 높고 감칠맛이 나는 등 상품성이 높아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구기자는 전국 생산량의 약 70%가 청양에서 생산되어 지역내 고추 구기자 특화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양은 구기자 생산 유통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양메론은 당도가 높고 맛과 향기가 좋을 뿐 아니라 과육이 많고 부드러운 일본으로 수출될 정도로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청양 고추



청양 구기자



청양 메론



청양군 문화·관광자원

청양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개(국보 2개, 보물 7개, 중요민속자료 1개), 지방지정문화재 13개 등 총 38개 문화재가 분포해 있다. 197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칠갑산은 차령산맥의 잔구(殘丘)로서 주변지역에는 명승과 명찰이 많으며 충청남도의 알프스로 불린다. 칠갑산은 높지 않고 면적도 넓지 않은 편이나 골이 깊고 숲이 우거져 지역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칠갑산 주변에는 장곡사, 지천구곡(之川九曲) 삼형제봉(三兄弟峰) 장곡사(長谷寺) 정혜사(定慧寺) 두륜운성, 1979년에 만든 인공 저수지인 천장호(天庄湖), 칠갑산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명소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청양군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고추와 구기자의 대외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칠갑산 장승문화 축제와 칠갑문화제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화합과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청양군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

첫째, 농촌지역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은 자연생태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도시와 대비되는 공간 또는 지역사회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수준의 향상, 주5일 근무제의 확대,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일반 국민의 농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즉, 기존에는 낙후된 공간, 식량공급처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휴양공간, 생산공간, 생활공간이라는 인식 전환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농촌여메니티(amenity) 자원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농촌여메니티 자원은 청정한 자연환경,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원 풍경으로서 농촌경관, 특산물, 경작지 경관, 역사적 기념물, 문화적 전통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유 무형의 자원을 의미한다. 최근 여가관광시장의 확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농촌여메니티 자원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어 이는 지역활성화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셋째,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고속교통망의 확충, 노동중심의 가치관에서 여가중심의 가치관으로의 변화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해 국내 관광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태적 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웰빙 중시 추세로 전원생활 선호 및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와 연계된 농촌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청양군은 농촌관광 목적지로서의 매력도가 증진되었다. 또한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공주-서천 고속도로, 대전-당진 고속도로, 공주-보령 고속도로 등이 개통될 경우 청양군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첨단산업 등 새로운 산업의 입지공간으로서의 가치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이다. 청양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최인접 배후지역으로서 도시개발의 파급효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지역의 세력권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흡입되어 오히려 지역이 위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양군은 충남에서 가장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청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미지를 활용하여 5도2촌의 최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마케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충남의 도시4_ 청양군

Cheongyang-Gun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최근 청양군은 낙후지역 육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신활력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정부정책의 수혜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최근의 지역개발정책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발전전략, 투자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전략,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상향식 계획 수립, 혁신주도형 계획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모든 사업들이 고추 구기자로 대표되는 지역의 고유자원과 청정한 지역이미지를 계획의 주요 테마로 설정하고 있어 내생적 발전전략과 선택과 집중전략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청양군에서는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그린-컴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사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양고추 명품화를 위한 청양군 신활력사업

청양군은 낙후지역의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생동감 있는 활력지역을 만들어 전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정된 신활력지역(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상의 낙후지역)으로 2004년에 지정되었다. 청양군 신활력사업은 지역특성에 부합되고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여 소득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원칙에 의거하여 지역혁신협의회 등 관련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청양군 신활력사업에서는 지역농업을 중심으로 산 학 연 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혁신체계(RIS) 확립과 청양을 대표하는 7가지 농산물(청양고추, 구기자, 메론, 토마토, 밤, 표고버섯) 중에서 청양고추를 명품화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청정농산업과 그린투어리즘의 메카 청양』실현을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

청양읍은 도시와 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배후 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담당하는 소도읍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005년에 선정되었다. 청양읍 종합육성계획은 선택

과 집중 전략에 의해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첫째,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청양의 전략산업인 고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기 위한 청양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 둘째 고추 구기자의 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고추 구기자 특화시장 기능 강화사업, 셋째, 충남 최고의 산림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푸른 청양 가꾸기 사업이다.



고추문화마을 전경

서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청양군 정산면 서정권역은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한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으로 2004년에 지정되었다. 서정권역은 하늘아래 최고의 청정성을 지닌 마을로서 청양군의 이미지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하늘빛 땅빛 물빛 마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낙후한 지역여건을 재해석하여 ‘4개의 최고와 2개의 최저가 함께 있는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4개의 최고란 ‘가장 높은(最高) 하늘’, ‘가장 오래 동안(最古) 농촌성을 간직한 마을’, ‘최고(最高)의 건강식 콩이 그득한 마을’, ‘가장 매운(最高辛) 고추’를 의미하고 2개의 최저는 ‘가장 오염이 적은(最低) 농촌마을’, ‘가장 도시성이 적은(最少) 농촌마을’을 가리킨다.

청양군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소도읍 육성 사업	청양고추 문화마을 조성사업	•체류형 주말농장 조성 •전시·홍보관 조성 •고추테마공원 조성 •그린투어리즘 네트워크 허브 구축
	청양시장 활성화 사업	•웰빙먹거리 장터 조성 •고추·구기자 기능 강화 •상인 역량 강화 및 세계 매운 맛 먹거리 축제 개최
	푸른 청양 가꾸기 사업	•우산 생태숲 조성 •지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 •경관가로 조성 •아름다운 지붕경관 가꾸기 및 벽면·옥상 녹화
신활력 사업	RIS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청양고추연구센터, 청양고추 포럼 등 지역혁신조직 운영 •지역혁신위크샵, 벤처농업인 육성, 농촌관광경영인 양성, 청양아카데미 운영
	파워 7갑 청양고추 명품화	•친환경 재배 시스템 구축, 청양고추 품질표준화 및 품질관리 등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고춧가루 생산 현대화, 매운맛 등급별 고추장 개발, 청양 특산물 함유 고추장 개발 •파워7갑 공동 BI 개발, 포장재 디자인 및 홍보판촉물 제작, 청양고추 홍보·마케팅 •Green-Come 운동전개, 도농교류 확대, 농촌관광상품 개발
마을 종합 개발 사업	자연환경 보전계획	•하천재해방지시설 조성 •수변공원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청소년 체육시설, 장승공원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쉼터 조성 •산책로, 꽃길, 주차장, 마을연결도로 보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방문자 센터 조성 및 전통문화체험관 리모델링 •가재체험장, 웰빙체험농장, 장류가공시설, 구기자 체험관 등 체험시설 조성 •표고톱밥배지재 배사 조성 •대나무 낚시터, 어린이 동물체험장 조성 등
	지역 혁신역량 강화사업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 •친환경재배기술 교육 •권역내 정보화 및 권역종합안내시스템 구축
	기 타	•세부설계비 및 사업관리비 등

그린-컴 운동

그린-컴이란 포근한 시골 정취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청양으로 오세요’ 라는 뜻이다. 청양군에서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득과 활력을 되찾게 하고 동시에 『그린-컴 청양』이란 지역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이 운동을 군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청양군에서는 그린-컴 운동의 일환으로 도시와 농촌(APT단지, 부녀회, 기업, 학교, 각종 사회단체 등과 청양군 마을)이 짝을 짓는 ‘1마을 1도시 자매결연 맺기 운동’을 포함해서 ‘청양그린투어의 날’ 운영, ‘학생 그린투어체험’ 참여, ‘출향인 가족 고향찾아보기 운동’ 전개, ‘내고장 친환경 농축산물 가꾸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 컴 로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재정립되면서 농촌성과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또한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장 농촌다운 농촌의 특성을 보유한 청양군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울러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대전-당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광역적 접근성 개선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발전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이다. 청양군이 이러한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재 진행중인 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말 그대로 ‘하늘 빛, 땅 빛, 물 빛 모두 아름다운 청양’으로 거듭나 낙후지역 활성화의 모범사례(best practice)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생태영농탐방

생태산촌 시범마을 으랏차차! 명달리!

유병연 | 대전충남녹색연합



2005년 11월 12일 생태산촌만들기모임에서 주최하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아를 마을 가꾸기, 산촌개발사업 준공식에 참여하였다. 명달리는 1,200ha의 면적에 약 15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한국의 산촌지역이다. 명달리 면적은 다른 마을보다

넓으며, 사방이 산이고 농토(86.9ha)가 적은 관계로 주로 산을 이용하여 벼짓과 잣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약70호가 정도가 살고 있으며, 이 중 20호가 정도는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되고, 50호 정도가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형 마을이다. 명달리는 가평군 청평과 강원도 홍천군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있

며, 통방산, 중미산, 유명산 줄기에 있는 산속 해발 660m 정도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다. 양평 시내에서는 약40km 떨어져 있으며, 서울과의 거리는 차량으로 약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 거주하는 생명의 숲 국민운동 유영민국장은 서울로 통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대전에서는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양평군은 남한강과 북한강을 허리에 끼고 높은 산과 어우러져 있는 계곡으로 그 자체가 수도권 시민의 젖줄이자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다. 그 만큼 양평군은 일찍부터 “맑은 물 사랑 친환경 농업”이란 구호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친환경 농업의 선두주자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양평군 역시 우리나라가 최근 40여 년 간 지속적인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져왔고, 그 중심에는 수도권의 비대화란 물결 속에 흘러들었다. 그 결과 국토의 불균형적인 발전과 반환경적인 개발을 동시에 이루어 졌다. 그 속에서 양평군의 개발의 수요는 증대되었고, 반대로 수도권 주민의 식수인 남한강과 북한강 그리고 산촌에 있는 계곡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은 증대되었다. 또한 수도권 주민의 휴식처로서 양평군의 가치는 증대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마을 주민들의 열정과 의지 그리고 생태산촌만들기모임의 협력을 바탕으로 명달리 생태산촌마을이 탄생되었다. 명달리 생태산촌 시범마을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5월부터 2001년5월까지 실시된 “양평산림비전21” 수립 용역 추진과정에서 명달리를 녹색관광을 테마로 하는 생태산촌 시범마을로 조

성 할 것을 제안 하였고, 지역주민과 양평군 그리고 생태산촌만들기모임은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 명달리를 생태산촌으로 조성 하는 것에 큰 합의를 보았다고 하였다. 2001년 9월 명달리 주민을 주축으로 하는 서종면 생태산촌추진 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명달리 생태산촌 조성 계획이 하나씩 추진되어 가시화되었다. 양평군 후원으로 명달리 생태 산촌 조성 사업 기본 계획 및 설계 (2001.07.27-2002.02.25)가 이루어져 명달리 사업의 기본 방향과 전략,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제시되었다. 그리고 명달리 생태산촌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명달리 지역주민들과 생태산촌만들기모임, 양평군은 정부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를마을가꾸기사업의 대상지역으로 확정(2001.12)되었고, 환경부의 자연생태보존우수마을 지역으로 선정(2002.02) 되었으며,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2002.02)되었으며, 행정자치부 정보화시범마을(2002.06)로 선정되었으며, 아를마을가꾸기사업, 산촌개발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 2,530백만원을 투입하여 환경교육센터 등7종, 오수처리시설 등8종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현재 명달리에 갖추어진 기반시설은 생태산촌환경교육센터(교육강당 등), 마을정보센터, 공동숙소(50인수용), 마을회관, 등산로, 숲체험로(산책로), 임도, 오수처리시설(3곳), 야외화장실(3세트) 등이 갖추어져 도시민이 이용 하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기반시설이 되었으며, 친환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생태산촌 환경교육센터는 주민

생태영농탐방

복지센터, 산촌체험센터, 환경교육센터, 컨벤션센터라는 크게 4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명달리 생태산촌 환경교육센터 자리는 원래 서중초등학교 명달분교였으나, 2000년에 폐교되어 방치되었던 것으로 명달리 주민들이 교육청으로부터 부지를 임대하여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양평군으로부터 정부지원사업(아름마을가꾸기사업)을 유치하여 지금의 생태산촌환경교육센터로 리모델링 하여 교육관, 후생관, 야생화 정원, 잔디광장, 야외교실, 운동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내활용40명, 야외활용100명 내외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추었다. 또한 생태산촌환경교육센터내에 행정자치부의 정보화시범마을을 유치하여 마을주민의 정보화교육을 통해 도농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산물의 온라인 판



매망을 구축하고, 마을을 홍보 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마을 정보센터 내에는 컴퓨터 10대, 복사기, 프린터, 빔프로젝트,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이 비치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생태산촌환경교육센터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공동숙소가 있는데 대지 300평에 건평60평, 건물2동에 방4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실, 샤워실, 썬크데가 설치되어 약40~50명이 수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마을회관은 마을주민이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의 마을지원사업으로 건설되어 마을주민의 공동행사, 회의, 노인경로당, 캠프 학생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지200평, 연면적 50평의 2층 건물로 방4,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정원, 정자,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등산로에는 중미산, 통방산을 중심으로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사철 등산객이 내방하고 있으며, 처음 찾는 등산객을 위하여 마을입구에 등산로를 찾지 못해 헤메지 않도록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게 하여 마을주민들의 세심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고려하여 오폐수시설을 설치하여 다른 농촌마을과 차별성을 두었으며, 야외화장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

명달리의 특산물은 산촌의 특성상 특산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일부 품목은 자가 소비용으로 생산하지만 친환경 무농약 우렁이쌀, 표고버섯과 표고버섯가루, 잣, 산더덕, 도라지, 산채, 한봉꿀, 도토리가루 등이며 특히 친환경 무농약 우렁이 쌀은 안전한 먹거리와 상수원 보호로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현재 양평군에 의해 권장 받는 친환경 농업



△ 마을정보센터

△ 준공식

이다.

끝으로 명달리의 발전 가능성과 위기의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장점으로서는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이다. 주민 조직으로는 영농조합법인, 개발위원회, 정보화시범마을추진위원회, 노인회, 부녀회 등이 있으며, 특히 영농조합법인은 명달리 생태산촌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주민 공동사업을 주관하기 위해 2001년에 설립하여 현재 마을 주민 40여명이 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정부지원사업(아름마을사업, 산촌개발사업)주관, 센터운영 관리, 장뇌삼단지 관리운영, 체험프로그램운영 등을 있으며, 참여하는 주민은 일정한 조합비를 납부하여 마을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이윤을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조례(정관)를 만들어 놓고 있다. 또한 잘 갖추어진 자연환경과 수도권과의 인접성, 친환경 농업실천 등이 주5일제와 여가, 건강식을 찾는 웰빙 등과 더불어 정부지원이 기획의 요소라면 위기의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다. 우선 부채지주들이 늘고 토지의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외지인

의 주말별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마을주민스스로의 기획, 운영, 프로그램 부족 등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외부로부터 계속되는 환경파괴는 결국 잘 갖추어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며, 최대의 위협요인이다. 결국 명달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스스로의 운영능력을 높이고, 외부의 간섭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로 보았다. 외부의 간섭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 결과에 집착하여 빠른 성과를 기대 한다든지, 외부의 돈이 투입되어 부채지주를 늘리거나 무분별한 전원별장을 신축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내부적으로도 자생능력을 키워 소득을 높이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주민의 합의와 의지를 모으고, 정부와 민간단체,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이 부여된다면 앞으로도 명달리는 생태산촌시범마을로 유지될 것이다.

일본의 중심상점가 활성화

임준홍 | 도시지역연구부 책임연구원

중심시가지의 노후화와 교외개발의 메카니즘 속에서 일본의 중심시가지는 침체와 쇠퇴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부터 「중심 시가지에 대한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에 근거하여 연간 1조엔의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등 관련 부처들과 TMQ(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차원에서 총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심상점가의 쇠퇴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본의 중심상점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중심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요코하마의 상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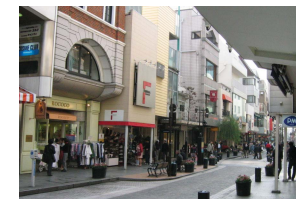
1) 세련된 여성들의 모이는 모토마치 상점가

모토마치(元町) 상점가는 마치 세련된 상점가를 걷는 듯하다. 아니 백화점을 쇼핑한 듯한 느낌이다. 모토마치 상점가는 일본에서 서구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요코하마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인접한 외국인 주거지 "야마테(山手)"의 주민이 주로 이용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패션잡화 중심의 전문 상점가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국제도시 요코하마를 목표로 추진된 「미나토미라이 21(みなとみらい21)」계획에 따라 정비되면서부터 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8M도로에 접한 건물의 1층 부에 1.8M정도 셋백(set back)시킨 필로티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세련된 설계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였다.

특히, 「마찌즈꾸리(まちづくり)협정」을 통해 건물의 형태·용도, 주차장 정비 등이 이루어졌으며,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전문점 위주의 업종 재편, 주변지역과의 일체화, 홍보 및 육성 등을 통해 모토마치만의 고유한 특성을 연출하였다.

그리고 사업은 주민참여에 의한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유지관리는 주민자율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토마치의 어제와 오늘

2)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이세자키물

2차세계대전 이전의 이세자키(伊勢佐木)물은 크고 작은 상점과 백화점, 극장, 영화관 등이 빼곡히 들어선 일본에서도 유명한 번화가였다. 그러나 전후에는 오락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전쟁으로 많은 상점들이 파괴되면서 예전의 번영했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대부분 미 주둔군의 병영시설로 사용되었다.



이세자키물의 어제와 오늘

그 후, 이세자키물이 다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바로, 아오에미나(青江三)씨가 작곡한 "이세자키쵸 블루스"가 히트하면서부터이며, 1951년경 병영시설에서 해제되고, 그 후 향축제나 국제가장행렬축제 등의 부활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1970년 요코하마 최초로 특정시간(오후1~7시)에 보행자전용도로제를 실시하였고, 1978년부터는 24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행자전국 쇼핑물이 탄생하였다.

해외보고서

3) 이국적인 풍이 있는 바샤미치 상점가

옛날에 마차가 다니던 길이라는 뜻의 바샤미치(馬車道)는 역에서 나오면서부터 그 역사를 짐작할 수 있다. 현대식 역의 벽면에는 일본의 개항과 더불어 형성된 바샤미치 상점가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벽화로 수놓아져 있다.

그리고 바샤미치에 들어서면 현립역사박물관, 도쿄예술대학대학원 등 독특한 건물들과 특색 있는 가로 장식물(street furniture)을 만나게 된다.

상점가는 「바샤미치 상점가 협동조합(1985년)」을 중심으로 연 6회 정도의 다양한 축제들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아이스크림이 최초로 판매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9일을 아이스크림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하고, 10월의 바샤미치 축제 때에는 재즈 콘서트, 야외체스 등의 이벤트가 열리며, 실제 바샤미치의 유래를 느낄 수 있도록 마차를 직접 운행하고, 시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합은 개항 당시 상점가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42조항으로 구성된 「바샤미치 마찌즈꾸리 협정서」를 책정하여, 가로의 확폭, 가로수, 건축물, 광고판 정비 등의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바샤미치 명물만들기"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부터는 「마찌즈꾸리 위원회」를 발족시켜 「올드타운 바샤미치」를 테마로 2002년까지 정비계획을 실시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국적인 풍을 느낄 수 있는 바샤미치

40만의 유동인구를 가진 무사시노시의 나카미치도오리 상점가

무사시노시(武蔵野市)는 도쿄 신쥬꾸(新宿)로부터 남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인구 13만의 전형적인 위성도시이다. 인구 13만의 베드타운인 무사시노시가 하루 40만명의 유동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힘은 교토와 같은 역사적 관광자원의 힘이 아니라 중심상점가에 있다.



무사시노시 지역경제과 인터뷰

무사시노시 지역경제의 거점이자 심볼인 키치조지역전 나카미치도오리(吉祥寺駅前・中道通り)는 도쿄권에서도 상점가 최대유입인구를 자랑한다. 그 이유는 높은 인구밀도와 편리한 교통망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며 상점가를 걸으면 또 다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역주변에는 대형쇼핑건물과 주요 금융기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30년전부터 실시한 도시계획사업을 통해 역전광장과 상점가 주변시설이 정비되어 있다.

키치조지역과 연결되는 나카미치도오리 상점가는 풍부한 먹거리와 깨끗하게 정비된 천정과 보도블록, 각양각색의 점포들과 영화관, 미술관, 도서관 등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거리이다.

상점가의 천정은 자연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야간에는 천정의 천막이 스크린의 역할을 하여 프로젝트를 비추면 멋진 장면을 연출하는 FLAP SYSTEM 역할을 하고 있어, 상점가를 찾는 고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길을 잃거나 색다른 것이 먹고 싶을 때에는 안내소 직원의 따뜻한 안내나 전자지도로 원하는 식당정보를 프린트하여 찾아갈 수 있다.



상점가 안내소와 전자정보 시스템



상점가 금연구역 마크

또한, 휴먼스케일로 설계된 상점가는 이용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도쿄도(東京都)의 「번화가이용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동경도내 11개의 번화가 가운데 「친근감이 넘치는 거리」, 「풍부한 먹거리」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TV와 매스컴에서도 자주 등장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점가협의회가 주체로 된 「상점가변영회」와 무사시노시의 지속적인 상점가 활성화 노력의 성과이다. 실제 상점가의 정비에 필요한 총 공사비(96억원 정도) 가운데 무사시노시가 10%, 국가가 10% 그리고 나머지의 80%는 「상점가변영회」가 부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해외보고서



중심상점가와 연결된 또 다른 상점가

중심상점가를 지나서 또 다른 작은 상점가에 이르면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안테나숍(アンテナショップ) 밀짚모자(麦わら帽子)"라는 상점이다. 지역특화 농업이 없는 무사시노시는 1972년부터 다른 도시와의 교류와 우호관계를 중시하고, 지역교류를 통한 물자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 단편적인 예가 자매도시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20여평의 안테나숍이다. 이 상점은 규모는 작지만 교류의 장으로, 무사시노시와 상점가를 알리는 홍보의 장이 되고 있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히라츠카시의 펄로드 상점가



히라츠카시의 위치

히라츠카시(平塚市)는 도쿄에서부터 남서방향으로 약 60Km 떨어진 카나가와현(神奈川県)에 위치하고, 바다와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인 인구 26만명(2005년)의 도시이다.

히라츠카시의 펄로드(パールロード)상점가는 세계 2차대전을 전후로 의류품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1955년 최고 번성기에는 상권인구 60만인의 상업력을 자랑하는 도시였다. 그러나 1965년 이후 상점가의 노후화와 주변도시의 성장으로 상권 축소와 함께 침체의 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에 1984년 「중심도시만들기 계획-선라이즈히라츠카21(サンライズ平塚21)」의 책정과 「5개년계획」의 실시로 일시적인 이용객의 증가와 상권회복의 기미를 보였으나 주변도시의 성장과 대형점 등 영향으로 다시 침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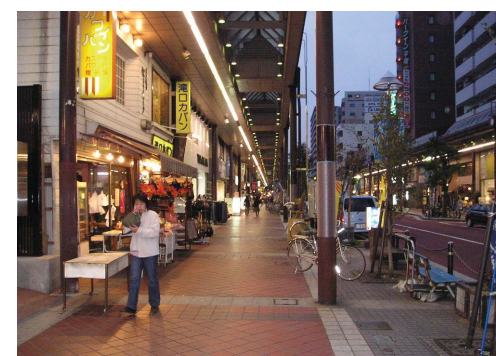
TMO 챌린지숍

이에, 히라츠카시는 1996년에 「상업도시 히라츠카시의 복권」을 위해, 「상업활성화 비전 책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상업진흥의 과제와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7년에는 「특정상업직접정비 기본구상책정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업직접정비를 검토하였고, 1999년에는 카나가와현 최대급 쇼핑센터를 오픈하였다. 그 후, 2001년에는 중심시까지활성화법에 근거하는 「히라츠카시 중심까지활성화 기본계획」을 책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2002년에는 「히라츠카TMO구상」을 책정하였으며, 2003년에는 TMO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챌린지숍(チャレンジショップ)」을 개점하여 상점가 안내지도와 팸플릿 제작 및 배부 등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히라츠카시가 중심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마찌즈꾸리 정비사업(1997년)」에서는 히라츠카시에 어울리는 공간창출과 정비의 방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중심까지활성화 기본계획」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관·민이 함께 각종 시책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실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중심상점가에 바라는 양케이트 조사(1999년)」를 실시한 결과, 「대형판매점의 유치」를 47.8%로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판매품목의 재정비」가 44.4%, 「주차장시설 확충과 정비」가 37.4%, 「포인트카드제도의 도입」이 6.2%로 나타나 알뜰 이용고객의 분포가 많음을 엿볼 수 있다.



히라츠카시 중심상점가

해외보고서

거 지하주차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일부는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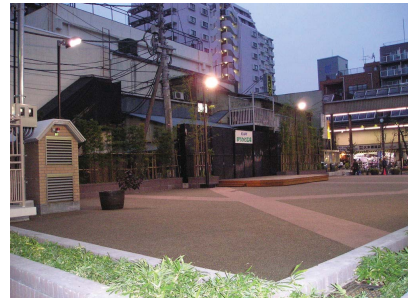
히라즈카시의 펄로드 중심상점가 활성화에서 특징적인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TMO에 의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행정, 전문가, 상인,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길모퉁이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주변공원과 연계한 가로녹지의 정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길모퉁이에 조성된 광장(まちかど広場)은 평상시에는 상점가 이용자나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축제 때에는 축제의 장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이 광장은 상점가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설계되고 정비·관리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광장에 대한 애착과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마찌카도 광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정비프로그램

제 1 기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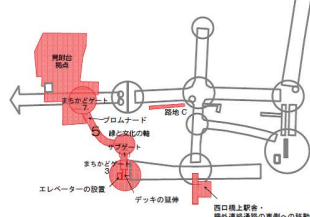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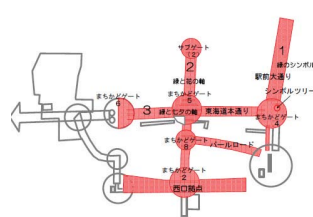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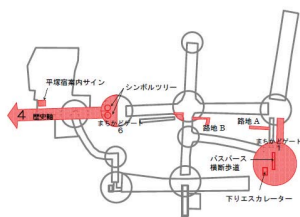
- 지구내 시민협의회 및 조직 활용
- 바리어프리(장애물해제)시설 정비
- 공공공간의 최대한 활용을 통한 비용 최소화

제 2 기 (~2008년)

- 거점정비와 연계한 대책
(공원길, 토가이도선과의 연계등)
- TMO와 연계
- 제1기 정비효과 검토 및 연계

제 3 기 (2009년~)

- 미즈캐다이(見附台)정비와 관련지역의 정비



나가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심상점가는 쇠퇴 배경과 성격 등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중심상점가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처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일본은 중심상점가 상권회복을 위해, 더 나아가 중심시까지 활성화를 위해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는 중심시까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인,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TMO를 조직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정비에 있어서도 보행로 정비 등의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개발, 역사성의 확보 등을 통해 상점가의 역사와 개성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심상점가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며, 침체와 쇠퇴의 정도가 심각한 중소도시의 중심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전무하다. 이로 인해 중심상점가 활성화 관련 사업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단편적인 사업으로 끝나고, 연속성도 담보되지 않고 있다.

중심상점가는 대형할인점, 백화점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 상호 공존하기 위해서는 중심상점가만이 갖는 역사성, 개성, 친인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심상점가의 쇠퇴는 상점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 패러다임의 전환도 수반되어야 한다. 저성장 양극화로 표현되는 지금, 개발주의적 접근으로는 중심상점가, 중심시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글은 충남 시군발전계획 수립의 과정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6일간 일본 출장기록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행정도시 성공요건과 과제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가발전 잠재력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지역적 차원에서 행정도시의 수도권과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행정도시의 건설은 국가경쟁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이요, 미래세대를 위한 21세기 희망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청구가 각하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의 과제는 행정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논의는 주로 세계적인 모범도시를 만드는 도시건설에 한정됐다. 그러나 행정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이란 최소한 다음의 3가지 요건은 충족돼야 한다. 첫째, 세계적인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개발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행정도시의 건설 후 정부기관의 이전과 함께 다양한 경제-사회 중추기관이 이전하여 활력 있는 자족도시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행정도시의 건설로 수도권의 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 같은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행정도시 건설은 성공적으로 추진됐다고 보기 어렵다.

세계적 수준의 모범도시를 계획대로 건설하기 위해 도시설계 국제공모와 함께 행정도시 건설청의 개설 등 체계적인 노력이 전개 중에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도시건설의 일차적 과제는 원활한 토지매입과 주민이주보상이다. 이 것이 순조롭지 못하면 도시건설자체가 착수조차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부재지주의 토지보상과 주민보상은 차별화하고 주민들이 새로운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상과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 같은 약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주민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신뢰기반이 형성돼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정부와 주민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주민의 이주보상은 그동안 전통적 지역사회에 의존해 왔던 주민들이 새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세심한 배려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행정도시 건설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이다. 행정도시 건설 추진은 더 이상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아울러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득과 대화의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과제는 행정도시 계획, 설계 및 건설공사 추진에 있어 전문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 행정도시가 뚜렷한 정체성과 상징성을 지닌 세계적 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일관된 계획논리와 도시건설 기초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비전문가 및 정치성의 개입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도시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설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건설자재와 건설인력 확보 방안 그리고 건설기간 중 2만 여명으로 추정되는 건설인력의 현지 수용방안 등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행정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도시가 인구 30만 내지 50만 명의 자족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정부의 12부 4처 2청이 모두 이전하는 경우 종사자의 총규모는 1만 명 정도이다. 이와 함께 41개의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하면 종사자의 규모는 약 2700명 정도 추가 된다. 이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한 이전 고용규모가 15,000명 정도이고 가족이 함께 이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고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구 30-50만명의 자족도시 형성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족도시의 형성을 위해서는 전국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기능을 정부 및 공공기능의 2-3배 정도의 유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복합기능을 얼마만큼 어떻게

| 오피니언 |

OPINION

게 유지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종사자의 가족들도 함께 이주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인센티브의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이전기관의 가족들은 교육, 문화 및 사회적 관계 등을 이유로 수도권에 잔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금까지와 다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의 성공적이란 행정도시가 행정중추도시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토기반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도시가 국토 중심부의 새로운 행정거점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심성과 집적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이를 위해 행정도시와 주변도시를 연계하여 네트워크 도시군(群)으로 육성할 것을 천명해 왔다. 인구 30~50만 명의 신도시로는 국가중추도시기능의 새로운 중심지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물적 기반과 도시기능을 지닌 행정중심도시 주변도시 물적 기반의 과감한 재정비와 기능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도시와 주변도시간의 격차가 너무 큰 경우에는 수평적 보완관계의 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단독의 힘으로 충청권내 기존도시 재정비가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행정도시의 네트워크 도시군 형성차원에서 주변도시의 재정비와 기능강화 시책을 행정도시 건설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와 충청권은 공동의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써야한다.

두 번째 과제는 행정도시의 건설사업을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수도권 집중억제와 계획적 규제, 지역혁신발전시책과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시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상호 연계된 사업과 시책이 산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추진되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지 못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지방이전의 경우 단순한 도시기반이나 서비스 시설 공급에만 치중해서 안 된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육, 의료 및 문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정책실패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새로운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하여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행정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에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은 국토공간구조의 재편과 균형발전 등 국가적 차원의 파급효과와 함께 대전·충

북·충남지역에 주는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하다. 행정도시가 충청권에 미칠 영향과 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충청권 3개 시·도는 현재의 공조체제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행정도시의 건설로 충청권내 네트워크 도시체계가 형성되는 경우, 충청권 3개 시·도는 기능적 통합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의 대응책과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을 지닌 협력체 내지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충청권 3개 시·도는 공동으로 중앙정부와도 행정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와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충남도 2006년도 國費 3조 2,549억원 사상최대 확보

충남도의 내년도 국비확보규모는 3조 2,549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상 최대규모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수하였다. 이는 지난해 확보액 3조 342억원 대비 7.3%(2,207억원)가 증가한 규모로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금년도는 국가예산편성방식이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으로 각 부처의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이 강화되고 세수 증가가 둔화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해안시대의 새로운 서막을 올리는 보령~안면연육교의 기본설계 완료에 따라 턴키방식으로 공사계약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되고, 충청남도가 부담하여 할 지방도 628호선인 삼성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 1,363억원을 국비('06년도 97억원 확보)로 지원 받게 됐다.

또, 서해안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령~청양간 국도확포장 30억원을 기획예산처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으며, 교통정체가 심한 청양~우성간 국도확포장 40억원, 홍성~청양간 국도확포장 20억원, 대산~석문간 국도확포장 20억원의 신규사업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각고의 노력끝에 확보한 장항국가산업단지 호안도로 사업비 400억원에 대한 국회에 결위에서의 감액방지 등 실로 우리도민이 필요로 하고 시급한 사업이 일시에 해소되고 내실있는 현안사업비를 대폭 증액 반영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크게 앞당기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 외에 국가기간사업으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건설 1,220억원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건설 640억원 ◎장항선 개량 2,200억원 ◎천안~온양온천간 전철화사업 1,000억원 ◎대산항 건설 273억원 ◎남당항 건설 35억원 ◎장항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127억원 ◎천안 4산업단지 진입도로 183억원 ◎인주공단 진입도로 62억원 ◎중부권 내륙화물기지건설 102억원 ◎홍보지구 농업개발 220억원 ◎백제문화권 개발(재현단지,큰길) 149억원 ◎내포문화권개발 87억원 ◎중부권 광역상수도 639억원 ◎금강 북부권 급

수체계구축 252억원 ◎삽교천수계치수사업 338억원 등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대규모 SOC사업들이 대부분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비롯, ◎당진항 공용부두 건설 85억원,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30억원 ◎천안~오창간 고속도로 건설 10억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조성(2개지구) 14억원 ◎온양온천~신창간 복선 전철화사업 10억원등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반영되어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정부예산 주요내역

■총괄

구분	2006년도	2005년도	증감	증가율(%)
계	32,549	30,342	2,207	7.3
국가시행	17,104	16,481	623	3.8
지자체시행	15,445	13,861	1,584	11.4

■국가기행사업 - 59건, 1조 7,104억원

도로분야 20건 7,734억원

· 당진~대전고속도로	1,220	· 공주~서천 고속도로	640
· 논산~전주고속도로	430	· 천안~당진 고속도로	30
· 천안~오창고속도로	10	· 중부권 내륙화물기지(145천평)	102
· 아산탕정T/C진입도로	97	· 천안4산업단지 진입도로	183
· 장항산단 진입도로	127	· 장항산단 호안도로	400
· 인주공단 진입도로	62	· 천안~논산 고속도로유지등	600
· 청양~우성 국도 확포장	40	· 청양~홍성 국도 확포장	20
· 부여~논산 국도 확포장	72	· 일반국도 건설(565km)	3,067
· 보령~청양 국도 확포장	30	· 일반국도 유지관리	543
· 대산~석문 국도 확포장	20	· 전의단지 진입도로	41

철도분야 8건 4,756억원

· 장항선 개량(72km)	2,200	· 천안~온양 전철화(16km)	1,000
· 천안~수원간 2복선화(55km)	236	· 조치원~대구 전철화(158km)	790
· 호남고속철도(258km)	100	· 온양온천~신창전철화(5km)	10
· 철도시설 유지관리	411	· 두계철도건설목 입체화	8

항만시설 10건 1,277억원

· 대산항(8선석)	273	· 당진항공용부두(2선석)	85
· 당진~평택항(암벽10km)	752	· 비인항(방파제)	23
· 오천항(물량장)	17	· 홍원항(물량장)	15
· 외연도 항(물량장)	17	· 삼길포 항(방파제)	35
· 남당항(물량장)	35	· 안흥항(방파제)	25

상수도·하천정비 8건 1,595억원

· 남부권 광역상수도(32천톤)	10	· 중부권 광역상수도(163천톤)	639
· 금강북부권 급수체계구축(1,370천톤)	252	· 삼교천 수계치수(140km)	338
· 금강하천정비(120km)	25	· 삼교천 하천정비(126km)	150
· 금강수계치수(397km)	158	· 금산천 정비(4km)	23

농업기반시설 9건 1,257억원

· 홍보지구농업개발(3,300ha)	220	· 서남해안간척지개발(3지구)	138
· 수시리설개보수(61지구)	460	· 중규모용수개발(7지구)	320
· 농산물규격출하(57천배)	48	· 경영이양직접지불	35
· 농업용수자동화(2지구)	12	· 바다목장화 등	24

행정중심복합도시 1건 453억원

산업자원개발 3건 33억원

· 자카드직물지원센터(1개소)	10	· 자동차부품향상기반구축(1식)	12
· 디젤엔진가스저감시설(1식)	11		

■지자체 시행사업 - 289건, 1조 5,445억원

균특계정 96건 5,019억원

· 국가지원지방도(7지구)	403	· 백제권개발(3건)	157
· 내포문화권개발(5건)	87	· 배수개선(4,988ha)	312
· 농어촌생활용수개발(15개소)	199	· 지방산단 산업용수지원(2개소)	172
· 주거환경개선사업	131	· 천안유통단지 진입도로(2.5km)	50
· 관광지개발(7개소)	60	· 청소년시설지원(6개소)	34
· 농공단지 조성(874천평)	47	· 지방어항시설등개발계정	798
· 대구회경지정리(770ha)	250	· 재래시장활성화(19개소)	129
· 개발촉진지구등 균형계정(9건)	713	· 수해상습지개선등국가계정(8건)	509
·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건립	184	· 지역농업 클러스터조성(2개소)	14
·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 건립(1개소)	22	· 영상미디어산업센터 건립등	748

국고보조 등 193건 1조 426억원

· 의료급여(87천명)	1,452	· 하수종말처리장(56개소)	615
· 하수관거정비(23개소)	407	· 생계·주거급여(85천명)	1,330
· 쌀소득보전직불제	1,203	· 지방이양분권교부세등사업	1,511
· 보육시설(34천명)	455	·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확충	20
·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65	· 산단폐수시설(3개소)	233
· 장묘행정개선(3개소)	214	· 하수처리재이용사업	122
· 위험도로개선(42개소)	100	· 자활근로사업	144
·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59	· 어린이보호구역개선(97개소)	56
· 자연환경정화사업	43	· 문화재보수정비사업등(178건)	2,397

충남도, 수출 400억불 시대로 간다

— 중소기업수출 100억불로 대기업과 동반 성장 —

충청남도는 지난해 開道 이래 처음으로 수출 300억불 시대에 진입한데 이어, 올해에도 수출 400억불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수출진흥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道가 지원하는 주요 수출진흥 사업 내역을 보면 ▲해외시장 마케팅 분야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 참가, 바이어초청 수출상담,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 수출기업구조 고도화 사업, 수출유망상품 홍보,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등 13개 사업에 30억원을 700여개 기업에게 지원하고 4,000억원을 투입,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 및 기술개발지원,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지원 등 수출 400억불 시대를 열기 위해 수출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 진흥을 위해 운영중에 있는 3개 해외 사무소의 통상 활동을 강화하여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어 발굴 연결 및 상품전시 홍보와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해외사무소를 거점으로 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서울통상지원사무소를 통해서도 전자무역을 이용한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수출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게 통·번역, 신용장 개설 등 무역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2015년의 국가 교역 규모가 1조불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충남도의 수출규모도 2010년 700억불, 2015년 1,000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FTA, DDA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道와 수출 유관기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충남도는 지난해 수출 335억불(잠정)에 흑자액이 141억불로 국가무역수지 흑자액 223억불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규모면에서는 세계 230여개 국가와 비교할 때 43위 수준이며, 전국 시·도중 4위로 20년 전 국가 수출액과 대등한 규모다.

충남도는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이 그동안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및 반도체, 자동차, 영상기기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 온 것은 물론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마케팅 등」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2006 전국문화관광축제”로 충남 5개 선정

— 전국 27개 축제중 “보령 머드축제”가 전국 최우수 축제로 지정—

충청남도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2006년도 문화관광축제에 보령 머드, 금산 인삼축제, 논산 강경젓갈 축제,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등 5개 축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었고, 이중 보령머드축제는 전국 최우수 축제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5개의 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1개 축제당 최고 3억원에서 5천만원까지 국비 지원과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아리랑·리빙TV 등 해외조직망을 통해 전 세계에 홍보되는 혜택을 받는다.

한편, 2006 문화관광축제는 전국 대표·유망축제로 27개 축제가 선정되었으며, 우리지역 천안 흥타령 축제는 예비축제로 신규 지정되어 문화관광축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06년도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경우 국비도 지원받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의 문화관광축제가 세계적인 유명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객이 방문지역에서 체류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농가 민박이나 농어촌 휴양시설 등 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등 외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산하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 연구기관 전문분야별 활용, 연구기능 특성화·연구원 POOL제 운영—

충청남도는 6개 산하·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다양한 인적자원과 연구과제·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군정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연구실장 7명으로 자생조직인 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매 분기 정례적 회합을 통해 도·시군정 관련 각종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사전 협의와 함께, 시급을 요하는 당면 현안과제의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각 연구기관의 기능에 맞는 전공분야를 활용 ▲종합연구분야는 충남발전연구원 ▲산업분야는 전략산업기획단 ▲여성/교육/노인분야는여성정책개발원 ▲농업분야는 충남농업테크노파크(T/P) ▲역사/문화분야는 충남역사문화원 ▲환경분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아 각각 연구기능을 특화한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기관은 도·시군 중장기계획수립 등 연구협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구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해 관련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연구역량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원별로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연구원(박·석사 103명)의 인력 pool제를 운영 도·시군 정책추진 자문연구원 및 연구기관간 연구과제 수행시 상호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군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의 네트워크구축으로 시의성 있고 한 차원 높은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네트워크 구축기관은 ▲충남발전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충남역사문화원 ▲전략산업기획단 ▲농업테크노파크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기관이며 연구원(박/석사) 103명이 근무하고 있다.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 발전에 관한 연구논문, 정책제언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www.cdi.re.kr

충남의 문화유산 ②



태안마애삼존불(泰安磨崖三尊佛)

태안읍 바닷가에 바위로 된 백화산 산정 밑에 있는 높이 394cm, 폭 545cm의 갑(龕) 모양의 암벽에 새겼다. 동쪽을 보고 있는 바위면 남북에 각 여래상을 새기고 가운데에 보살을 배치한 특이한 형식의 삼존불이다. 오랜 풍화로 인해 파손이 심하나 대체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북쪽의 여래상은 소발에 작은 육계를 갖고 있으며 얼굴은 둥글고 풍만하다. 두 귀가 크고 길며, 눈은 내려뜨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다. 목에는 아직 삼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몸은 넓은 어깨와 강직하고 장대한 체구를 갖고 있다. 통견의 법의를 입고 있는데 마손되어 잘 알 수 없으나 배의 띠 매듭이나 U형 물결모양의 옷주름이 힘있게 표현되어 있으며 오른손은 끝의 두 손가락을 구부린 시무외인(施無畏印)이고 왼손은 손등을 바깥으로 하여 합같은 것을 가슴 높이까지 들고 있다.

남쪽 여래상은 그 작풍이 북쪽 여래상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수인에 있어 통인을 취하고 있으며 백제 불상의 특징인 끝손가락을 구부린 형태이다.

가운데 보살상은 양쪽 여래상 틈에 끼어 작고 빈약하게 보이는데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손이 심하다. 머리에는 높은 삼산보관(三山寶冠)을 썼고 전면에 꽃장식 같은 것이 보이며, 양옆으로 수식(垂飾)이 길게 늘어져 있다. 역시 목에 삼도가 없고 두꺼운 법의가 아래로 처져 있으며 다리부분에서 X자로 교차하고 있다. 두 손은 가슴까지 들어 올려 오른손은 위로, 왼손을 아래로 하여 보주를 잡고 있다.